

# 노동패널자료 연구(Ⅳ)

-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이경희 · 박문수 · 이상호 · 민인식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자영업자 삶의 만족도 :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비교 ..... (이경희 · 박문수) .....	1
제1절 서 론 .....	1
제2절 자료 비교 .....	2
1. 자료별 만족도 변수 구성 .....	2
2. 만족도 영향 요인 변수 .....	5
제3절 자료별 자영업자 인적 특성 현황 .....	5
1. 자영업자 분포 현황 .....	5
제4절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만족도 비교 .....	13
1. 항목별 만족도 .....	13
2. 만족도 항목 및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	17
제5절 전반적 생활 만족도 분석 .....	20
1. 전반적 생활 만족도 비교 .....	20
2. 표본 특성별 전반적 생활 만족도 실태 비교 .....	21
3.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응답 항목별 변화 .....	27
4. 전반적 생활 만족도의 이행행렬 및 표본이탈 .....	31
제6절 맺음말 .....	37
제2장 가계재정 관련 지표 : 노동패널과 국민계정 및 가계금융 · 복지조사의 비교 .....	(이상호) ..... 39
제1절 서 론 .....	39
제2절 가계재정 관련 지표의 국민계정과 노동패널조사 간의 비교 ·	41

1. 가계재정 관련 종합지표 비교 .....	41
2. 가계재정 정책준거지표의 종합자료 비교 .....	52
제3절 가계재정지표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조사 간의 비교 .....	56
1. 가계재정 조사자료 비교 .....	56
2. 가계재정 정책준거지표의 조사자료 비교 .....	65
제4절 소 결 .....	67
제3장 출산 자료 :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및 재정패널의 비교 .....	(민인식) ..... 70
제1절 서 론 .....	70
제2절 분석대상 선정 .....	71
제3절 KLIPS 합계출산율 .....	74
제4절 합계출산율 비교: 인구동향조사 .....	77
제5절 합계출산율 비교: 재정패널 .....	80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	84
제4장 혼인 자료 :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및 복지패널의 비교 .....	(민인식) ..... 86
제1절 서 론 .....	86
제2절 분석대상 선정 .....	87
제3절 KLIPS 조혼인을 분석 .....	91
제4절 혼인을 비교: 인구동향조사 .....	96
제5절 혼인을 비교: 한국복지패널 .....	101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	108
참고문헌 .....	111
부 록 .....	113

## 표 목 차

<표 1- 1> 자료별 만족도 변수 구성 .....	4
<표 1- 2> 고용형태별 종사자 비중 및 인원 .....	6
<표 1- 3> 2005년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인적 특성 분포 .....	10
<표 1- 4> 2010년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인적 특성 분포 .....	11
<표 1- 5> 2016년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인적 특성 분포 .....	12
<표 1- 6> 자영업자 만족도 수준 .....	14
<표 1- 7> 임금근로자 만족도 수준 .....	15
<표 1- 8> 종사자별 전반적 생활 만족도와외 상관계수 비교 .....	17
<표 1- 9>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전반적 생활 만족도 .....	20
<표 1-10> 노동패널: 자영업자 .....	28
<표 1-11> 복지패널: 자영업자 .....	29
<표 1-12> 노동패널: 임금근로자 .....	30
<표 1-13> 복지패널: 임금근로자 .....	31
<표 1-14> 노동패널 이행행렬(2005년 기준 자영업자 전체) .....	33
<표 1-15> 복지패널 이행행렬(2005년 기준 자영업자 전체) .....	33
<표 1-16> 표본 이탈 빈도 및 비율 .....	34
<표 1-17> 노동패널 이행행렬(2005년 기준 임금근로자) .....	35
<표 1-18> 복지패널 이행행렬(2005년 기준 임금근로자) .....	35
<표 1-19> 표본이탈 빈도 및 비율 .....	36
<표 1-20> 만족도 이행행렬 및 표본유지율 종합 .....	36
<표 2- 1> 가계자산의 합산지표 비교 .....	42
<표 2- 2> 가계자산 총량지표와 합산지표 비교 .....	43
<표 2- 3> 가계부채의 합산지표 비교 .....	45
<표 2- 4> 가계부채 총량지표와 합산지표 비교 .....	46

<표 2- 5> 순조정가처분소득의 합산지표 비교 .....	48
<표 2- 6> 순조정가처분소득 총량지표와 합산지표 비교: 조사 기준 .....	48
<표 2- 7> 순조정가처분소득 총량지표와 합산지표의 조사시점 기준 비교 .....	49
<표 2- 8> 순저축의 합산지표 비교 .....	51
<표 2- 9> 순저축 총량지표와 합산지표의 조사시점기준 비교 .....	51
<표 2-10> 총합지표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 비교 .....	53
<표 2-11> 총합지표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비교(vs. 국민계정) .....	54
<표 2-12> 총합지표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비교(vs. 가계대출) .....	55
<표 2-13> 총합지표의 순저축률 비교 .....	55
<표 2-14>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조사 비교 .....	57
<표 2-15> 자산의 가구주 연령 계층별 및 소득 분위별 비교 (2016년) .....	58
<표 2-16> 자산 구간별 가구자산 평균액 비교(2016년) .....	58
<표 2-17>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부채 조사 비교 .....	59
<표 2-18> 부채의 가구주 연령 계층별 및 소득 분위별 비교 (2016년) .....	60
<표 2-19> 노동패널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리금 상환액 조사 비교 .....	61
<표 2-20> 원리금 상환액의 가구주 연령 계층별 및 소득 분위별 비교(2016년) .....	62
<표 2-21>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처분소득 조사 비교 .....	63
<표 2-22> 가처분소득의 가구주 연령 계층별 및 소득 분위별 비교 (2016년) .....	64
<표 2-23> 정책준거지표의 연령 계층별 비교(2016년) .....	66
<표 2-24> 정책준거지표의 소득 분위별 비교(2016년) .....	66
<표 3- 1> 1998년 이후 출생아의 어머니에 대한 정의 .....	72

<표 3- 2> 연도별 출생아 수와 어머니 평균 나이: 노동패널 .....	74
<표 3- 3> 2015년 <i>ASFR</i> 계산: 노동패널 .....	75
<표 3- 4> 연도별 <i>ASFR</i> 과 <i>TFR</i> : 노동패널 .....	76
<표 3- 5> 2015년 연령그룹별 출산율 비교: 노동패널과 인구동향 조사 .....	78
<표 3- 6> 15~49세 여성인구 비율(2014년) .....	79
<표 3- 7> 연도별 출생아 수와 어머니 평균 나이: 재정패널 .....	81
<표 3- 8> 인구동향조사, 노동패널, 재정패널 비교 .....	82
<표 3- 9> 연령그룹별 여성인구 비율: 2014년과 2015년 .....	83
<표 4- 1> 혼인사건과 혼인연도 정의: 노동패널 .....	89
<표 4- 2> 연도별 혼인건수: 노동패널 .....	90
<표 4- 3> 혼인시점 평균 나이: 노동패널 .....	90
<표 4- 4> KLIPS 조혼인율 .....	92
<표 4- 5> 연령그룹별 조혼인율: 남편 .....	94
<표 4- 6> 연령그룹별 조혼인율: 아내 .....	94
<표 4- 7> 조혼인율 비교: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	96
<표 4- 8> 연령별 조혼인율 비교: 남편 .....	99
<표 4- 9> 연령별 조혼인율 비교: 아내 .....	99
<표 4-10> 혼인사건과 혼인연도 정의: 복지패널 .....	102
<표 4-11> 연도별 혼인건수: 복지패널 .....	103
<표 4-12> 복지패널(KOWEPS) 조혼인율 .....	104
<표 4-13> 조혼인율 비교: 노동패널, 복지패널, 인구동향조사 .....	104
<표 4-14> 남편과 아내 연령별 조혼인율: 복지패널 .....	107

## 그림목차

[그림 1- 1] 자영업자 상대적 만족도 .....	16	
[그림 1- 2] 소득과 만족도 간 상관계수 변화 추이 .....	18	
[그림 1- 3] 근로시간과 만족도 간 상관계수 추이 .....	19	
[그림 1- 4]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전반적 생활 만족도 차이 .....	21	
[그림 1- 5] 학력수준별 비중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	23	
[그림 1- 6] 연령별 비중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	24	
[그림 1- 7] 소득수준별 비중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	25	
[그림 1- 8] 근로시간별 비중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	26	
[그림 2- 1] 순조정가처분소득 총량지표와 합산지표 비교: 조사기준 vs. 조사시점기준 .....		49
[그림 2- 2] 순저축 총량지표와 합산지표의 추이 비교 .....	52	
[그림 2- 3] 총합지표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 추이 비교 .....	54	
[그림 3- 1] 분석데이터 예시 .....		73
[그림 3- 2] ASFR 추세: 노동패널 .....	77	
[그림 3- 3]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동향조사와 노동패널 .....	79	
[그림 3- 4] 25~39세 ASFR: 재정패널과 노동패널 .....	81	
[그림 3- 5] 노동패널, 재정패널, 인구동향조사 TFR .....	83	
[그림 4- 1] 분석데이터 예시 .....		91
[그림 4- 2] KLIPS 조혼인율 추세 .....	93	
[그림 4- 3] 남편 연령별 조혼인율 .....	95	
[그림 4- 4] 아내 연령별 조혼인율 .....	95	
[그림 4- 5] 조혼인율 비교: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	97	



[그림 4- 6] 남편 연령별 조혼인율: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	100
[그림 4- 7] 아내 연령별 조혼인율: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	101
[그림 4- 8] 조혼인율 비교: 노동패널, 복지패널, 인구동향조사 .....	106
[그림 4- 9] 남편 연령별 조혼인율 비교: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	107
[그림 4-10] 아내 연령별 조혼인율 비교: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	108



## 요 약

### 1. 자영업자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만족도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고 그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자영업자의 상대적 만족도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자영업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력, 연령, 소득, 근로시간 등 삶의 만족도 수준과 연관성이 높은 요인들을 구분한 후, 각 요인 집단별 만족도 수준 및 차이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자영업자의 상대적 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임금근로자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두 패널 모두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 수준의 추세적 증가가 확인되었다. 또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만족도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 생활 만족도와 여타 만족도 항목 간 상관관계에서는 노동패널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복지패널은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만족도 변수들과 관련 영향요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소득의 경우 두 패널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 값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된 반면 근로시간은 두 패널 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노동패널에서의 근로시간과 만족도 변수들 간 상관계수 값은 거의 대부분 음(-)의 값을 갖는 반면, 복지패널에서는 여가생활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표본 구성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이 과대 표집된 복지패널의

경우,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소득 증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소득효과로 인해 다양한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표본 특성에 따른 전반적 생활 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우선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모두에서 자영업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연령, 소득 및 근로시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에는 두 패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 항목, 이행행렬, 표본이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응답 항목별 변화의 경우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결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었으며,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의 생활 만족도가 더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행행렬과 표본이탈의 분석결과에서는 두 패널 간 분석결과에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이행행렬에서는 자영업자의 만족도 개선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임금근로자는 그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이탈 비율은 노동패널의 이탈률이 복지패널에 비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두 패널 간 만족도 분석결과와의 차이는 패널 조사시점 및 샘플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시점에서의 만족도를 묻고 있는 노동패널과는 달리 복지패널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만족도와 같이 회고적 시점에서 만족도를 묻고 있다. 또한 표본추출에 있어서도 두 패널 간 지향하는 정책지원의 목적이 상이하기에 노동패널의 경우 특정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있으나, 복지패널은 전체 샘플에서 저소득층을 과다 포함하여 표본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만족도의 수준 및 차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두 패널 간 특성에 대한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가계재정 관련 지표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가계재정 관련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노동패널조사의 총합자료와 국민계정상의 거시지표들 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미시조사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정합성을 동시에 점검하였다. 비교 분석대상 가계재정 관련 지표로 자산과 부채, 저축, 가처분소득, 원리금 상환액을 살펴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비율, 저축률을 자료 간 비교·분석하였다.

국민계정과 비교에서는 가계재정지표 대부분이 지표의 개념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가운데 총합자료 간에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이중 가계 가처분소득의 경우 조사기준인 지난해 소득자료가 파악되기 보다는 조사시점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가계저축은 전체적 추이가 유사한 모습이었으나, 저축 규모의 차이가 점차 커져 2016년에는 노동패널 대비 국민계정의 자료가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준거지표에도 반영되어 2010년에 국민계정과 유사했던 순저축률 수준이 2016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한 결과, 국민계정과 달리 재정지표의 개념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계층별과 소득분위별 비교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재정지표에서 소득 1분위와 5분위, 30세 미만과 60세 이상 등 양극단 계층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준거지표에서도 일부 반영되어 나타나 노동패널조사에서 30세 미만의 부채부담이 타 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1분위 계층에서도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높은 부채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패널 가계재정지표의 국민계정과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정합성 비교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재정지표에 대한 총합자료는 체계적 차이가 있으나 부채와 순저축 등 일부 자료와

취약계층에서 비취약계층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분석연구 시 연구자들은 이것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소득과 같이 지난해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조사자료가 실제로는 조사시점의 현황을 반영할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작년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시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저축이나 가치분소득 등 주요 가계재정지표의 분석을 위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현재는 정책 분석 시 해당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조사항목을 내용상 연계시켜야 한다. 넷째,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규모 조사항목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특히 10억 원 이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실물자산에 대한 조사는 범주화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연령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본 보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출산 자료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20차까지 조사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KLIPS)에서 출산사건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향후 출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IPS에서 출산사건은 합계출산율로 정의하고 가구원의 생년변수를 이용하여 연도별, 연령그룹별 출산율을 산출하였다.

KLIPS에서 정의한 출산사건을 모집단인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Population Dynamics Survey : PDS)와 재정패널(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 NaSTaB) 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LIPS 합계출산율은 모집단인 인구동향조사와 비교하여 과다추정된다. 특히 KLIPS 합계출산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데 비해 인구동향조사에서는 2007~15년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

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같은 가구를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분가가구를 추적하는 패널 서베이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패널 서베이가 지속됨에 따라 출산 가능성이 높은 연령그룹의 여성들이 더 많이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KLIPS에서 30~39세 연령에 속하는 여성비율이 인구동향조사에서 추계한 비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출산사건 또한 상대적으로 KLIPS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일한 방법으로 패널자료인 재정패널의 합계출산율을 추정 한 결과, 전반적으로 KLIPS와 재정패널 모두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재정패널에 비해 KLIPS에서 연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더 높게 추정된다. 재정패널에서는 고연령층(45~49세)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KLIPS에서는 25~39세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러한 연령별 표본 구성의 차이로 인해 KLIPS에서 합계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료 구성을 검토한 결과, 노동패널 자료에서 출산사건은 조사연도와 출생연도에 차이가 있어 분석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차(time lag)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KLIPS에서 출산력(birth history) 데이터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거나 출산력 데이터를 KLIPS 원 자료(raw data)와 병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4. 혼인 자료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KLIPS에서 혼인상태의 정의와 혼인시점을 변수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남녀의 인적자본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혼인의 정의로 조혼인율을 산출하였으며, 남편/아내의 연령그룹별 조혼인율을 추정하였다.

자료 간 비교·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와 한국복지

패널(Korea Welfare Panel Survey : KOWEPS)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혼인율을 분석한 결과, KLIPS 조혼인율은 모집단인 인구동향조사와 비교하여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과다추정된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두 자료 간 조혼인율 차이는 급격히 줄어들어 최근 차수에서는 두 자료 간 조혼인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연령별 조혼인율의 경우, KLIPS와 인구동향조사에서 그룹별 차이를 보인다. 25~29세 그룹에서는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조혼인율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지만, 30~34세 그룹에서는 KLIPS와 인구동향조사의 추세가 상이하다. 35~39세 그룹에서는 두 자료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셋째, 아내연령별 조혼인율의 경우, KLIPS와 인구동향조사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그룹별로 살펴보면 20~24세 그룹에서는 두 자료 모두 지속적으로 조혼인율이 감소하는 반면, 30~34세 그룹에서는 두 자료 공히 조혼인율이 상승하는 동일한 추세를 보인다. 이때 두 자료의 수치 또한 매우 근접하게 추정되었다. 다만, 25~29세 그룹에서는 KLIPS 조혼인율이 인구동향조사에 비해 과다 추정된다.

넷째, 동일한 방법으로 패널자료인 복지패널에서 추정된 조혼인율과 KLIPS 결과를 비교하면, 2010년 이후 KLIPS 조혼인율이 복지패널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10~2014년 기간의 복지패널 조혼인율은 모수인 인구동향조사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패널에서 혼인율을 추정하는 것은 편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설문항목을 검토한 결과, KLIPS에서는 혼인사건을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 복지패널에서는 혼인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없다. 따라서 혼인사건을 이용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분석 시 KLIPS가 복지패널보다 적절한 마이크



로 서베이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LIPS 조사에서 혼인상태 변화는 가구원 수준에서 응답하고 있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응답을 할 수 있고 혼인사건을 중복 계산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혼인상태 변화 측정 시, 가구원 수준이 아닌 가구 수준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이를 통해 가구원 간 일관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중복계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구 내에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매칭할 수 있도록 KLIPS 구조를 개선한다면, 현재 데이터 구조인 가구원 수준에서 혼인사건 중복계산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분석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 1 장

자영업자 삶의 만족도 :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비교

제1절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전 세계에서든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 30% 이상을 상회하던 시기에 비해서는 나아지긴 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2017년에도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5% 이상의 수준을 보인다.<sup>1)</sup>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대체 일자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경우 내수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생계형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 내 경쟁압박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이에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부족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소득, 소비,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 형성, 여가시간 등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제도적,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이 속한 직군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1) OECD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정도임.

## 2 노동패널자료 연구(IV)

고려할 때 이들의 만족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연구는 자영업의 경쟁력 및 존립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기존의 직군이나 근로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자영업자(고용주,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만족도 혹은 직업만족도(Job satisfaction)를 비교·분석하고 있다.<sup>2)</sup>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노동패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이하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각 패널자료 간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두 패널 간 표본 및 조사 자료의 구성을 비교 분석하고, 자료별 만족도 변수의 구성 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고용형태별로 자영업자와 대비되는 임금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자영업자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이에 더해 자영업자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력,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소득 및 근로시간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별 만족도의 수준 및 차이를 살펴본다.

## 제2절 자료 비교

### 1. 자료별 만족도 변수 구성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998년 이후 매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과 2005년부터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복지패널조사(KOWEPS)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들 두 패널자료는 가구와 개인들의 경제활동, 고

2) Benz and Frey(2008), Lange(2012), Zwan et al.(2015), 김우영·김용규(2001), 오유진(2006), 고승연(2013) 등.

용, 소득, 임금, 근로상황, 교육, 가구여건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복지패널은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표본 추출 시 노동패널에 비해 저소득층을 상대적으로 과대 표집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며, 가구 및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관련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sup>3)</sup> 또한 다양한 관련 설문 문항에 있어서 일자리와 만족도 관련 문항에서 노동패널은 조사시점에서의 상태를 기준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복지패널은 회고적 관점에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sup>4)</sup>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자료와 복지패널자료를 동일 시점에서 비교하기 위해 복지패널의 1차년도 자료인 2005년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이에 노동패널은 8~19차 자료, 복지패널은 1~12차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먼저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만족도 자료와 관련된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설문 내용 및 구성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두 패널 자료가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만족도는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인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더불어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등의 6개의 세부적인 삶의 만족도들을 포함해 총 7개의 영역에 대해 묻고 있다. 이들 중 직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복지패널에서는 명시적으로 묻고 있으나, 노동패널은 직업과 관련된 만족도를 ‘주된 일자리 만족도’와 ‘주된 일 만족도’로 구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두 만족도 가운데 ‘일자리’의 만족도를 ‘직업 만족도’라고 가정하고 살펴본다. 또한 건강 만족도의 경우 복지패널에서는 이를 직접 묻는 문항이 존재하나 노동패널은 건강 만족도가 아닌 건강상태에 대해 묻고 있어 두 패널 간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에 두 패널자료 간 만족

3) 복지패널의 경우 저소득층과 일반 가구층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본설계 시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와 60% 이상인 일반가구를 각각 표본의 절반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

4) 두 패널자료의 2015년도 자료를 예로 하여 비교해볼 때, 한국노동패널(18차 자료)은 2015년 3~11월간 조사가 진행되었고, 한국복지패널(11차 자료)은 2016년 3~6월까지 2015년(지난 1년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 4 노동패널자료 연구(IV)

도 비교에서는 제외하였다.

한편,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두 자료 모두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의 설문문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다. 만족도 질문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로 묻고 있다. 이때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의 척도는 노동패널의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은 ‘매우 만족한다’를 1로 하고 가장 낮은 척도인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5로 규정한 반면 복지패널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척도 방향의 통일성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노동패널의 척도를 복지패널의 척도의 기준에 따라 만족도가 가장 낮은 척도를 1, 가장 높은 척도를 5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응답한 값의 평균의 증가는 각 질문에 대한 만족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자료별 만족도 변수 구성

자료명	만족도 변수	응답내용	응답차수
한국노동패널	가족의 수입 만족도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19차
	주거 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일자리) 만족도		3~19차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생활 만족도		
한국복지패널	건강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1~12차
	가족의 수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생활 만족도		

## 2. 만족도 영향 요인 변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삶의 만족도는 성별, 나이, 학력, 혼인여부와 같은 개인 특성정보, 가구원 수, 연평균 소득 등의 가구 특성정보, 그리고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과 같은 일자리 정보 등 다양한 영향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구분하여 각 요인의 특성별 그룹 간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이때 상기한 영향 요인들 중 두 패널자료의 조사항목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지만 조사방식 또는 설문 내용으로 인해 세부사항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항목의 경우 노동패널은 조사시점의 현재 일자리를 묻고 있으나 복지패널은 지난 1년간의 주된 경제활동상태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있다. 근로시간의 경우 노동패널은 규칙적 일자리와 불규칙적 일자리 모두 주당 근로시간으로 묻고 있으나, 복지패널은 규칙적 일자리는 주당 근로시간으로, 불규칙적 일자리는 일일 근로시간으로 묻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노동패널에서는 작년 총 근로소득(세전/세후)을 묻고 있으나 복지패널은 작년 순소득을 대상으로 묻고 있다. 근로소득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노동패널의 경우 작년 연간 총 근로소득을 묻고 있으나, 복지패널에서는 세부 일자리와 부업 등 각각의 근로소득을 묻고 있다.

### 제3절 자료별 자영업자 인적 특성 현황

#### 1. 자영업자 분포 현황

가. 고용형태(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및 비중

<표 1-2>에 제시된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및

6 노동패널자료 연구(IV)

〈표 1-2〉 고용형태별 종사자 비중 및 인원

(단위 : %, 명)

	종사자 지위	통계청	노동패널		복지패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05	비임금근로자	33.5	1,759	30.3	1,346	22.3
	자영업자	26.9	1,445	24.9	1,113	18.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3	446	7.7	179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9.6	999	17.2	934	15.5
	무급가족종사자	6.6	314	5.4	233	3.9
	임금근로자	66.5	4,041	69.7	4,697	77.7
	상용근로자	34.7	3,153	54.4	2,333	38.6
	임시근로자	22.2	437	7.5	1,531	25.3
	일용근로자	9.7	451	7.8	833	13.8
2010	비임금근로자	28.8	1,894	26.7	1,103	20.6
	자영업자	23.5	1,563	22	930	17.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3	540	7.6	202	3.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2	1,023	14.4	728	13.6
	무급가족종사자	5.3	331	4.7	173	3.2
	임금근로자	71.2	5,211	73.3	4,252	79.4
	상용근로자	42.4	3,850	54.2	2,148	40.1
	임시근로자	21.2	830	11.7	1,284	24
	일용근로자	7.6	531	7.5	820	15.3
2016	비임금근로자	25.5	1,830	24.3	1,023	17.4
	자영업자	21.3	1,563	20.7	886	15.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0	540	7.2	211	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3	1,023	13.6	675	11.5
	무급가족종사자	4.3	267	3.5	137	2.3
	임금근로자	74.5	5,709	75.7	4,847	82.6
	상용근로자	49.5	4,200	55.7	2,523	43
	임시근로자	19.4	967	12.8	1,533	26.1
	일용근로자	5.6	542	7.2	791	13.5

주 : 1) 노동패널 전체 종사자 수는 2005년 5,800명, 2010년 7,105명, 2016년 7,539명.

2) 복지패널 전체 종사자 수는 2005년 6,043명, 2010년 5,355명, 2016년 5,870명.



비중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기준 노동패널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은 각각 24.9%와 69.7%를 보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나, 복지패널의 경우에는 각각 18.5%와 77.7%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 표본 샘플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노동패널의 경우 7.7%에 이르는 반면 복지패널은 3%에 머물러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근로자 샘플 구성에서 노동패널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54%를 넘는 반면 복지패널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과 2016년의 종사자 비중 역시 이러한 경향성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은 두 패널 모두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복지패널의 경우 2016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8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인적 특성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에 대한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인적 특성의 분포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영업자의 학력 분포를 보면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경우 2005년에는 고졸 이하의 비중이 2/3 이상을 차지하여 저학력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학력자의 비중은 2010년과 2016년에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60% 수준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중은 2005년에는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모두 대략 60% 내외 정도의 수준을 보이다가 점차 줄어들어 2016년에는 각각 5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졸 이상의 비율은 2005년 25% 수준에서 2016년에는 각각 31.4%와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평균적인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령의 경우를 살펴보면, 두 패널 모두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 연령이 6~7세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구성비에서도

## 8 노동패널자료 연구(IV)

30대 이하의 자영업자의 구성비는 3개의 샘플 연도 모두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임금근로자의 은퇴시점을 기점으로 이들이 자영업자로 전환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자영업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연도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331만 원에서 많게는 1,043만 원 이상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의 구성비를 보면 노동패널에서는 100만~200만 원 미만 그룹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서 가장 높은 반면 복지패널은 100만 원 미만의 그룹과 100만~200만 원 미만 그룹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5)</sup>

가구원 수의 전체적인 구성 비율을 보면 4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두 패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1인 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4인 가구의 구성비는 대체로 높은 반면 1인 가구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성별 구성비를 보면, 두 패널에서 자영업자의 여성 비율이 임금근로자의 여성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추세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비율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점별로 보면 2005년 임금근로자의 여성비율은 노동패널 38.8%, 복지패널 39.9% 수준을 보여 두 패널의 자영업자 여성비율인 30.6%, 26.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의 여성 비율(노동패널 41.5%, 복지패널 47.7%)은 더욱 높아져 자영업자의 여성 비율(노동패널 31.8%, 복지패널 32.5%)과의 차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혼인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패널 모두에서 임금근로자의 기혼 비율은 70% 중후반의 수준을 보이는 반면 자영업자의 기혼 비율은 90% 초반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직종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간 차이를 보인다.<sup>6)</sup>

5) 이러한 차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본 구성(복지패널의 경우 저소득층 과대 표집)이나 근로소득 조사문항(복지패널의 경우 순소득)의 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경우 두 패널 모두 판매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두 번째로 높은 직종에서는 노동패널은 전문직이, 복지패널은 서비스직이 차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패널에서는 전문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복지패널은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속연수의 경우 두 패널 모두 평균적으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차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 노동패널의 경우 2005년 평균 근속연수의 차이가 1.4년에서 2016년에는 3.7년으로 늘어났으며, 복지패널에서는 2.4년에서 4.8년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근속연수의 분포를 보면, 두 패널 모두 1~5년 이하의 근속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의 경우 노동패널에서는 동 비율이 3개년도 샘플 모두 40% 이상의 비율을 보인 반면 복지패널은 30% 중후반의 비율을 보인다. 자영업자 역시 1~5년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나 복지패널에서는 노동패널과는 달리 15년 초과와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2016년에는 근소한(0.46%p) 차이로 순위가 역전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근로시간의 경우를 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최근에 이를수록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노동패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근로시간별 분포는 2005년에 두 패널 모두에서 55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50%가 넘게 나타났으나 2016년에는 그 비중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40시간 이하를 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40시간 이하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노동패널 52.3%, 복지패널 60.2% 수준을 보이고 있다.

---

6) 직종별 구성비 작성 시 공공행정, 국제기관, 군인과 같이 자영업자들이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 임금근로자와의 비교가 불가능하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0 노동패널자료 연구(Ⅳ)

〈표 1-3〉 2005년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인적 특성 분포

(단위 : %)

특성	세부구분	노동패널		복지패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학력	중졸 이하	21.01	29.90	22.71	29.42
	고졸	35.44	40.55	38.40	41.79
	전문대졸	17.79	10.59	13.50	8.21
	대졸 이상	25.76	18.96	25.39	20.58
연령	15~29세	22.79	5.19	17.72	1.99
	30대	32.71	24.64	32.92	23.65
	40대	25.59	34.12	26.67	35.74
	50대	13.56	25.26	13.84	21.21
	60대 이상	5.35	10.80	8.85	17.42
	평균 연령(세)	39.1	45.9	41.1	47.8
소득수준	100만 원 미만	27.63	22.31	34.48	32.04
	100만~200만 원 미만	41.56	37.46	34.18	29.15
	200만~300만 원 미만	18.34	18.88	16.70	17.42
	300만~400만 원 미만	7.69	9.55	7.76	8.66
	400만~500만 원 미만	3.25	5.15	3.62	4.96
	500만 원 이상	1.52	6.64	3.26	7.76
	연평균 소득(만 원)	2,058.7	2,613.4	1,988.3	2,320.2
가구원 수	1명	6.14	5.88	7.85	6.05
	2명	11.63	11.14	19.40	17.78
	3명	24.82	21.11	25.29	22.74
	4명	41.62	44.36	35.07	38.00
	5명 이상	15.79	17.51	12.39	15.43
성별	남성	61.17	69.41	60.11	73.83
	여성	38.83	30.59	39.89	26.17
혼인 여부	미혼	26.65	8.93	22.43	5.87
	기혼	73.35	91.07	77.57	94.13
직종	고위관리자	1.69	3.21	1.07	2.63
	전문가	22.71	18.53	15.48	12.60
	사무직	20.83	3.34	20.57	1.90
	서비스직	8.01	16.31	9.89	21.31
	판매직	5.70	27.25	6.91	28.65
	기능직	13.73	13.45	10.25	11.60
	기계조립	13.56	13.73	10.62	15.68
단순노무	13.49	4.18	24.64	5.44	
근속 기간	1년 이하	17.43	9.22	22.43	11.89
	1~5년 이하	48.57	45.94	39.83	35.5
	5~10년 이하	18.81	24.06	18.02	22.69
	10~15년 이하	7.1	8.52	8.34	11.71
	15년 초과	8.09	12.27	11.38	18.21
평균 근속(개월)	64.6	81.7	71.5	100.6	
근로 시간	40시간 이하	25.27	24.36	33.77	25.81
	40~45시간 이하	18.81	5.81	12.49	4.78
	45~50시간 이하	19.65	14.6	18.44	12.82
	50~55시간 이하	9.73	4.91	7.25	4.06
	55시간 초과	26.55	50.31	28.04	52.53
평균 근무(시간)	49.4	55.5	46.1	53.5	
표본 수(명)		4,041	1,445	4,697	1,113

〈표 1-4〉 2010년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인적 특성 분포

(단위 : %)

특성	세부구분	노동패널		복지패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학력	중졸 이하	18.36	25.99	20.67	29.89
	고졸	34.60	41.25	37.06	40.75
	전문대졸	19.59	12.16	17.14	10.43
	대졸 이상	27.44	20.60	25.13	18.92
연령	15~29세	15.91	2.92	15.09	1.94
	30대	32.18	18.73	26.83	15.27
	40대	26.33	31.70	28.57	32.26
	50대	17.39	28.60	17.80	29.03
	60대 이상	8.19	18.05	11.72	21.51
	평균 연령(세)	41.62	48.96	43.23	50.56
소득수준	100만 원 미만	20.28	16.25	27.63	25.27
	100만~200만 원 미만	38.83	34.29	33.59	26.67
	200만~300만 원 미만	21.31	20.52	17.73	17.31
	300만~400만 원 미만	9.73	10.83	9.85	11.72
	400만~500만 원 미만	5.79	8.60	4.93	7.20
	500만 원 이상	4.06	9.50	6.27	11.83
	연평균 소득(만 원)	2,471.0	3,205.8	2,439.9	3,480.9
가구원 수	1명	10.80	7.94	8.20	6.13
	2명	15.12	17.56	17.80	20.65
	3명	25.16	22.08	25.44	25.05
	4명	38.34	39.64	34.18	34.95
	5명 이상	10.57	12.78	14.38	13.23
성별	남성	59.97	67.99	55.02	65.91
	여성	40.03	32.01	44.98	34.09
혼인 여부	미혼	23.78	7.57	23.39	6.56
	기혼	76.22	92.43	76.61	93.44
직종	고위관리자	1.19	1.99	2.73	4.73
	전문가	22.64	17.75	15.82	14.41
	사무직	18.88	2.93	17.89	1.18
	서비스직	8.21	16.75	9.29	18.06
	판매직	8.26	27.90	8.70	23.55
	기능직	12.35	11.46	9.41	10.22
	기계조립	13.89	15.38	9.24	18.39
	단순노무	14.45	5.85	26.21	9.46
근속연수	1년 이하	17.54	7.49	26.76	12.37
	1~5년 이하	41.49	34.13	36.61	29.89
	5~10년 이하	20.64	25.05	16.55	19.89
	10~15년 이하	10.35	15.31	8.23	14.3
	15년 초과	9.98	18.03	11.86	23.55
	평균 근속(개월)	74.4	107.5	70.5	114.6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37.32	28.78	49.65	38.49
	40~45시간 이하	14.16	3.91	11.24	4.19
	45~50시간 이하	20.8	19.91	17.52	13.01
	50~55시간 이하	6.89	3.41	5.37	5.05
	55시간 초과	20.82	43.98	16.22	39.25
	평균 근무(시간)	46.9	52.5	41.6	44.7
	표본 수(명)	5,211	1,563	4,252	930

12 노동패널자료 연구(Ⅳ)

〈표 1-5〉 2016년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인적 특성 분포

(단위 : %)

특성	세부구분	노동패널		복지패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학력	중졸 이하	14.44	21.94	19.80	25.42
	고졸	33.18	40.35	34.66	42.94
	전문대졸	20.95	13.53	17.24	12.32
	대졸 이상	31.43	24.18	28.30	19.32
연령	15~29세	11.59	1.03	12.98	1.69
	30대	26.55	13.92	19.24	12.20
	40대	28.28	29.44	27.82	26.67
	50대	20.37	30.02	20.79	28.81
	60대 이상	13.21	25.59	19.16	30.62
	평균 연령(세)	44.6	51.8	46.9	53.2
소득수준	100만 원 미만	13.38	10.22	20.55	15.71
	100만~200만 원 미만	31.94	28.91	30.41	26.21
	200만~300만 원 미만	25.66	19.66	20.15	18.42
	300만~400만 원 미만	13.76	13.48	11.95	12.20
	400만~500만 원 미만	7.48	10.81	6.82	9.60
	500만 원 이상	7.79	16.93	10.13	17.85
	연평균 소득(만 원)	3,034.0	3,920.1	2,953.2	3,996.2
가구원 수	1명	12.85	9.24	10.27	7.46
	2명	16.84	21.62	21.74	27.23
	3명	24.43	23.67	26.75	23.62
	4명	36.87	34.45	30.07	31.30
	5명 이상	9.01	11.03	11.16	10.40
성별	남성	58.47	68.18	52.34	67.46
	여성	41.53	31.82	47.66	32.54
혼인 여부	미혼	21.53	6.86	23.03	5.99
	기혼	78.47	93.14	76.97	94.01
직종	고위관리자	1.27	1.74	3.10	5.31
	전문가	22.93	18.79	17.61	13.22
	사무직	20.01	3.68	18.04	1.24
	서비스직	9.46	16.59	8.95	18.76
	판매직	8.42	25.76	7.73	22.26
	기능직	11.57	12.40	9.03	11.75
	기계조립	11.56	15.75	8.41	20.11
	단순노무	14.66	5.29	26.46	7.23
근속연수	1년 이하	11.01	4.99	24.68	8.7
	1~5년 이하	40.11	30.01	36.25	28.47
	5~10년 이하	22.9	21.41	17.3	20.11
	10~15년 이하	12.25	15.94	9.57	13.79
	15년 초과	13.73	27.65	12.2	28.93
평균 근속(개월)	87.9	132.1	74.7	132.4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52.33	34.38	60.19	45.76
	40~45시간 이하	12.41	3.98	9.96	4.07
	45~50시간 이하	17.89	21.49	13.97	13.11
	50~55시간 이하	5.09	3.21	4.82	6.1
	55시간 초과	12.29	36.95	11.06	30.96
	평균 근무(시간)	43.6	50.3	39.4	40.3
표본 수(명)		5,709	1,563	4,847	886

## 제4절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만족도 비교

### 1. 항목별 만족도

<표 1-1>에서 언급한 총 7개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를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6>과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족수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두 패널 모두 추세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수입 만족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환경 만족도, 직업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생활 만족도 역시 가족수입 만족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회적 친분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다른 만족도와는 달리 추세적 증가의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시점 간 만족도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만족도를 100으로 할 경우 자영업자의 상대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가족수입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서는 두 패널 모두 만족도 값이 10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만족도의 경우 노동패널은 2015년을 제외하고 100 이상의 값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복지패널에서는 2014년 이후에만 100을 넘는 값이 확인되고 있어,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는 최근에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 만족도의 경우 2010년 이후에는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 값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수준만을 보여주고 있기에 각 종사자의 인적 특성별로는 각기 다른 수준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5절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4 노동패널자료 연구(IV)

〈표 1-6〉 자영업자 만족도 수준

	가족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노동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2005	2.62	2.64	3.27	3.33	3.66	3.91
2006	2.6	2.45	3.26	3.23	3.65	3.92
2007	2.72	2.49	3.31	3.4	3.65	3.91
2008	2.8	2.6	3.31	3.38	3.63	3.9
2009	2.84	2.64	3.31	3.48	3.61	3.94
2010	2.91	2.69	3.37	3.5	3.59	3.95
2011	2.95	2.66	3.43	3.49	3.66	3.92
2012	2.91	2.65	3.44	3.46	3.65	3.93
2013	2.92	2.74	3.46	3.57	3.65	3.93
2014	2.92	2.91	3.47	3.65	3.65	3.95
2015	2.98	3.0	3.5	3.66	3.65	3.97
2016	3.02	3.02	3.52	3.68	3.66	3.94
표본 수	20,687	11,680	20,686	11,680	20,685	11,678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진반적 생활	
	노동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2005	3.04	3.16	3.42	3.66	2.82	2.75	3.21	3.24
2006	3.06	3.19	3.45	3.82	2.81	2.79	3.22	3.21
2007	3.12	3.18	3.48	3.79	2.9	2.82	3.27	3.35
2008	3.13	3.27	3.48	3.73	2.98	2.86	3.28	3.31
2009	3.17	3.32	3.51	3.88	2.97	2.89	3.35	3.54
2010	3.24	3.42	3.51	3.81	3.03	3	3.38	3.56
2011	3.3	3.46	3.58	3.83	3.06	3.05	3.43	3.49
2012	3.25	3.43	3.55	3.84	3.07	3.05	3.41	3.52
2013	3.27	3.45	3.54	3.78	3.14	3.05	3.43	3.53
2014	3.27	3.6	3.53	3.83	3.12	3.26	3.43	3.65
2015	3.31	3.63	3.52	3.85	3.11	3.36	3.45	3.68
2016	3.35	3.65	3.52	3.84	3.14	3.26	3.47	3.62
표본 수	20,676	11,680	20,684	11,676	20,685	11,677	20,697	11,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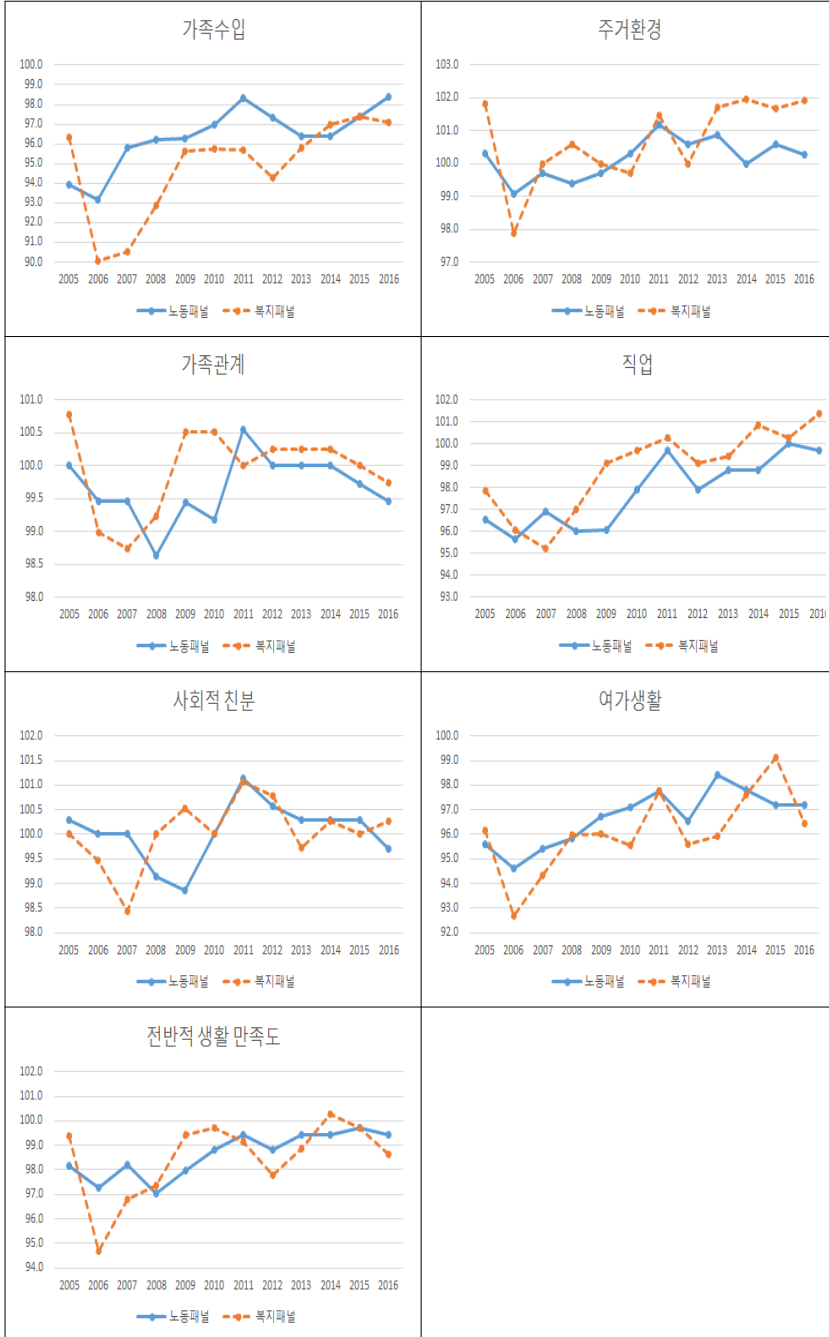
〈표 1-7〉 임금근로자 만족도 수준

	가족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노동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2005	2.79	2.74	3.26	3.27	3.66	3.88
2006	2.79	2.72	3.29	3.3	3.67	3.96
2007	2.84	2.75	3.32	3.4	3.67	3.96
2008	2.91	2.8	3.33	3.36	3.68	3.93
2009	2.95	2.76	3.32	3.48	3.63	3.92
2010	3.0	2.81	3.36	3.51	3.62	3.93
2011	3.0	2.78	3.39	3.44	3.64	3.92
2012	2.99	2.81	3.42	3.46	3.65	3.92
2013	3.03	2.86	3.43	3.51	3.65	3.92
2014	3.03	3	3.47	3.58	3.65	3.94
2015	3.06	3.08	3.48	3.6	3.66	3.97
2016	3.07	3.11	3.51	3.61	3.68	3.95
표본 수	67,717	54,969	67,712	54,968	67,713	54,968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전반적 생활	
	노동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2005	3.15	3.23	3.41	3.66	2.95	2.86	3.27	3.26
2006	3.2	3.32	3.45	3.84	2.97	3.01	3.31	3.39
2007	3.22	3.34	3.48	3.85	3.04	2.99	3.33	3.46
2008	3.26	3.37	3.51	3.73	3.11	2.98	3.38	3.4
2009	3.3	3.35	3.55	3.86	3.07	3.01	3.42	3.56
2010	3.31	3.43	3.51	3.81	3.12	3.14	3.42	3.57
2011	3.31	3.45	3.54	3.79	3.13	3.12	3.45	3.52
2012	3.32	3.46	3.53	3.81	3.18	3.19	3.45	3.6
2013	3.31	3.47	3.53	3.79	3.19	3.18	3.45	3.57
2014	3.31	3.57	3.52	3.82	3.19	3.34	3.45	3.64
2015	3.31	3.62	3.51	3.85	3.2	3.39	3.46	3.69
2016	3.36	3.6	3.53	3.83	3.23	3.38	3.49	3.67
표본 수	67,681	54,964	67,713	54,961	67,712	54,957	67,745	54,904

16 노동패널자료 연구(IV)

[그림 1-1] 자영업자 상대적 만족도(임금근로자=100)



## 2. 만족도 항목 및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 가. 만족도 항목 간 상관관계

<표 1-8>은 분석 기간 전체에 걸친 전반적 생활 만족도와 다른 6개의 만족도 간 평균적 상관관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노동패널의 경우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 생활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패널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수 값을 보이는 반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 생활 만족도와의 관련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종사자별 전반적 생활 만족도와의 상관계수 비교

	노동패널		복지패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가족수입 만족도	0.5245	0.5248	0.4987	0.4774
주거환경 만족도	0.5843	0.5680	0.4525	0.4381
가족관계 만족도	0.5594	0.5337	0.4328	0.3802
직업 만족도	0.4662	0.5355	0.5721	0.5637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0.6171	0.6003	0.4951	0.4593
여가생활 만족도	0.5437	0.5178	0.5628	0.5401

### 나. 만족도와 소득 및 근로시간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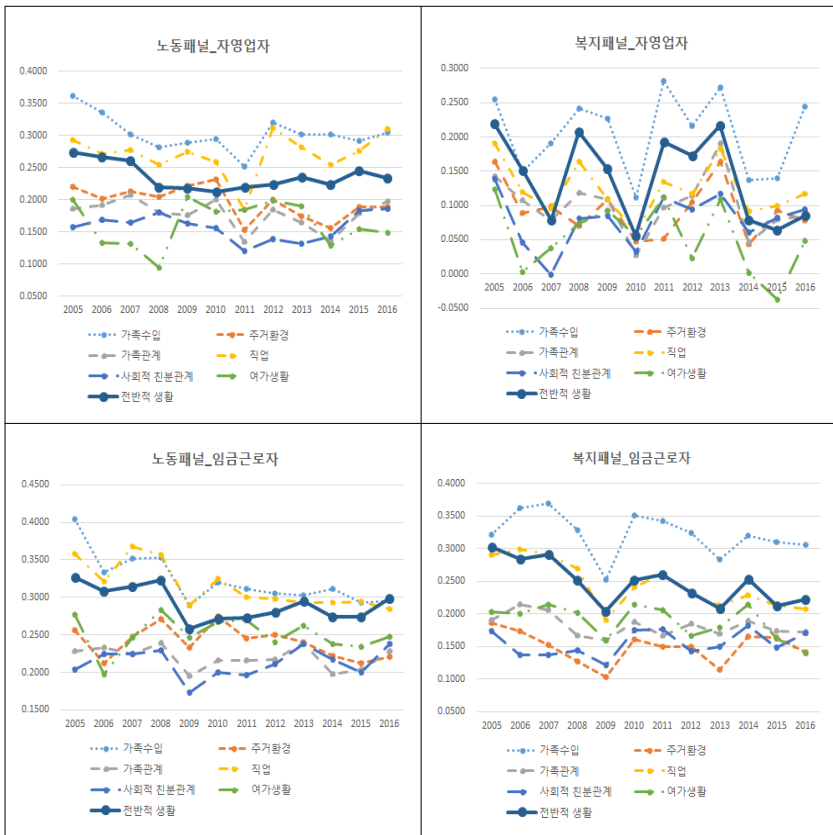
[그림 1-2]와 [그림 1-3]에서는 개인의 만족도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및 근로시간을 대상으로 만족도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수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소득과 만족도 간 상관관계수 값을 살펴보면,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모두에서 자영업자와 임금근

18 노동패널자료 연구(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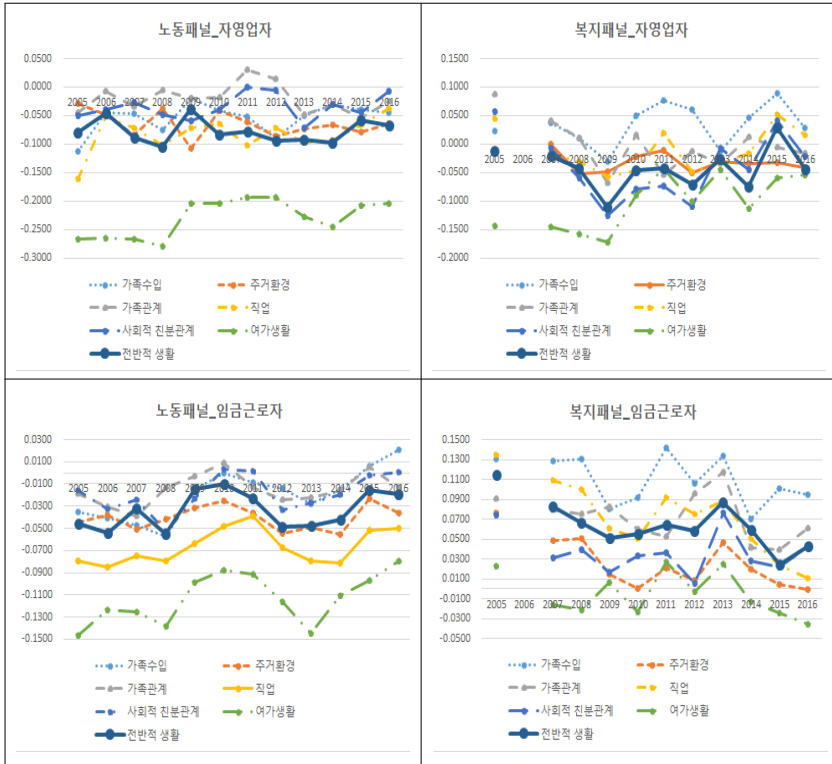
로자에 상관없이 전반적 생활 만족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만족도 변수들과의 관계에서도 양(+)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과관계 분석이 아닌 변수 간 단순 상관관계 결과이기에 소득이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여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소득이 개인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상관계수 값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가족수입, 직업 등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3]에 제시된 근로시간과 만족도 변수들 간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소득과 달리 두 패널 간 상당한 차이가 관찰되

[그림 1-2] 소득과 만족도 간 상관계수 변화 추이



[그림 1-3] 근로시간과 만족도 간 상관계수 추이



고 있다.<sup>7)</sup> 임금근로자의 경우 노동패널에서의 근로시간과 만족도 변수들 간 상관계수 값은 거의 대부분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복지패널에서는 근로시간과의 상관계수의 부호가 여가생활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양(+)<sup>8)</sup>의 값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에서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대부분의 만족도와와의 계수 값이 두 패널 모두에서 음(-)의 값을 가진다. 다만 가족수입 만족도의 경우 복지패널은 2009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양(+)<sup>8)</sup>의 값으로 나타나 상관관계의 방향에 있어 노동패

7) [그림 1-3]에서는 근로시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2006년 복지패널 자료의 결과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8) 이러한 차이 역시 표본 구성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과대 표집된 복지패널의 경우,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소득 증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소득효과로 인해 다양한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널과 차이를 보인다.

## 제5절 전반적 생활 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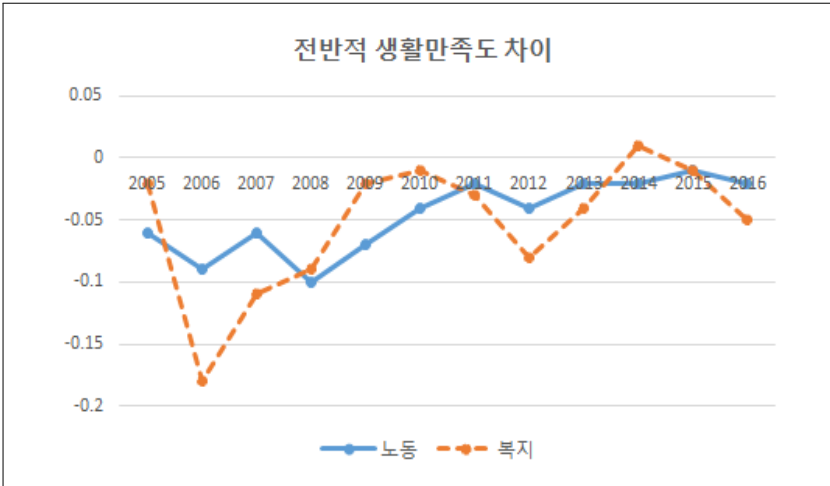
### 1. 전반적 생활 만족도 비교

<표 1-9>에 제시된 2005년에서 2016년까지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 추이를 보면,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 값의 변동성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기간 전체 연도의 표준편차를 계산해 보면 노동패널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약 0.066, 자영업자는 0.089, 복지패널은 각각 약 0.123과

<표 1-9>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전반적 생활 만족도

	노동패널			복지패널		
	임금 근로자(a)	자영업자 (b)	차이 (b-a)	임금 근로자(a)	자영업자 (b)	차이 (b-a)
2005	3.27	3.21	-0.06	3.26	3.24	-0.02
2006	3.31	3.22	-0.09	3.39	3.21	-0.18
2007	3.33	3.27	-0.06	3.46	3.35	-0.11
2008	3.38	3.28	-0.1	3.4	3.31	-0.09
2009	3.42	3.35	-0.07	3.56	3.54	-0.02
2010	3.42	3.38	-0.04	3.57	3.56	-0.01
2011	3.45	3.43	-0.02	3.52	3.49	-0.03
2012	3.45	3.41	-0.04	3.6	3.52	-0.08
2013	3.45	3.43	-0.02	3.57	3.53	-0.04
2014	3.45	3.43	-0.02	3.64	3.65	0.01
2015	3.46	3.45	-0.01	3.69	3.68	-0.01
2016	3.49	3.47	-0.02	3.67	3.62	-0.05
표준편차	0.066	0.089	0.029	0.123	0.152	0.052

[그림 1-4]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전반적 생활 만족도 차이



0.152를 보여 노동패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 값이 복지패널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 값은 2014년 복지패널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근로자에 비해 작은 값을 보이고 있어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3절에 제시된 인적 특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과다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추측된다.

## 2. 표본 특성별 전반적 생활 만족도 실태 비교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는 다양한 인구학적 또는 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별 전반적 생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sup>9)</sup> 이 중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학력,

9)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전반적 생활 만족도 실태는 [부록]의 <부표 1-1>~<부표 1-3>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연령, 소득수준 및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1-5]에 제시된 학력별 생활 만족도 추이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모두에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 역시 전반적으로는 두 패널 모두 학력수준과 비례적 관계가 관찰되고 있으나 복지패널의 2010년과 2016년의 경우에는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수준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생활 만족도가 자영업자에 비해 거의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수준은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노동패널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만족도 차이가 연령대별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복지패널에서는 2016년 40대 이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경제적 요인 중 소득수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에서 뚜렷한 패턴이 발견된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생활 만족도는 자영업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족도의 차이는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두 패널 모두에서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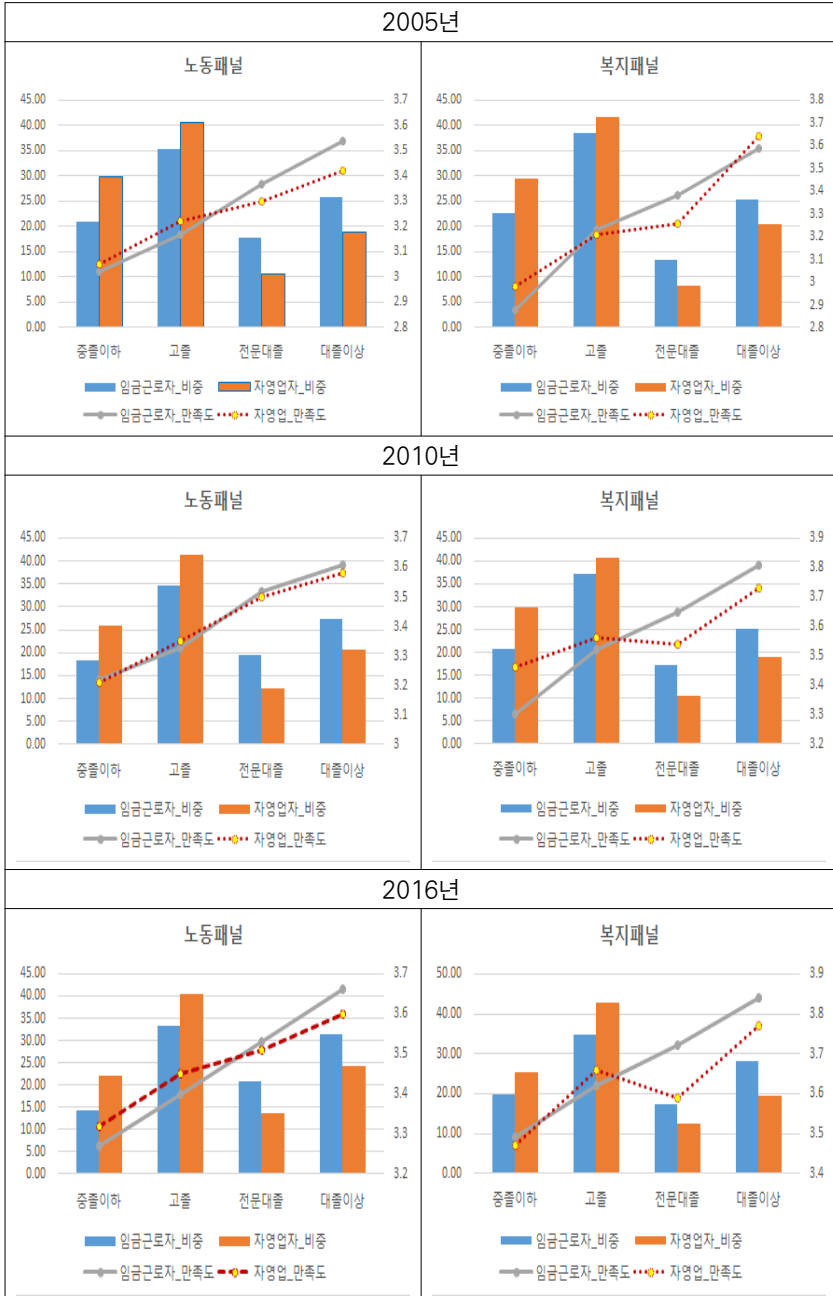
근로시간의 정도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노동패널의 경우 2016년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에서 길어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sup>10)</sup> 복지패널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 이상)과 만족도 사이에는, 노동패널과 마찬가지로 반비례 관계가 관측된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주 55시간 이하까지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주 55시간을 초과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이유는 시간제와 전일제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학력수준별 비중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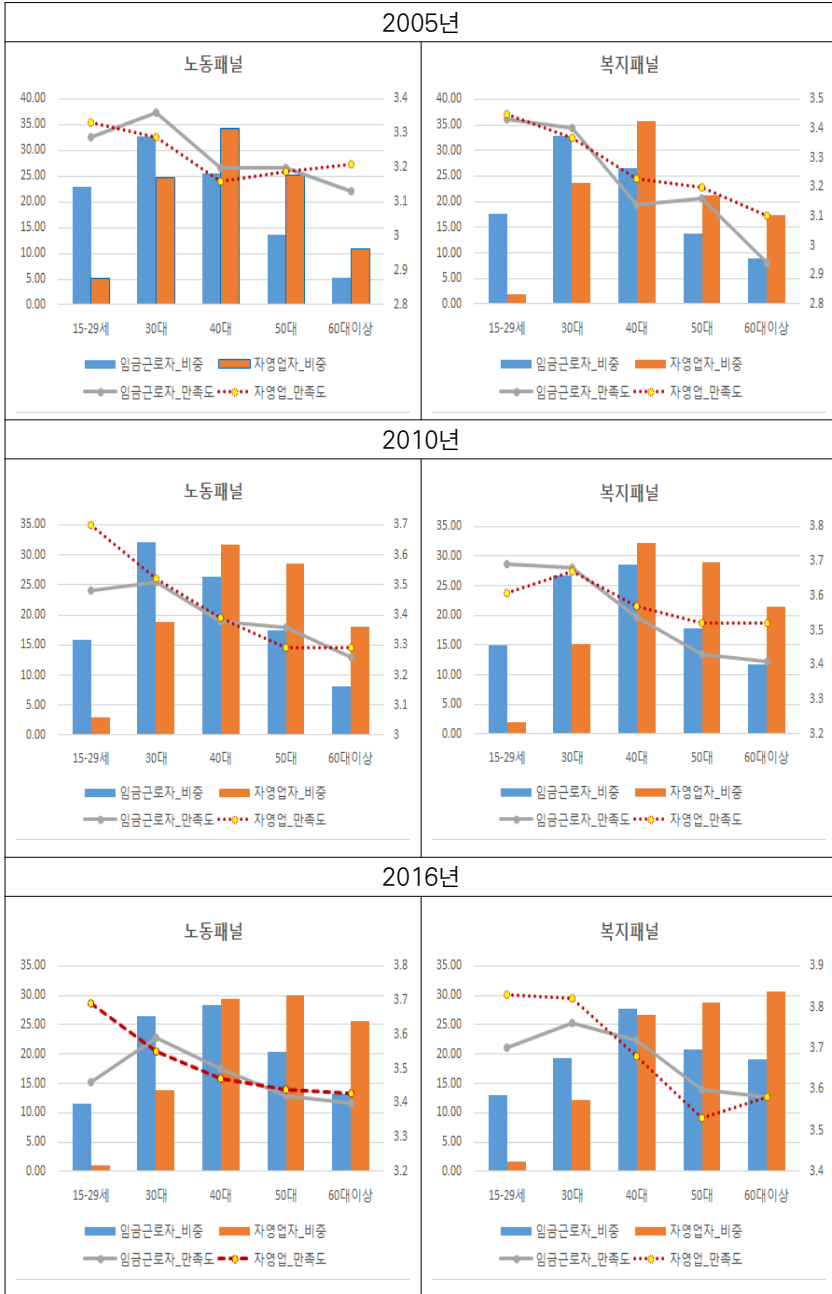
(단위 : %)



24 노동패널자료 연구(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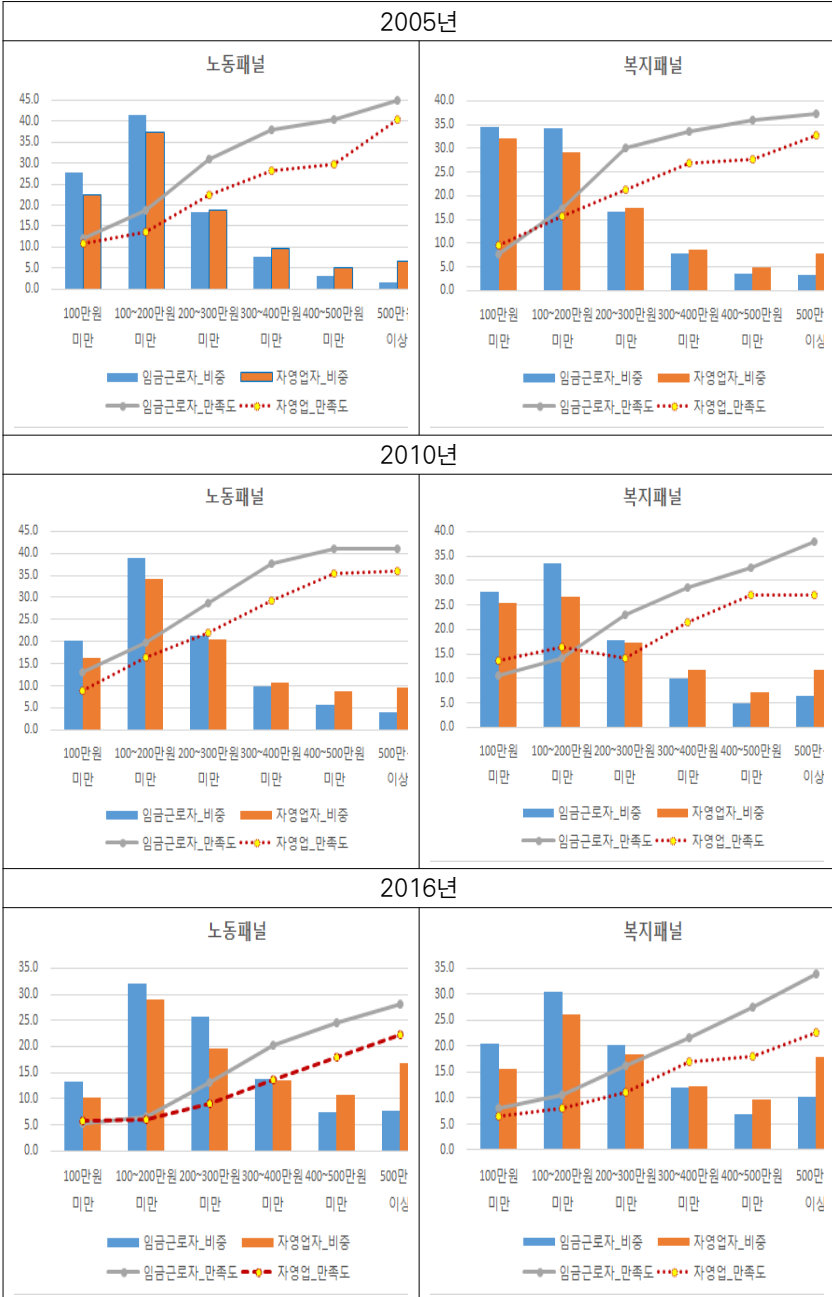
[그림 1-6] 연령별 비중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단위 : %)



[그림 1-7] 소득수준별 비중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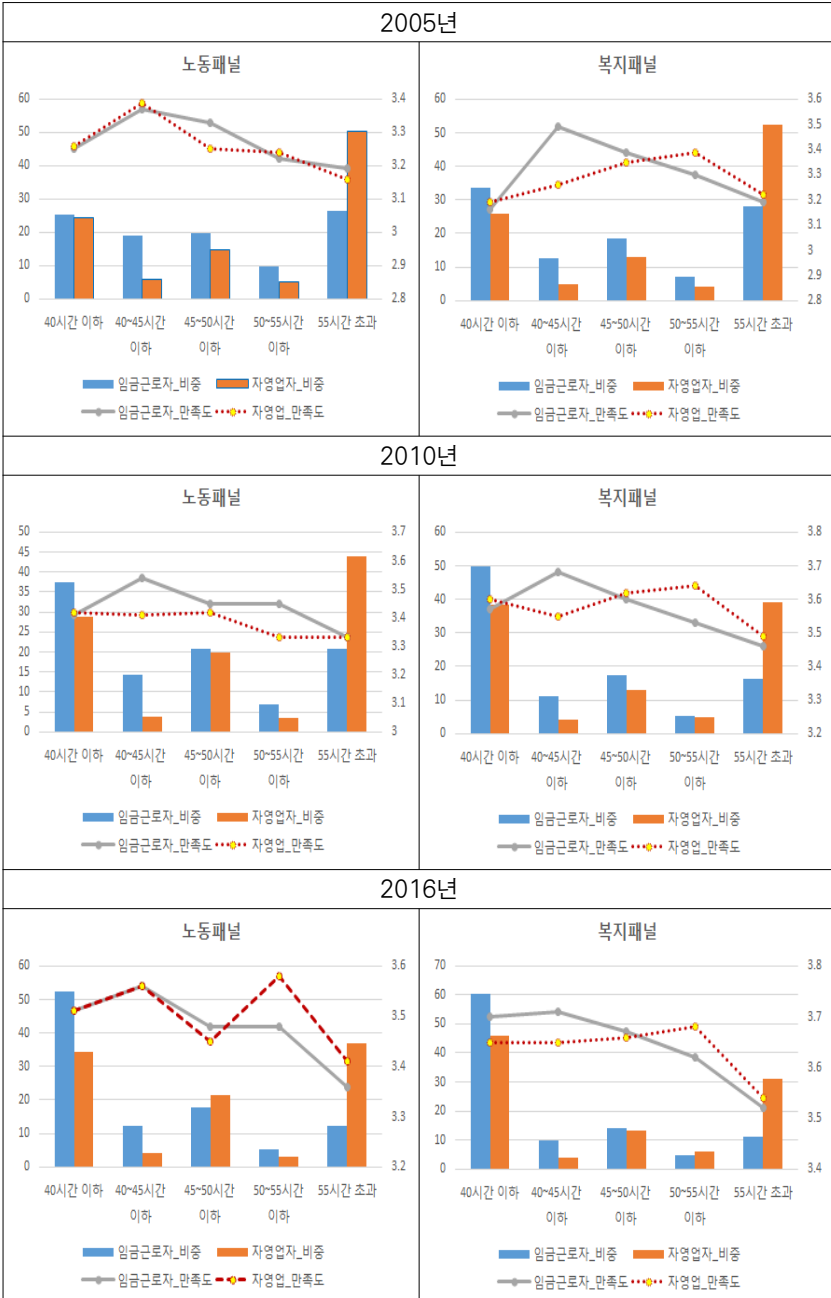
(단위 : %)



26 노동패널자료 연구(Ⅳ)

(그림 1-8) 근로시간별 비중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단위 : %)



### 3.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응답 항목별 변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 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영업자를 보면 노동패널에서 2005년에 ‘매우 불만족스럽다’나 ‘대체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불만족 비율)은 약 9.1%를 나타냈지만, 2016년에는 동 비율이 약 2.1%로 하락하여 전반적 생활 만족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지패널 역시 2005년 14.1%에서 2016년에는 3.8%로 불만족 비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체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비중(만족 비율)은 37.7%에서 64.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패널에 비해 그 변화폭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어서 임금근로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노동패널의 경우 2005년에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나 ‘대체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불만족 비율)은 약 8%를 기록하였지만, 2016년에는 약 1.9%로 나타났다. 복지패널도 임금근로자의 불만족 응답비율은 2005년 약 14%에서 2016년에는 3.83%로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자영업자의 만족도 개선 추이와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의 생활 만족도 역시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비해 불만족 비중은 더 낮은 반면 만족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10년 사이 임금근로자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선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05년 이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의 생활 만족도가 더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1-10〉 노동패널 : 자영업자

(단위: 명, %)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합계
2005	9 (0.62)	122 (8.47)	869 (60.31)	433 (30.05)	8 (0.56)	1,441 (100.0)
2006	2 (0.15)	136 (9.91)	804 (58.56)	422 (30.74)	9 (0.66)	1,373 (100.0)
2007	5 (0.36)	114 (8.24)	773 (55.89)	488 (35.29)	3 (0.22)	1,383 (100.0)
2008	9 (0.64)	104 (7.42)	779 (55.56)	502 (35.81)	8 (0.57)	1,402 (100.0)
2009	7 (0.43)	106 (6.46)	841 (51.25)	677 (41.26)	10 (0.61)	1,641 (100.0)
2010	2 (0.12)	72 (4.47)	861 (53.41)	669 (41.50)	8 (0.50)	1,612 (100.0)
2011	4 (0.26)	53 (3.41)	768 (49.48)	719 (46.33)	8 (0.52)	1,552 (100.0)
2012	3 (0.19)	68 (4.28)	803 (50.53)	711 (44.75)	4 (0.25)	1,589 (100.0)
2013	2 (0.13)	46 (2.95)	790 (50.71)	716 (45.96)	4 (0.26)	1,558 (100.0)
2014	0 (0.00)	39 (2.59)	788 (52.39)	671 (44.61)	6 (0.40)	1,504 (100.0)
2015	0 (0.00)	40 (2.62)	765 (50.03)	720 (47.09)	4 (0.26)	1,529 (100.0)
2016	0 (0.00)	33 (2.12)	770 (49.42)	751 (48.20)	4 (0.26)	1,558 (100.0)

〈표 1-11〉 복지패널 : 자영업자

(단위: 명, %)

	1: 매우 불만족	1: 대체로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합계
2005	18 (1.65)	136 (12.49)	524 (48.12)	391 (35.90)	20 (1.84)	1,089 (100.0)
2006	20 (1.98)	160 (15.86)	436 (43.21)	378 (37.46)	15 (1.49)	1,009 (100.0)
2007	10 (0.99)	108 (10.67)	440 (43.48)	430 (42.49)	24 (2.37)	1,012 (100.0)
2008	10 (1.04)	102 (10.56)	447 (46.27)	393 (40.68)	14 (1.45)	966 (100.0)
2009	2 (0.21)	66 (6.99)	321 (34.00)	530 (56.14)	25 (2.65)	944 (100.0)
2010	1 (0.11)	50 (5.56)	308 (34.22)	527 (58.56)	14 (1.56)	900 (100.0)
2011	1 (0.09)	75 (7.10)	405 (38.32)	559 (52.89)	17 (1.61)	1,057 (100.0)
2012	4 (0.39)	68 (6.60)	359 (34.82)	586 (56.84)	14 (1.36)	1,031 (100.0)
2013	2 (0.20)	72 (7.27)	332 (33.54)	568 (57.37)	16 (1.62)	990 (100.0)
2014	1 (0.11)	35 (3.75)	279 (29.90)	595 (63.77)	23 (2.47)	933 (100.0)
2015	1 (0.11)	32 (3.64)	251 (28.52)	563 (63.98)	33 (3.75)	880 (100.0)
2016	3 (0.35)	30 (3.49)	275 (31.98)	533 (61.98)	19 (2.21)	860 (100.0)

30 노동패널자료 연구(Ⅳ)

〈표 1-12〉 노동패널 : 임금근로자

(단위: 명, %)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합계
2005	22 (0.40)	413 (7.56)	3,219 (58.90)	1,770 (32.39)	41 (0.75)	5,465 (100.0)
2006	15 (0.27)	425 (7.61)	3,117 (55.78)	1,991 (35.63)	40 (0.72)	5,588 (100.0)
2007	15 (0.27)	393 (7.01)	3,021 (53.88)	2,155 (38.43)	23 (0.41)	5,607 (100.0)
2008	21 (0.37)	303 (5.36)	2,996 (52.95)	2,312 (40.86)	26 (0.46)	5,658 (100.0)
2009	27 90.40)	368 (5.48)	3,260 (48.53)	3,004 (44.72)	59 (0.88)	6,718 (100.0)
2010	10 (0.15)	249 (3.65)	3,503 (51.36)	3,029 (44.41)	29 (0.43)	6,820 (100.0)
2011	7 (0.10)	217 (3.19)	3,362 (49.40)	3,187 (46.83)	33 (0.48)	6,806 (100.0)
2012	8 (0.12)	221 (3.19)	3,421 (49.43)	3,235 (46.74)	36 (0.52)	6,921 (100.0)
2013	6 (0.09)	214 (3.09)	3,417 (49.39)	3,247 (46.93)	35 (0.51)	6,919 (100.0)
2014	3 (0.04)	151 (2.25)	3,429 (51.00)	3,110 (46.26)	30 (0.45)	6,723 (100.0)
2015	3 (0.04)	171 (2.43)	3,486 (49.49)	3,364 (47.76)	20 (0.28)	7,044 (100.0)
2016	1 (0.01)	134 (1.85)	3,498 (48.18)	3,595 (49.52)	32 (0.44)	7,260 (100.0)



〈표 1-13〉 복지패널 : 임금근로자

(단위: 명, %)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합계
2005	67 (1.46)	569 (12.39)	2,098 (45.68)	1,804 (39.28)	55 (1.20)	4,593 (100.0)
2006	53 (1.25)	462 (10.87)	1,622 (38.16)	2,019 (47.51)	94 (2.21)	4,250 (100.0)
2007	29 (0.67)	379 (8.77)	1,631 (37.72)	2,156 (49.86)	129 (2.98)	4,324 (100.0)
2008	48 (1.14)	369 (8.78)	1,732 (41.22)	1,977 (47.05)	76 (1.81)	4,202 (100.0)
2009	16 (0.37)	302 (7.05)	1,325 (30.94)	2,534 (59.16)	106 (2.47)	4,283 (100.0)
2010	15 (0.36)	227 (5.52)	1,356 (32.99)	2,434 (59.22)	78 (1.90)	4,110 (100.0)
2011	27 (0.53)	322 (6.34)	1,752 (34.52)	2,913 (57.39)	62 (1.22)	5,076 (100.0)
2012	14 (0.28)	252 (4.97)	1,587 (31.31)	3,127 (61.70)	88 (1.74)	5,068 (100.0)
2013	12 (0.24)	303 (6.13)	1,570 (31.74)	2,956 (59.77)	105 (2.12)	4,946 (100.0)
2014	7 (0.15)	216 (4.56)	1,353 (28.58)	3,049 (64.41)	109 (2.30)	4,734 (100.0)
2015	8 (0.17)	183 (3.93)	1,214 (26.10)	3,084 (66.31)	162 (3.48)	4,651 (100.0)
2016	8 (0.17)	171 (3.66)	1,273 (27.28)	3,100 (66.42)	115 (2.46)	4,667 (100.0)

#### 4. 전반적 생활 만족도의 이행행렬 및 표본이탈

##### 가. 자영업자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각각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5년에 각 개인이 응답한 전반적 생활 만족도가 2016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행행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4>와 <표 1-15>의 이행행렬 표에서 대각선상에 위치한 응답은 2005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한 응답을 한 사람들을 나타내며, 대각선 위에 위치한 응답은 2005년에 비해 2016년에 생활 만족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나타낸다. 반대로 대각선의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은 2005년에 비해 2016년에 생활 만족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먼저 노동패널에서의 결과는 <표 1-14>에 제시되어 있는데, 생활 만족도에 변화가 없어 대각선상에 위치한 응답은 584명으로 약 54.8%, 대각선 위쪽에 위치한 상향응답이 345명으로 약 32.4%, 대각선 아래쪽에 위치한 하향응답은 136명으로 약 12.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5년보다 2016년에 생활 만족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2.6배 이상 많음을 나타낸다. <표 1-15>에 제시된 복지패널에서는 대각선상의 불변응답은 248명으로 약 43.9%, 대각선 위쪽의 상향응답이 234명으로 약 41.4%, 대각선 아래쪽의 하향응답은 81명으로 약 14.3%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 2016년에 생활 만족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2.9배 이상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패널데이터의 경우 처음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조사기간 전체에 빠짐없이 응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탈할 경우에는 전반적 생활 만족도의 이행행렬의 결과에 편의(bias)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표본이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두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을 시점으로 2016년까지 자영업자 표본이탈 빈도 및 비율을 살펴보면 <표 1-16>과 같다. 노동패널의 경우 11년 동안 단 한 번도 표본에서 이탈하지 않은 개인은 2005년 자영업자 전체 1,445명 중 834명으로 57.7%를 차지하였으며, 복지패널의 경우는 1,113명 중 568명으로 48.9%를 기록해 노동패널의 표본이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14〉 노동패널 이행행렬(2005년 기준 자영업자)

만족도 수준		2016					합계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2005	1: 매우 불만족	0	0	7	1	0	8
		(0.00)	(0.00)	(87.50)	(12.50)	(0.00)	(100.0)
	2: 대체로 불만족	0	6	57	29	0	92
		(0.00)	(6.52)	(61.96)	(31.52)	(0.00)	(100.0)
	3: 그저 그렇다	0	11	372	249	0	632
		(0.00)	(1.74)	(58.86)	(39.40)	(0.00)	(100.0)
	4: 대체로 만족	0	6	116	206	2	330
		(0.00)	(1.82)	(35.15)	(62.42)	(0.61)	(100.0)
	5: 매우 만족	0	0	1	2	0	3
		(0.00)	(0.00)	(33.33)	(66.67)	(0.00)	(100.0)
합계	0	23	553	487	2	1,065	
	(0.00)	(2.16)	(51.92)	(45.73)	(0.19)	(100.0)	

〈표 1-15〉 복지패널 이행행렬(2005년 기준 자영업자)

		2016					합계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2005	1: 매우 불만족	0	1	6	2	0	9
		(0.00)	(11.11)	(66.67)	(22.22)	(0.00)	(100.0)
	2: 대체로 불만족	1	8	29	35	0	73
		(1.37)	(10.96)	(39.73)	(47.95)	(0.00)	(100.0)
	3: 그저 그렇다	0	11	94	158	3	266
		(0.00)	(4.14)	(35.34)	(59.40)	(1.13)	(100.0)
	4: 대체로 만족	0	9	51	146	2	208
		(0.00)	(4.33)	(24.52)	(70.19)	(0.96)	(100.0)
	5: 매우 만족	0	0	2	7	0	9
		(0.00)	(0.00)	(22.22)	(77.78)	(0.00)	(100.0)
합계	1	29	182	348	5	565	
	(0.18)	(5.13)	(32.21)	(61.59)	(0.88)	(100.0)	

〈표 1-16〉 표본이탈 빈도 및 비율

이탈횟수	노동패널		복지패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	834	57.7	568	48.9
1	133	9.2	39	3.8
2	74	5.1	36	3.4
3	51	3.5	29	2.9
4	42	2.9	41	3.2
5	42	2.9	33	2.5
6	42	2.9	28	2.7
7	38	2.6	55	5.0
8	61	4.2	49	4.8
9	46	3.2	40	4.2
10	37	2.6	82	7.9
11	45	3.1	113	10.5
총합	1,445	100.0	1,113	100.0

#### 나. 임금근로자

〈표 1-17〉과 〈표 1-18〉에 제시된 임금근로자의 이행행렬 결과를 보면, 노동패널에서는 대각선상에 위치한 응답은 1,518명으로 약 52.2%, 대각선 위쪽에 위치한 응답이 964명으로 약 33.1%, 대각선 아래쪽에 위치한 응답이 425명으로 약 14.6%로 나타나 2005년 대비 2016년에 생활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늘어났다고 응답한 사람이 2.2배 이상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패널의 경우에는 대각선상에 위치한 응답은 1,073명으로 약 46.3%, 대각선 위쪽에 위치한 응답이 1,000명으로 약 43.1%, 대각선 아래쪽에 위치한 응답이 245명 약 10.5%로, 2016년에 생활 만족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약 4.1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어 노동패널 응답자에 비해 만족도가 개선된 사람들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7〉 노동패널 이행행렬(2005년 기준 임금근로자)

		2016					합계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2005	1: 매우 불만족	0 (0.00)	1 (14.29)	6 (85.71)	0 (0.00)	0 (0.00)	7 (100.0)
	2: 대체로 불만족	0 (0.00)	20 (9.43)	137 (64.62)	55 (25.94)	0 (0.00)	212 (100.0)
	3: 그저 그렇다	1 (0.06)	42 (2.48)	899 (53.07)	747 (44.10)	5 (0.30)	1,694 (100.0)
	4: 대체로 만족	1 (0.10)	15 (1.55)	340 (35.20)	597 (61.80)	13 (1.35)	966 (100.0)
	5: 매우 만족	0 (0.00)	0 (0.00)	6 (21.43)	20 (71.43)	2 (7.14)	28 (100.0)
합계		2 (0.07)	78 (2.68)	1,388 (47.75)	1,419 (48.81)	20 (0.69)	2,907 (100.0)

〈표 1-18〉 복지패널 이행행렬(2005년 기준 임금근로자)

		2016					합계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2005	1: 매우 불만족	0 (0.00)	6 (17.65)	14 (41.18)	14 (41.18)	0 (0.00)	34 (100.0)
	2: 대체로 불만족	1 (0.34)	24 (8.14)	135 (45.76)	135 (45.76)	0 (0.00)	295 (100.0)
	3: 그저 그렇다	4 (0.37)	49 (4.59)	354 (33.18)	643 (60.26)	17 (1.59)	1,067 (100.0)
	4: 대체로 만족	2 (0.22)	17 (1.90)	145 (16.22)	694 (77.63)	36 (4.03)	894 (100.0)
	5: 매우 만족	0 (0.00)	0 (0.00)	2 (7.14)	25 (89.29)	1 (3.57)	28 (100.0)
합계		7 (0.30)	96 (4.14)	650 (28.04)	1,511 (65.19)	54 (2.33)	2,318 (100.0)

한편, 임금근로자의 표본이탈 빈도 및 비율을 살펴보면, 노동패널의 경우 표본 이탈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개인은 2005년 임금근로자 전체 4,041명 중 2,116명으로 52.4%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패널의 경우는 4,697명 중 2,271명으로 48.4%를 기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패널의 표본이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19〉 표본이탈 빈도 및 비율

이탈횟수	노동패널		복지패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	2,116	52.4	2,271	48.4
1	464	11.5	184	3.9
2	219	5.4	164	3.5
3	150	3.7	140	3.0
4	124	3.1	147	3.1
5	124	3.1	112	2.4
6	120	3.0	129	2.8
7	129	3.2	238	5.1
8	166	4.1	230	4.9
9	146	3.6	205	4.4
10	144	3.6	378	8.1
11	139	3.4	499	10.6
총합	4,041	100.0	4,697	100.0

〈표 1-20〉 만족도 이행행렬 및 표본유지율 종합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노동패널	복지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만족도 유지(%)	54.8	43.9	52.2	46.3
만족도 개선(%)	32.4	41.4	33.1	43.1
만족도 악화(%)	12.7	14.3	14.6	10.5
개선/악화(배수)	2.6	2.9	2.3	4.1
전 기간 표본유지율(%)	57.7	48.9	52.3	48.3

두 패널에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만족도 이행행렬과 표본유지율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1-20>에 제시되어 있다. 이행행렬 분석결과 차이와 표본이탈의 체계적인 연관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제6절 맺음말

본 장에서는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만족도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고 그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자영업자의 상대적 만족도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자영업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력, 연령, 소득, 근로시간 등 삶의 만족도 수준과 연관성이 높은 요인들을 구분한 후, 각 요인 집단별 만족도 수준 및 차이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두 패널 간 분석대상 변수의 구성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만족도 변수에서는 건강 만족도를 제외한 7개 영역에 대해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모두 공통적인 질문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질문에 대한 응답의 척도는 두 패널 간 상이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표본의 인적 특성을 세분하여 그 비중을 확인한 결과 두 패널 간에 차이는 크지 않지만 복지패널의 표본 구성상의 특징으로 인해 세부 특성별로는 비중의 차이가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상대적 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임금근로자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두 패널 모두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 수준의 추세적 증가가 확인되었다. 또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만족도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 생활 만족도와 여타 만족도 항목 간 상관관계에서는 노동패널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복지패널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만족도 변수들과 관련 영향요인

들과의 관계에서는 소득의 경우 두 패널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 값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된 반면 근로시간은 두 패널 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표본 특성에 따른 전반적 생활 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우선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모두에서 자영업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연령, 소득 및 근로시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에는 두 패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 항목, 이행행렬, 표본이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응답 항목별 변화의 경우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결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었으며,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의 생활 만족도가 더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행행렬과 표본이탈의 분석결과에서는 두 패널 간 분석결과에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이행행렬에서는 자영업자의 만족도 개선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임금근로자는 그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이탈 비율은 노동패널의 이탈률이 복지패널에 비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행행렬 분석결과와 차이와 표본이탈의 체계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두 패널 간 만족도 분석결과와 차이는 패널 조사시점 및 샘플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시점에서의 만족도를 묻고 있는 노동패널과는 달리 복지패널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만족도와 같이 회고적 시점에서 만족도를 묻고 있다. 또한 표본추출에 있어서도 두 패널 간 지향하는 정책지원의 목적이 상이하기에 노동패널의 경우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있으나, 복지패널은 전체 샘플에서 저소득층을 과다 포함하여 표본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만족도의 수준 및 차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두 패널 간 특성에 대한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제 2 장

# 가계재정 관련 지표 : 노동패널과 국민계정 및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비교

### 제1절 서론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노동 관련항목을 중심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시통계조사이다. 대면조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종단면으로 취합하고 있는 노동패널조사는 가구와 개인의 노동시장 내 위상에 대한 정보 이외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노동과 연관이 깊은 가구·개인의 사회경제적 행위 및 여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 그중에서도 노동 행위에 대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가계재정에 관한 조사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계재정 관련 자료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계층 간 소득불균형의 심화, 인구구조의 고령화, 청년실업 등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가계재정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미시조사자료의 활용이 커지고 있다. 정책당국과 연구자들이 가계재정자료가 포함된 미시조사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도 최근 미시조사자료 활용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분석연구에서는 미시조사자료를 가계재정 관련 거시경제지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미시조사자료의 결과를 이해하

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sup>11)</sup>

이와 같은 미시조사자료의 활용성 확대는 조사자료 또는 지표 간 정합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 미시조사자료의 합이 일정부분 거시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하에 조사자료의 분석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거시적 함의를 인정하고 있고, 서로 다른 조사자료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조사대상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하에 미시조사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른 조사자료의 결과를 설명한다. 통상 가계재정 관련 자료에서는 국민계정상의 자료들과 정합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조사자료 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조사, 재정패널조사 등에서의 분석결과가 일관될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료 간의 정합성 확인은 검토된 바가 없다.

본 장에서는 노동패널조사의 가계재정 관련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가계재정지표의 총합과 국민계정상의 가계재정 관련 거시지표들 간의 정합성을 점검한다. 또한 가계재정지표를 대상으로 노동패널조사와 통계청 미시조사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가계재정지표의 정합성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전제되어온 자료 간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패널조사의 정책연구 정당성과 활용성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재정 관련 자료 간 비교·분석은 두 부문으로 구분한다. 우선 총합자료 부문으로 노동패널조사의 가계재정지표를 한국은행 국민계정상의 그것과 비교하고, 다음으로 조사자료 부문으로 노동패널조사의 가계재정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분석한다.

비교·분석대상 가계재정 관련 지표는 자산과 부채, 저축, 가처분소득,

11) 2000년대 후반부터 가계재정 문제를 미시조사자료를 통해 분석한 국내 정책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부채와 원리금상환비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지표와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동시에 확인한 김우영·김현정(2010)의 연구를 비롯하여, 가계부채 확대와 소비 진폭을 확인하고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가계 차입계약의 영향을 설명한 유경원·변혜원(2012), 거시지표를 통한 지역 가계부채 현황분석에 기반하여 미시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분석한 유경원·김기호(2016), 가계부채의 유량효과와 저장효과를 확인함에 있어 미시자료와 거시자료를 혼용하여 활용한 강중구(2017), 가계부채와 기혼여성 노동공급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송혜재·신우리(2017), 세대별 가계부채 특징과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관계기관합동(2017. 10. 24)과 성현구·박범기(2018)의 연구 등이 이에 속한다.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들 지표는 가계의 재정상황을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이다. 자산과 부채는 가계의 금융 리스크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이고, 저축은 노동과 소비 등 가계의 경제활동이 금융 및 자본거래로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한 지표이며 동시에 가계재정의 근간을 보여주는 지표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재정 관련 지표의 유량과 저량을 연결하는 지표이고 원리금 상환액은 가계부채의 부담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본고는 이들 항목을 비교·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들을 통해 생성되는 이차적 정책준거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자료별 차이를 확인한다. 정책준거지표로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비율(DSR), 저축률 등을 비교한다.<sup>12)</sup>

## 제2절 가계재정 관련 지표의 국민계정과 노동패널조사 간의 비교

### 1. 가계재정 관련 총합지표 비교

#### 가. 가계자산

한국은행 국민계정상에서 보여주는 가계재정 관련 총량지표와 노동패널조사상의 가계재정 관련 합산지표를 직접적으로 상호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계정상의 가계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하고 있고, 노동패널조사는 조사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일부 지표의 경우 자료 간 개념이 일치하지 않거나 정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가계재정 관련 지표의 비교를 위해 비교대상 자료 간에 가계재정지표의 정의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선에서 개념을 조정하여 비교하였다.

12) 총합지표 부문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을 국민계정상에서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비교·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지표 부문에서는 저축액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비교·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계자산의 경우 노동패널조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국민계정에서의 가계자산의 개념을 금융자산과 비금융비생산자산, 그리고 비금융생산자산 중 건설자산 및 지식재산생산물만을 합한 것으로 재설정하였다(표 2-1 참조). 노동패널에서는 가계의 자산을 조사할 때 생산에 이용되는 부동산을 조사하지 않고 주거와 주거 외 부동산 중 주택, 건물, 임야, 토지만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민계정은 생산과 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설비자산이나 재고자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비교 시 이를 제외해야 두 자료 간 가계자산 개념이 일정부분 일치하게 된다. 국민계정상의 실물자산 중 비금융생산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재산생산물의 경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연구개발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오락, 문화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을 조사하고 있는 관계로 가계자산 비교 시에 부득이 이를 포함하였다.

<표 2-2>는 가계자산에 대한 국민계정과 노동패널조사 간의 총량 및 합산지표를 비교한 결과이다. 노동패널조사의 가계자산 대비 국민계정의 가계자산 비율이 1.76 내외로 나타나 두 자료상의 지표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금융자산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표 2-1> 가계자산의 합산지표 비교

	국민계정	노동패널조사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폐용 금, 현금통화와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대출금</li> <li>- 지분증권,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금융자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적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보험</li> <li>- 타지 않은 계, 대여금</li> </ul>
실물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금융생산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생산에 이용되는 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귀중품</li> <li>- R&amp;D,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락, 문학 및 예술품 등 지식재산생산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사업용 제외)</li> <li>- 주택, 건물</li> <li>-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고가내구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금융비생산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자산, 지하자원 및 임목자산</li> <li>- 계약, 리스, 면허권, 마케팅 자산 등 무형자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권</li> <li>- 토지, 임야, 기타</li> </ul>

〈표 2-2〉 가계자산 총량지표와 합산지표 비교

(단위: 조 원)

	항목	2010	2013	2016
국민계정 (A)	가계자산 <sup>1)</sup>	6,569	7,517	9,005
	금융자산	2,215	2,678	3,389
	실물자산 <sup>1)</sup>	4,342	4,822	5,596
노동패널 (B)	가계자산 <sup>2)</sup>	3,718	4,294	5,119
	금융자산	712	838	1,115
	실물자산 <sup>2)</sup>	3,006	3,456	4,004
비율 (A/B)	가계자산	1.77	1.75	1.76
	금융자산	3.11	3.20	3.04
	실물자산	1.44	1.40	1.40

주: 1) 상기 표에서의 국민계정상의 실물자산은 설비자산, 재고자산을 제외하였음. 이는 설비자산은 생산을 위한 자산,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한 자산으로 노동패널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실물자산 조사 범주와 일치하지 않은 데 기인함.

2) 노동패널의 경우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응답이 어려울 경우 범주형 조사항목의 중앙값을 이용하여 합산하였으며, 10억 원 이상인 경우 10억 원으로 간주하여 합산.

한 차이는 2010년 지표 간 비율이 2016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지표 간 차이에 일정하게 작용하는 체계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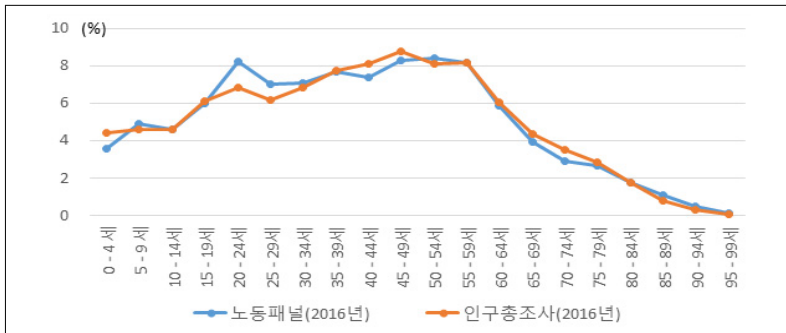
자료분석의 한계상 합산지표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지하는 바대로 국민계정이 가계 이외에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여 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노동패널조사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자산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 중 하나로 현금성 금융자산(현금, 금)에 대한 현황과약이 조사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민계정상에는 연금과 보험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나 노동패널에서는 저축성보험만을 금융자산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금융자산의 차이를 설명하는 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노동패널조사상에서의 가구구성원 분포가 실제 가구구성원의 연령층 분포와 비교하여 20대 연령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도 전체 자산액 차이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2015년 인구총조사의 가구구성원의 연령층 분포와 노동패널조사의 가구원 연령층 분포를 비교해본 결과, 노동패널조사에서 금융자산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9세 연령층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40~49세 연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sup>13)</sup> 노동패널조사에서 부동산 조사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히핑(heaping) 문제도 자료 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노동패널조사는 부동산 개별 자산에 대해 시가조사보다는 총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 및 실물자산 모두 정확한 시가총액을 모를 경우 범주형 조사항목을 통해 자산을 파악하고 있어 히핑의 문제가 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sup>14)</sup> 또한 국민계정상의 자산은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고 기간 말 잔액인 반면, 노동패널조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잔액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평가대상 자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지표에서 나타난 가계자산의 차이를 일정부분 설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가계부채

노동패널조사의 가계부채는 판매신용만 제외되었다는 점<sup>15)</sup>을 제외하

13) <인구총조사 연령별 인구분포와 노동패널조사의 연령별 가구원 분포(2016년)>



14) 주거외 부동산 시가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한 가구에 대한 범주형 조사항목에서 1억 원 이상 범주형 항목에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009년 전체 가구 대비 5.35%에서 2016년 7.31%로 2%p 증가하였으며, 10억 원 이상 범주형 항목에 대한 응답비중은 2016년 현재 전체 가구 대비 0.5%로 비교적 높은 응답비중을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응답오차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표 2-3〉 가계부채의 합산지표 비교

	국민계정	노동패널조사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대출</li> <li>- 기타대출</li> </ul> </li> <li>• 비금융기관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대출</li> <li>- 기타대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부채</li> <li>• 비금융기관 부채</li> <li>• 기타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보증금, 전세금 받은 금액</li> <li>남은 계, 기타</li> </ul> </li> </ul>
	• 판매신용	자동차 값아야 할 금액

고 나머지 부채 개념은 국민계정의 부채개념과 유사하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기타 부채로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받은 금액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계정에 기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다.

가계부채도 국민계정상의 부채수준이 노동패널조사상의 가계부채 합산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4>에서 보면, 국민계정상의 가계부채는 2016년 말 현재 1,567조 원이며 노동패널조사의 합산지표는 885조 원으로 추계되어 노동패널조사의 가계부채대비 국민계정 부채비율이 1.77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계자산에서 보여준 두 자료 간 차이와

〈소유부동산 시가액수 조사결과의 분포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안다	88.05	89.06	87.69	87.31	87.89	88.02	88.84	88.29
정확히 알지 못한다	11.95	10.94	12.31	12.69	12.11	11.98	11.16	11.71
(1) 1천만 원 미만	0.7	0.54	0.64	0.43	0.34	0.28	0.22	0.13
(2) 1천~2천 5백만 원 미만	1.13	0.97	0.88	0.81	0.68	0.69	0.63	0.53
(3) 2천 5백~5천만 원 미만	1.7	1.51	1.21	1.72	1.28	1.36	1.37	1.33
(4) 5천~7천 5백만 원 미만	1.38	1.27	1.33	1.27	1.39	1.4	1.18	1.18
(5) 7천 5백만~1억 원 미만	1.7	1.44	1.48	1.47	1.62	1.39	1.17	1.23
(6) 1억~2억 원 미만	2.13	1.99	2.72	2.62	2.54	2.4	2.28	2.64
(7) 2억~3억 원 미만	1.19	1.36	1.35	1.51	1.47	1.51	1.36	1.75
(8) 3억~4억 원 미만	0.46	0.75	0.97	0.92	0.9	0.95	0.76	0.98
(9) 4억~5억 원 미만	0.54	0.42	0.52	0.74	0.77	0.75	0.72	0.58
(10) 5억~10억 원 미만	0.61	0.43	0.72	0.74	0.69	0.76	0.91	0.86
(11) 10억 원 이상	0.42	0.25	0.48	0.46	0.44	0.5	0.56	0.5
(6)~(11) 1억 원 이상인 경우	5.35	5.2	6.76	6.99	6.81	6.87	6.59	7.31

15) 자동차 할부구입에 따른 할부잔액은 판매신용에 포함하였다.

〈표 2-4〉 가계부채 총량지표와 합산지표 비교

(단위:조 원)

		2010	2013	2016
국민계정(A)		1,006	1,219	1,567
가계신용(B)		843	1,019	1,343
가계대출(C) <sup>1)</sup>		794	961	1,270
노동패널(D)		604	773	885
비교 (비율)	(A/D)	1.66	1.58	1.77
	(B/D)	1.40	1.32	1.52
	(C/D)	1.31	1.24	1.43

주: 1) 가계신용 중 판매대출을 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유사한 수준으로 가계자산과 부채 모두에서 국민계정과 노동패널조사 간에 일정한 측정오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지표로서 활용성이 높은 한국은행 가계신용의 경우 역시 2016년 말 현재 1,343조 원으로 노동패널조사의 합산 추계를 상회하고 있다. 노동패널조사 부채 조사항목에 판매대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한국은행의 가계대출이 노동패널조사의 부채 합산지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가계자산과 달리 최근 들어 국민계정 또는 가계신용과 노동패널조사 간의 가계부채 비율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계정 가계부채와 노동패널조사 가계부채 합산지표의 차이는 2013년 1.66에서 2016년 1.77로 차이가 확대된 상황이며, 가계신용과의 차이는 2013년 1.40에서 2016년 1.52로 상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패널조사에서의 부채 관련 조사항목에 자동차를 제외하고 판매대출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 자산과 마찬가지로 노동패널조사에서 부채의 절대적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2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부채 수준이 높은 40대 비중이 낮다는 점, 부채가 많은 가구의 표본 탈락 가능성 등이 합산결과의 차이가 변하는 잠재적 이유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구조적인 주요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



## 다.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의 경우 국민계정상에서 정의하는 순조정가처분소득의 개념을 노동패널조사에 적용하여 비교한다. 순조정가처분소득은 일차적으로 가계에 분배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의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하고 이차적으로 분배되는 소득 및 부에 대한 경상세, 순보조금과 순경상이전 등의 과정을 거쳐 순처분가능소득을 정의한 후 마지막으로 정부나 비영리단체로부터 가계로 이전되는 현물을 포함함으로써 정의된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패널조사에서는 근로, 금융, 부동산 등을 통해 파악되는 세후 소득을 조사함으로써 요소비용국민소득과 경상세를 통한 분배소득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과 비소비지출, 이전 및 기타소득을 고려함으로써 국민계정상의 사회부담금과 수혜금, 기타경상(순)이전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 분배 단계에 있는 사회적 현물이전에 대해서는 노동패널조사 내 이전소득이 현물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소득을 통해 이미 현물이전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계정상의 순조정가처분소득과 노동패널조사의 소득합산 지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9% 내외(1.19)의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국민계정상에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득이 포함된 데 기인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조사항목 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체계적 원인이 있다 하겠다.

한편, 노동패널이 19차년도까지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사결과가 2016년 당시 시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득자료의 경우 2차년도 이후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어 2016년의 소득 자료를 국민계정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계정상의 순조정가처분소득과 노동패널조사의 합산지표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보면 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가 지난해 소득을 대변하기보다는 조사 현재 시점의 소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은 국민계정상의 순조정가처분소득 증가율과 노동패널 소득 합산지표 증가율을 노동패널의 조사 기준(조사된 소득을 지난해 소득으로 간주)과 조사시점 기준(조사된 소득

〈표 2-5〉 순조정가처분소득의 합산지표 비교

	국민계정	노동패널
1차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용자보수</li> <li>• 영업잉여</li> <li>• 재산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근로소득<sup>1)</sup></li> <li>• 금융소득<sup>1)</sup></li> <li>• 부동산소득<sup>1)</sup></li> </ul>
2차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li> <li>• 사회부담금(-)</li> <li>• 사회수혜금</li> <li>• 기타경상(순)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험</li> <li>• 비소비지출(-)<sup>2)</sup></li> <li>• 이전소득</li> <li>• 기타소득</li> </ul>
3차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현물(순)이전<sup>3)</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소득</li> </ul>

주: 1) 노동패널조사상의 소득은 세후소득으로 조사.

2) 비소비지출은 지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조사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가구의 기타 소득에 해당.

3)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나 가계비영리단체가 가계에 제공하는 현물이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표 2-6〉 순조정가처분소득 총량지표와 합산지표 비교: 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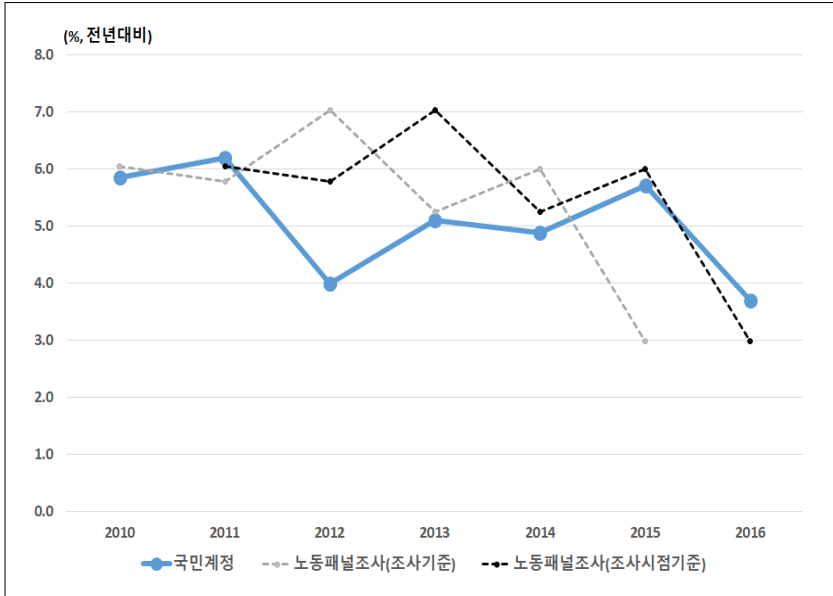
(단위: 조 원)

		2010	2013	2015	2016
국민계정(A)	순조정가처분소득	750	870	965	1,000
노동패널(B)	합산지표	631	749	807	-
비교(비율)	(A/B)	1.19	1.16	1.19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을 당해 연도 소득으로 간주)으로 분리하여 비교한 결과다. 노동패널조사상의 조사기준에 따라 소득증가율을 국민계정과 비교하면 그 추이가 국민계정상의 조정가처분소득과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조사시점 기준으로 보면 국민계정과 노동패널조사의 두 지표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패널조사가 소득과 지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조사기준에 따라 지난해 소득을 파악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지만, 실제 응답자는 당해 연도 소득과 지출을 응답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 소득, 노동의 변화를 상호간 비교할 경우 비교시점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2-1] 순조정가처분소득 총량지표와 합산지표 비교 : 조사 기준 vs. 조사시점 기준



주: 조사 기준은 노동패널조사의 소득 및 지출항목의 조사결과를 조사 기준에 따라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시점 기준은 소득 및 지출항목을 조사한 당해연도를 소득과 지출의 발생시점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2-7> 순조정가처분소득 총량지표와 합산지표의 조사시점 기준 비교

(단위: 조 원)

		2010	2013	2015	2016
국민계정(A)	순조정가처분소득	750	870	965	1,000
노동패널(B)	합산지표	591	714	791	807
비교(비율)	(A/B)	1.27	1.22	1.22	1.2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결국, 순조정가처분소득에 대한 국민계정과 노동패널조사 간의 비교를 조사 기준이 아닌 조사시점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노동패널조사의 소득합산지표는 국민계정의 순조정가처분소득의 약 82% 수준으로 18% 내외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사 기준에서 나타난 차이보다 2%p 정도 높은 수준이다.

## 라. 가계저축

가계저축은 국민계정상의 저축과 노동패널조사의 저축의 개념이 상이하다. 국민계정상에서는 순저축을 순조정가처분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에 활용된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불어 제외한 다음, 저축행위로 간주되는 국민연금 지분 조정분을 더함으로써 정의한다. 반면 노동패널조사의 저축은 개념적인 정의에 따르기보다는 금융자산의 형태로 축적하는 자산취득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만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가구의 저축금액을 조사한 다음, 저축 형태의 조사항목으로서 예·적금, 연금, 보험 등의 금융자산 형태를 조사하는 구조로 저축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축을 금융자산의 취득결과로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계정 내 소득사용계정을 통해 파악하는 순저축보다는 금융계정상의 금융자산 순취득 개념과 유사하다. 만일 노동패널조사에서 저축의 개념을 저축여력으로 파악한다면 실제 가계의 저축이 비금융자산 취득과 같은 자본축적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계저축 규모는 노동패널조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축의 합산결과보다 클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로 인해 실제로 국민계정과 노동패널조사의 (순)저축은 <표 2-9> 상단(국민계정(A)과 노동패널(B))에서 보듯이 자산과 부채, 소득에서 살펴본 차이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계정의 순저축을 노동패널조사상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순저축이 도출되는 소득사용계정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노동패널조사에서도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하는 간접적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국민계정상의 순조정처분가능소득에 대응한 소득 합산지표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연납입금액을 더함으로써 국민계정 저축개념에 상응하는 노동패널조사의 저축 합산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생활비는 국민계정상의 실제최종소비지출 대응 항목이며, 국민연금 연납입액은 국민계정상의 국민연금지분조정분에 해당된다(표 2-8 참조).

<표 2-9>의 하단은 국민계정상의 순저축과 노동패널조사에서 순저축을 추산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표 2-9>의 상단은 노동패널조사에서 직접 조사항목을 통해 파악한 저축과 국민계정의 순저축과의 차

〈표 2-8〉 순저축의 합산지표 비교

	국민계정	노동패널
소득(A)	• 순조정처분가능소득	• 소득조사항목 합산 <sup>1)</sup> (비소비지출 제함)
소비(B)	• 실제최종소비지출 (사회적 현물이전 포함)	• 생활비 <sup>2)</sup>
국민연금(C)	• 국민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 국민연금 연납입액
순저축	A-B+C	A-B+C

주 : 1) 국민계정상의 순조정처분가능소득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소득합계에서 비소비지출 합산결과를 제함.

2) 원리금 상환액 제외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이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계정과 노동패널조사의 저축수준의 차이 비교는 노동패널조사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이는 이미 소득 부분에서 확인하였듯이 조사기준에 따라 지난해 소득을 파악하였더라도 현재의 소득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계정상의 순저축과 노동패널조사의 순저축 추산지표(소득-소비+국민연금)는 2010년 43%(1.43)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같은 시기 노동패널조사상의 저축액이 보여준 차이(2.64)보다 많이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노동패널조사에서 순저축 추산액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16년에는 국민계정 순저축과의 차이가 127%(2.27)까지 확대된

〈표 2-9〉 순저축 총량지표와 합산지표의 조사시점 기준 비교

(단위 : 조 원, 배)

		2010	2013	2015	2016
국민계정(A)	순저축	31.1	43.1	79.3	76.5
노동패널(B)	저축	11.8	15.8	17.6	18.5
비교(비율)	(A/B)	2.64	2.74	4.51	4.13
국민계정(C)	순저축	31.1	43.1	79.3	76.5
노동패널(D)	순저축(소득-소비+국민연금)	21.8	28.8	32.9	33.7
비교(비율)	(C/D)	1.43	1.50	2.41	2.27

주 : 조사시점 기준으로 비교.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그림 2-2] 순저축 총량지표와 합산지표의 추이 비교



주: 노동패널조사의 순저축의 결과는 조사시점 기준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처분소득의 차이가 2016년까지 일정했던 점을 미루어볼 때 생활비로 측정된 노동패널조사의 소비지출 증가폭이 국민계정보다 높게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의 순저축 추이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2]는 국민계정과 노동패널조사의 순저축 증가율 추이를 규모를 달리하여 본 것으로, 순저축 증가율의 진폭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변동 방향이 시점별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 2. 가계재정 정책준거지표의 총합자료 비교

가계재정지표는 그 조합을 통해 정책준거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가계재정지표가 가지는 고유의 의미는 지표조합을 통해 정책적 의미를 갖게 된다. 대표적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Debt to Asset: DTA),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저축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과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각각 광의와 협의의 채무상환능력을 설명하거나

한 경제의 레버리지 정도를 보여주게 된다. 저축률은 저축의 절대적 크기에 대한 의미보다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기반이나 충격흡수 능력, 가계의 재무건강 정도 등을 보여주게 된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먼저 살펴보면, 국민계정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10년 15.3%에서 2016년 17.4%로 2.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2010년 16.3%에서 2016년 17.3%p로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2016년에는 두 자료에서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두 자료에서 보이는 시계열 추이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계정상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노동패널조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 상승한 이후 2013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노동패널조사의 부채비율 패턴은 동 조사의 가계부채의 (국민계정 대비) 상대적 수준이 같은 기간에 낮아진 추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국민계정상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2010년 134.2%에서 2016년 156.6%로 20%p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노동패널조사에서는 2010년 102.2%에서 2016년 109.6%로 7.4%p 상승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증가폭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료 간 비율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계정의 부채비율 대비 노동패널조사의 부채비율은 2010년 1.31에서 2016년 1.43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처럼 두 자료 사이의 부채비율 차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계정에 비영리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항목 중 판매신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차적으로 부채에 대한 계상범주가 다른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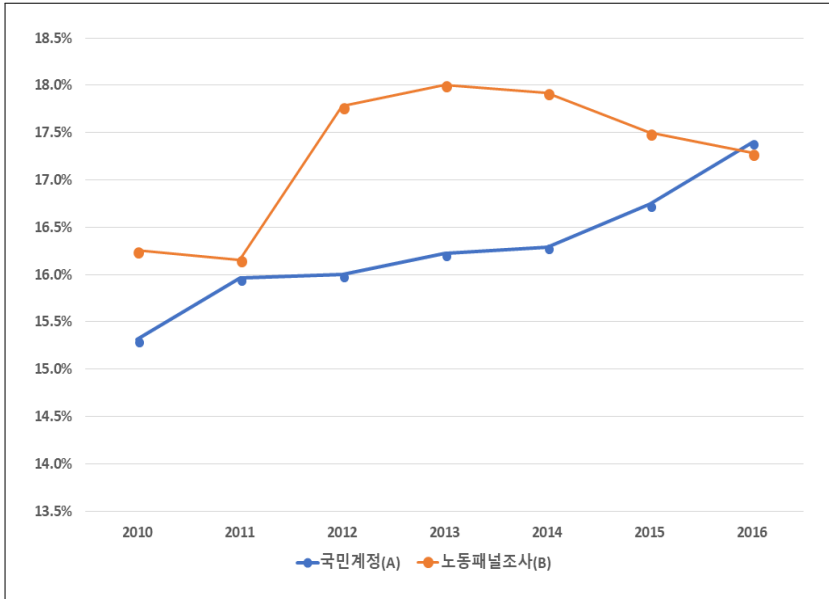
〈표 2-10〉 종합지표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 비교

(단위: %, 배)

	2010	2013	2016
국민계정(A)	15.3%	16.2%	17.4%
노동패널(B)	16.3%	18.0%	17.3%
비율(A/B)	0.94	0.90	0.99

주: 국민계정상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에서 자산은 설비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임.

[그림 2-3] 종합지표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 추이 비교



<표 2-11> 종합지표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비교(vs. 국민계정)<sup>1)2)</sup>

(단위: %, 배)

	2010	2013	2016
국민계정(A)	134.2%	140.1%	156.6%
노동패널(B)	102.2%	108.3%	109.6%
비율(A/B)	1.31	1.29	1.43

주: 1) 소득 대비 부채 중 소득은 순조정가처분소득.

2) 노동패널의 순조정가처분소득은 조사 기준이 아닌 조사시점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즉, 2016년에 조사한 소득은 2016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조사시점 기준의 합산소득의 추이가 국민계정상의 소득과 유사하였기 때문임.

이에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판매신용이 제외된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재추산한 결과를 보면, 2010년 노동패널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후에도 두 자료 간의 비율 차이는 국민계정과 비교한 결과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이용하여 추산한 소득 대비 부채비



을 역시 2010년 대비 2016년에 20%p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패널조사의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계정상의 순조정가처분소득과 노동패널조사의 소득의 차이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추이상의 격차는 노동패널조사의 부채합산지표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조정처분가능소득(국민연금 증가분 포함) 대비 순저축으로 살펴본 순저축률은 국민계정이 2016년 현재 7.6%를 기록한 반면, 노동패널조사는 4.1%로 나타났다. 2010년에 국민계정의 순저축률이 4.1%이고 노동패널조사는 3.6%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저축률의 차이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는 순저축 합산자료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패널조사의 순저축 합산자료가 2013년 이후부터 낮게 추산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2> 종합지표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비교(vs. 가계대출)<sup>1)2)3)</sup>

(단위: %, 배)

	2010	2013	2016
가계대출(A)	105.9%	110.4%	127.0%
노동패널(B)	102.2%	108.3%	109.6%
비율(A/B)	1.036	1.019	1.158

주: 1) 2) <표 2-11>과 상동.

3) 가계대출은 한국은행의 가계신용자료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것임.

<표 2-13> 종합지표의 순저축률 비교

(단위: %, 배)

	2010	2013	2016
국민계정(A)	4.1%	4.9%	7.6%
노동패널(B)	3.6%	3.9%	4.1%
비율(A/B)	1.15	1.25	1.87

### 제3절 가계재정지표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조사 간의 비교

#### 1. 가계재정 조사자료 비교

앞서 국민계정과와의 비교가 거시적 측면에서 노동패널조사의 정합성을 살펴본 것이라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 간 비교·분석의 목적은 조사자료 간의 미시적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준거 자료로서 활용성이 높으며, 같은 조사자료인 노동패널조사는 다년간 축적된 가구(개인)패널 조사자료로서 노동 등 다양한 조사항목을 포함하여 각종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정책대상 단위에서의 비교가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2016년 조사자료의 가계재정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연령계층과 소득계층의 구분을 통해 두 조사자료의 정합성을 확인한다.

#### 가. 가계자산

<표 2-14>는 노동패널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의 구성을 비교한 것이다. 자산의 조사항목으로 보면 두 조사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패널조사의 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 외 기타 자산 등을 포함한 기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실물자산의 경우 부동산과 함께 자동차 및 기타 실물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두 조사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예·적금과 저축성 보험을 조사하고 있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적립식 저축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 노동패널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두 조사의 자산 구성항목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조사의 자산분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자산항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조사의 자산은 연령계층(가구주)과 소득분위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2-15 참조). 하지만, 노동패널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비율이 연령계층에서는 30~60세 미만 계층에서 1.34~1.38, 소득계층에서는 소득 2~4분위 사이에서 1.41~1.45로 비교적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점이라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30세 미만 구간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규모가 노동패널조사의 자산 규모를 크게 상회(1.75)하고 있다는 점이며, 60세 이상에서는 동 비율이 1.24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소득분위에서는 소득 1분위에서의 노동패널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비율이 1.04로 다른 소득분위에서보다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며, 소득 5

〈표 2-14〉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조사 비교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패널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금융 자산	저축액	적립식	예·적금	금융 자산
		예치식	주식, 채권, 기타	
		기타 저축(권리금, 빌려준 돈, 불입한 꺾돈 포함)	아직 타지 않은 게, 빌려준 돈, 기타	
	전·월세 보증금	(전·월세) 임대보증금 거주 외 임대보증금		
실물 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거주주택 시가	부동산 자산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거주 외 소유부동산(주택, 건물, 임야, 토지, 기타)	
		계약금·중도금	×	
	기타 실물 자산	자동차	자동차	기타 자산
		자동차 외 기타 실물자산	자동차 외 기타 자산	

분위에서는 동 비율이 1.53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노동패널 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혼용하여 정책연구를 진행할 경우 두 조사 상 일정한 자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더불어 연령과 소득 측면에서 특정 계층 내 자산규모 차이가 타 계층의 차이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표 2-16>은 두 조사의 자산구간별 가구자산 평균액을 비교한

<표 2-15> 자산의 가구주 연령계층별 및 소득분위별 비교(2016년)

(단위: 만 원, 배)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가계금융복지조사(A)	9,603	24,409	34,805	44,785	35,646
노동패널(B)	5,501	18,004	25,934	32,553	28,700
비율(A/B)	1.75	1.36	1.34	1.38	1.24
	소득1 분위	소득2 분위	소득3 분위	소득4 분위	소득5 분위
가계금융복지조사(A)	11,858	19,753	26,436	38,892	79,613
노동패널(B)	11,367	13,765	18,244	27,572	52,031
비율(A/B)	1.04	1.44	1.45	1.41	1.53

<표 2-16> 자산구간별 가구자산 평균액 비교(2016년)

(단위: 만 원, 배)

자산금액	가계금융복지조사(A)	노동패널(B)	비율(A/B)
1천만 원 미만	356	417	0.85
1천만~5천만 원 미만	2,751	2,977	0.92
5천만~1억 원 미만	7,346	7,549	0.97
1억~2억 원 미만	14,879	15,089	0.99
2억~3억 원 미만	24,715	24,976	0.99
3억~5억 원 미만	38,792	38,534	1.01
5억~7억 원 미만	58,621	59,194	0.99
7억~10억 원 미만	82,509	82,799	1.00
10억 원 이상	188,477	159,050	1.19

것이다. 자산구간에 따른 가구자산 평균액은 두 조사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한과 하한 구간인 10억 원 이상과 1천만 원 미만 구간에서 두 조사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1천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노동패널조사의 가구자산 평균액이 더 높았고, 10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자산 평균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계부채

<표 2-17>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조사의 부채 구성을 보여 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과 달리 세분류가 생략된 채 세세분류와 세부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노동패널조사는 조사항목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조사에서의 부채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금융부채는 대출의 성격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노동패널조사는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금융부채를 나누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금융부채를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외상 및 할부, 기타 부채 등 다섯 가지 세세분류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고 노동패널조사는 금융기관

<표 2-17>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부채 조사 비교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패널
중분류	세세분류	세부항목	
금융부채	담보대출	거주주택 담보,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담보, 금융 담보, 기타 담보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에게 빌린 돈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포함	
	신용카드 관련 대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	
	외상 및 할부	외상, 할부, 카드 선포인트 할부 등 미결제 잔액	
	기타 부채	겉돈을 탄 후 낼 금액	
임대보증금	거주주택 임대	거주주택의 일부를 임대	임대 보증금
	거주주택 이외 임대	거주주택 이외 주택, 건물, 부지 임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 부채 등 세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거주주택 임대보증금과 거주주택 이외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노동패널조사는 거주주택과 거주주택 이외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두 조사의 부채항목에 대한 구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령 및 소득 분위별 부채항목의 조사결과의 차이는 자산에서의 결과보다 작게 나타난다. 연령 계층별로 부채를 보면 40~60세 미만의 평균 부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조사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0.99~1.09)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40세 미만에서 연령계층이 낮아질수록 노동패널조사의 부채규모가 가계금융복지조사 대비 높아지는 것(1.12~1.17)으로 나타나며, 이는 연령층이 높은 60세 이상(1.24)에서도 나타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2분위와 3분위에서 부채의 규모가 두 조사자료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소득 1분위에서는 노동패널조사의 부채규모가 더 크게 조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소득 4, 5분위에서는 오히려 노동패널조사의 부채규모가 가계금융조사 대비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소득분위나 연령계층이 낮아질수록 두 조사 간의 부채규모 차이가 커진다는 사실은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계층 가구의 가계재정 상황 변화에 따른 경제행위의 민감도가 조사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18〉 부채의 가구주 연령계층별 및 소득분위별 비교(2016년)

(단위: 만 원, 배)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가계금융복지조사(A)	3,381	7,306	9,871	11,844	9,575
노동패널(B)	3,956	8,198	9,041	11,923	11,911
비율(A/B)	0.85	0.89	1.09	0.99	0.80
	소득1 분위	소득2 분위	소득3 분위	소득4 분위	소득5 분위
가계금융복지조사(A)	3,425	6,035	6,578	9,676	18,154
노동패널(B)	5,612	6,069	6,489	8,701	16,837
비율(A/B)	0.61	0.99	1.01	1.11	1.08

다.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부채 잔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패널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리금 상환액은 각각의 조사에서 금융부채 항목에서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패널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을 직접 제공하는 반면, 노동패널조사는 <표 2-19>와 같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본 장의 비교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외상 및 할부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패널조사의 부채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할부금을 포함하였다. 한편, 두 조사간에 원리금 상환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갚아야 할 원리금의 월평균 금액을 조사하고 있어 연평균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년도의 원리금 전액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원리금 상환액을 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30세 미만 및 60세 이상 구간과 소득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계층과 소득분위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리금상환액이 노동패널조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패널조사의 부채가 대부분의 계층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비슷

<표 2-19> 노동패널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리금 상환액 조사 비교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패널조사
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외상 및 할부,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금융기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외상,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비금융기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갯돈을 탄 후 낼 돈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
	자동차 할부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금액, 기타

〈표 2-20〉 원리금 상환액의 가구주 연령 계층별 및 소득 분위별 비교(2016년)

(단위: 만 원, 배)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가계금융복지조사(A)	374	1,094	1,143	1,122	560
노동패널(B)	471	576	601	641	668
비율(A/B)	0.79	1.90	1.90	1.75	0.84
	소득1 분위	소득2 분위	소득3 분위	소득4 분위	소득5 분위
가계금융복지조사(A)	187	483	825	1,202	2,006
노동패널(B)	241	336	428	564	1,004
비율(A/B)	0.78	1.44	1.93	2.13	2.00

하거나 큰 것으로 나타난 부채 조사자료의 비교결과와 상반된다. 30세 미만과 60세 이상 구간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리금 상환액이 노동패널조사의 원리금 상환액보다 낮은 모습을 보인 반면, 30세 이상 60세 미만 구간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리금 상환액이 노동패널조사의 원리금 상환액보다 1.75~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 구간에서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리금 상환액이 노동패널조사의 원리금 상환액보다 낮았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노동패널조사의 원리금 상환액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전체적으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리금 상환액이 노동패널조사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소득 5분위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sup>17)</sup>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합에서 공적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임금), 사업소

16) 부채가구만으로 두 조사를 비교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17)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근로소득(임금)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



득,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합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처분소득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 반면, 노동패널조사는 가처분소득의 정의에 따라 가처분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표 2-21>은 두 조사의 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처분소득 항목과 노동패널조사의 가처분소득 항목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두 조사 간의 가처분소득 항목은 거의 일치된다. 다만, 공적이전소득과 공적 비소비지출의 세부 항목에서

<표 2-21>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처분소득 조사 비교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패널조사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세금공제 전 소득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봉급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을 뺀 금액	자영업자 소득(세후)
재산소득	금융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및 주택·건물·토지 임대수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
	부동산소득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
사적이전소득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인척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의 친척·친지의 지원금,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등
공적이전소득		공적 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금, 기타 정부보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보훈연금, 체육연금 등) 기타 정부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사회보장 수급액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기타 정부보조금(기초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및 장애인 연금 등), 농어업 정부보조금,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유가보조금, 체육연금 등)
공적 비소비지출		공적 연금, 사회 보험료(국민연금 기여금, 기타 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주: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처분소득을 직접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패널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항목별 소득이나 지출은 가계금융복지조사표를 이용하여 정리하였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적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등인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만 월평균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다른 공적 연금 보험료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총액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조사 간에 차이가 있다.

연령계층별 가처분소득을 보면, 30세 미만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처분소득이 노동패널조사의 가처분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노동패널조사의 가처분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을 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노동패널조사의 가처분소득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낮은 소득분위와 연령대에서 두 조사의 가처분소득 비율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자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30세 미만인 경우 다른 연령계층과는 달리 노동패널조사의 소득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1분위에서는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노동패널조사의 상대소득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22〉 가처분소득의 가구주 연령계층별 및 소득분위별 비교(2016년)

(단위: 만 원, 배)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가계금융복지조사(A)	2,998	4,132	4,648	4,858	2,444
노동패널(B)	2,392	4,365	5,125	5,405	3,070
비율(A/B)	1.25	0.95	0.91	0.90	0.80
	소득1 분위	소득2 분위	소득3 분위	소득4 분위	소득5 분위
가계금융복지조사(A)	735	1,952	3,263	4,805	8,892
노동패널(B)	856	2,077	3,299	4,872	9,062
비율(A/B)	0.86	0.94	0.99	0.99	0.98

## 2. 가계재정 정책준거지표의 조사자료 비교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채무 변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부담과 원리금상환 부담은 어느 수준인지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정책준거지표에서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조사 간의 차이가 클수록 자료선택에 따라 잘못된 정책 신호를 제시할 수 있다.

정책지표 중 먼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비교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조사 모두 연령이 가장 낮은 30대 미만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동 비율이 연령계층별로 26~35% 사이에 분포하는 반면,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35~72%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연령계층에 따라 자산 대비 부채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두 조사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30대 미만에서 113%를 기록하고 있고 점차 높아져 60세 이상에서는 392%로 크게 확대된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30대 미만이 165%를 기록하였고 60세 이상에서는 388%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두 조사가 연령계층 변화에 따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비율 수준은 연령계층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특히, 30세 미만 구간에서 노동패널조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비율을 52%p 상회하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30세 미만 구간에서 12%로 가장 낮은 반면, 노동패널조사에서는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구간에서 각각 20%와 22%를 기록하며 높게 나타났다. 노동패널조사에서 30세 미만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 부채와 낮게 나타난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준거지표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연령

〈표 2-23〉 정책준거지표의 연령계층별 비교(2016년)

(단위 : %)

정책준거 지표	조사 자료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 (DTA)	가계금융복지조사	35	30	28	26	27
	노동패널	72	46	35	37	42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	113	177	212	244	392
	노동패널	165	188	176	221	388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DSR)	가계금융복지조사	12	26	25	23	23
	노동패널	20	13	12	12	22

계층별 특징과 유사하게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조사에서 각각 소득 2분위와 소득 1분위 구간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소득분위가 높아지면서 동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소득 2분위에서 가장 높은 31%를 나타냈으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소득 1분위에서 가장 높은 49%를 기록하였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연령계층별에서 보인 특징과 달리 두 조사 모두에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소득 1분위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동 비율이 466%, 노동패널조사에서는 656%를 기록하며 타 분위 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두 조사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표 2-24〉 정책준거지표의 소득분위별 비교(2016년)

(단위 : %)

정책준거 지표	조사 자료	소득 1 분위	소득 2 분위	소득 3 분위	소득 4 분위	소득 5 분위
자산 대비 부채비율 (DTA)	가계금융복지조사	29	31	25	25	23
	노동패널	49	44	36	32	32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	466	309	202	201	204
	노동패널	656	292	197	179	186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SR)	가계금융복지조사	25	25	25	25	23
	노동패널	28	16	13	12	11

은 두 조사 모두에서 소득 1분위에서 가장 높았고, 다른 소득 구간에서는 대체로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일정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소득 1분위의 비율이 28%로 10%대를 기록한 타 분위 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가계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민계정과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패널 자료를 상호간 비교하였다. 통상 국민계정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경제현황과 정책 자료가 제시되고 있고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분석연구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패널의 자료 간 정합성 확인은 당연한 수순이고 불가피한 절차다. 이에 본 장은 가계재정지표를 기준으로 자료 간 정합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가계재정지표와 관련하여 노동패널 자료 활용 시 유의할 점은 자료 간 가계재정지표의 수준 차이가 비체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부 지표 간의 차이가 일정하게 나타나 차이의 체계성을 보이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총합자료의 경우 노동패널조사의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국민계정의 증가세보다 낮아 두 자료 간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순저축도 2013년 이후 노동패널조사의 합산자료가 국민계정 대비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조사자료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 시 소득수준이 낮거나 30세 미만의 청년층 가구 또는 60세 이상의 노년층 가구의 조사자료가 타 계층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계재정지표의 총합자료와 조사자료에서의 일관되지 않은 차이는 자산 또는 소득 대비 부채와 저축률과 같은 정책준거지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연구 시 연구자들은 이것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패널조사의 가계소득 조사자료가 조사 기준에 따라

지난해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사시점의 소득을 파악해왔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사 기준에 따라 지난해 가계계정상황을 파악하는 다른 조사항목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사시점이 아닌 작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간의 시차 상관관계를 유추하고자 할 경우 시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대면 조사 시 응답자에 대해 이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거나 과거 자료의 유용성 확보를 고려하여 조사시점 변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수행과 관련 연구 등의 활용을 위해 일부 노동패널조사의 가계계정지표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저축의 경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가계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직접 문의하고 이를 금융자산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계정상의 금융자산 순취득에 가깝다. 비금융자산 취득에 사용된 가계의 저축량이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패널조사에서 분석연구를 목적으로 저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정과 유사하게 ‘소득-소비+국민연금 증감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계해야 한다. 가처분소득은 정책준거지표의 핵심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상에서는 조사항목을 통해 가처분소득 추산을 위한 자료추출이 용이하나,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조사항목을 내용상 연계시켜야 하고 자료추산 시 조사항목의 내용상 오류 및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자산에 대한 범주형 조사항목의 세분화도 요구된다. 실물자산의 경우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10억 원 이상의 자산소유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조사자료 내에서 해당 자산규모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범주의 자산규모를 모르는 가구의 수도 증가할 수 있고, 특히나 실물자산 가치의 변화와 저축, 부채규모, 소비, 노동 등이 순차적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자산에 대한 범주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사방법 측면에서는 공동주택의 자산 가치가 대부분 조사시점에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물자산의 조사항목을 공동주택과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계층별 구성 변화를 위한 표본 보정도 재고해야 할 사항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민계정상의 총합자료와의 차이는 인구총조사 대비 조사가구원 인구구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패널조사의 특성상 조사가구원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자료 간 지표의 추세와 비체계적인 차이를 유발할 경우 가구원 분포에 대한 보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조사자료 간의 비교에서 확인하였듯이 30대 미만과 소득 1분위에서의 노동패널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두드러진 차이가 있어 표본 보정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제 3 장

출산 자료 :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및  
재정패널의 비교

## 제1절 서론

2017년 통계청의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16년 1.17명에 비해 10% 이상 급감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 1.1명 이하로 떨어진 것 역시 2005년(1.08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3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전망에 비해 18년이나 빠른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 감소, 소비위축 및 고령화와 연결되어 장기적 불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18년 정부의 저출산 문제해결에 투입되는 예산은 30조 원이 배정되어 있다. 지난 12년여 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정책수요층의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저출산 문제해결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특히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 및 여성 경력단절 해소 등,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하였다.<sup>18)</sup>

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8년 7월 5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미시 레벨의 가구 또는 가구원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은 동적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패널데이터 구조하에서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차(2017년) 조사까지 이루어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KLIPS에서 출산사건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KLIPS에서 분석한 출산이력이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출산율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 판단하고자 한다. KLIPS와 유사한 가구·가구원 패널자료인 재정패널조사(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율을 추계하고 이 결과를 노동패널 출산율과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는 패널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출산사건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동시적으로(jointly) 분석할 수 있는 기초분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절 분석대상 선정

본 절에서는 KLIPS에서 출산사건을 정의하고 출산율 추계에 필요한 분석대상에 관하여 논의한다. KLIPS의 가구레벨 조사 데이터에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조사자료가 수록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변수인 가구원의 생년(birth year)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가구원의 생년 변수를 이용하면 특정 연도에 태어난 가구원 수를 총합하여 연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식 3-1)과 같이 연령그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을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은 현재  $t$ 시점에서 예상한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출생아 수로 해석할 수 있다.

$$TFR_t = \sum_{a=1}^7 (5 \times ASFR_{a,t}) / 1000 \quad (3-1)$$

위 식에서  $ASFR_{a,t}$ 는 여성 연령그룹  $a$ 의  $t$ 년도 1,000명당 출생아 수로 정의한다. 연령그룹은 통계청의 KOSI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연령그룹별 출산율과 매칭하기 위해 15~49세를 5세 간격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5세 간격 연령그룹은 모두 7개로 구분된다. 합계출산율은 각 연령그룹  $ASFR$ 의 합계로 정의되며 5세 연령그룹이고 1,000명당 출생아 수이기 때문에 여성 1명당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얻기 위해서 다시 1,000으로 나누어 준다.

2018년 5월 현재 KLIPS는 19차(2016년) 조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KLIPS에서 가구원의 출산연도는 조사연도(wave)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령 2015년 출생아는 조사시점 등의 이유로 18차(2015년)에서 모두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 이후 조사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19차(2016년) 데이터에서만 2016년 출생아 수를 합하여 2016년 출산율로 추계한다면 2016년 TFR은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합계출산율 계산은 출산연도 1998~2015년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설명한 이유로 2016년 출생사건은 제외한다. 2016년 출생아는 2017년(20차) 조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관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식 (3-1)의 KLIPS 합계출산율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연령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1998년 이후 출생아의 어머니에 대해서 정의한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어머니를 선택하고 그 여성의 출생아를 매칭한다.

〈표 3-1〉 1998년 이후 출생아의 어머니에 대한 정의

- 
- 조건 1) 가구원이 여성  
 조건 2) 그 여성이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또는 그 여성과 가구주와의 관계가 첫째 자녀~여섯째 자녀인 경우  
 조건 3)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는 여성의 나이가  
       조사연도( $t$ )에 15세~49세인 경우
-

<표 3-1>에서 선택된 어머니의 자녀가 1998년 이후 출생자이면 그 자녀를 어머니에게 매칭시켜 분석용 데이터로 완성한다. [그림 3-1]에서는 어머니와 그에 매칭된 출생아의 예를 제시한다. 가구번호(hhid)=4에 속한 어머니(hpid)=402는 4차년도(2001년) 조사시점에서 1999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출생연도와 조사연도는 서로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조사시점 나이(age)와 출산시점 나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식 (3-2)와 같이 출산시점 어머니 나이(mom\_age)를 다시 계산하여 연령변수로 만들었다. *byear*는 자녀의 생년 변수이고 *year*는 KLIPS 조사연도이다. 따라서 조사연도(*year*)와 출생연도(*byear*)가 서로 같다면 출산시점 어머니 나이는 조사시점 어머니 나이와 같다.

$$mom\_age = age - (year - byear) \tag{3-2}$$

[그림 3-1]에서 어머니 번호(hpid)=1201은 KLIPS 조사기간 동안 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 나이=28살에 2004년생 자녀와 어머니 나이=32살에 2008년생 자녀가 있다.

KLIPS에서 추계된 1차(1998년)~18차(2015년) 연도별 출생아 수와 출생시점 어머니 평균 나이는 <표 3-2>에 정리되어 있다. 출생아 수는

[그림 3-1] 분석데이터 예시

	hhid	hpid	wave	age	byear	mom_age
1	4	402	4	32	1999	30
2	8	802	10	34	2005	32
3	12	1201	9	30	2004	28
4	12	1201	11	32	2008	32
5	21	2102	6	30	2000	27
6	22	2201	8	32	2000	27
7	22	2201	8	32	2003	30
8	35	3502	9	25	2005	24
9	5994	4202	6	31	1999	27
10	5648	5003	7	36	1998	30
11	52	5202	2	28	1999	28

〈표 3-2〉 연도별 출생아 수와 어머니 평균 나이 : 노동패널

출생연도	출생아 수	어머니 평균 나이
1998	286	28.7
1999	259	28.5
2000	294	28.7
2001	284	28.3
2002	252	29.1
2003	273	29.2
2004	247	29.5
2005	226	29.9
2006	282	30.6
2007	256	30.4
2008	243	30.5
2009	229	31.6
2010	236	31.7
2011	233	31.5
2012	235	31.9
2013	183	32.2
2014	203	32.2
2015	156	32.5

2000년에 294명으로 가장 많고 그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156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생시점 어머니 나이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출산연령은 2006년에 30세를 넘어섰고 2013년에 32세 이상으로 접어들었다.

### 제3절 KLIPS 합계출산율

(식 3-1)에서 정의한  $TFR_t$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령그룹별 1,000명당 출생아 수에 해당하는  $ASFR_{a,t}$ 을 계산해야 한다.  $ASFR_{a,t}$

은 식 (3-3)과 같이 정의한다.  $Birth_{a,t}$ 는  $t$ 년도 연령그룹  $a$ 에 속한 여성의 출생아 수이다. <표 3-2>의 연도별 출생아 수를 연령그룹별 출생아 수로 분해하면 얻을 수 있다.  $POP_{a,t}$ 는 노동패널에서 집계한 연령그룹  $a$ 의 여성 인구로 정의한다. 연령그룹은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그리고 45~49세와 같이 총 7개 그룹으로 구분한다.

$$ASFR_{a,t} = \frac{Birth_{a,t}}{POP_{a,t}/1000} \quad (3-3)$$

<표 3-3>에서는 KLIPS에서 추계된 2015년의 연령그룹별 출생아 수와 여성인구, 그리고  $ASFR$  결과를 제시한다. 표본조사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15~19세 연령그룹과 45~49세 연령그룹에서는 출생아 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출생아 수는 30~34세 연령그룹에서 8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역시 125.6명으로 가장 많다. 25~2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66.5명이고 35~3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37.6명으로 2015년  $TFR$ 의 91%는 25~39세 여성의 출산에 의해 설명된다.

식 (3-1)에서 알 수 있듯이  $TFR_{2015}$ 은 <표 3-3>의 마지막 열(column)에 있는  $ASFR_{2015}$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의  $TFR$ 은 1.26명이 된다. 이는 2015년 연령별 출산율에 기초하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1.26명임을 의미한다.

<표 3-3> 2015년  $ASFR$  계산 : 노동패널

	$Birth$	$POP$	$ASFR$
15~19세	0	474	0
20~24세	6	497	12.07
25~29세	31	466	66.52
30~34세	80	637	125.58
35~39세	31	824	37.62
40~44세	8	754	10.61
45~49세	0	628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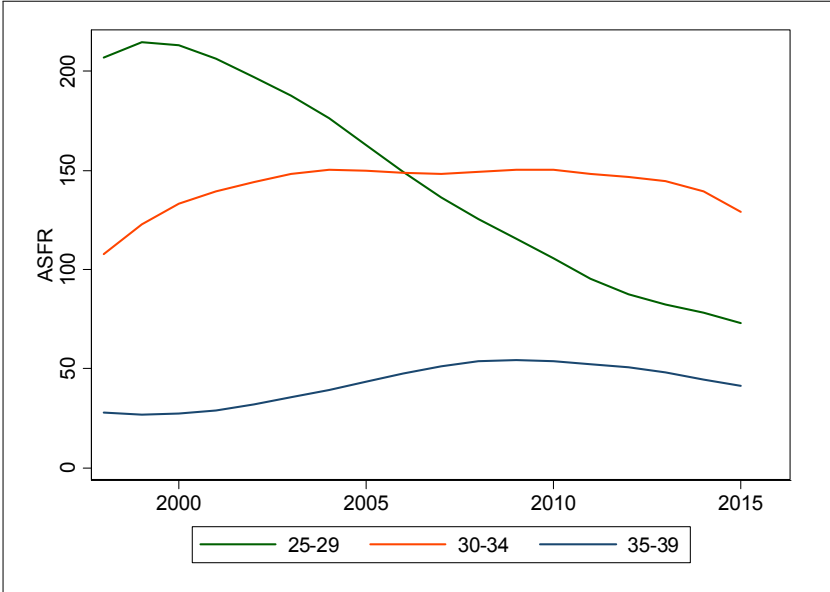
<표 3-3>과 같은 방식으로 1998~2015년 연령별 *ASFR*을 계산하고 그 합으로 각 연도별 *TFR*을 추계한다. 그 결과는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출생연도에서 15~19세 그리고 45~49세 연령그룹에서는 출생아 수가 관찰되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2.43명으로 가장 높고 2015년 1.26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계된다.

[그림 3-2]에서는 연령그룹 출산율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그룹별 Lowess Smoothing 라인그래프를 보여준다. *TFR*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3개 연령그룹인 25~29세, 30~34세, 35~39세 그룹의 *ASFR*을 비교한다. 2006년을 기점으로 30~34세 연령그룹 출산율이 모든 연령그룹 중 출산율 기여정도가 가장 높아졌다.

<표 3-4> 연도별 *ASFR*과 *TFR* : 노동패널

	<i>TFR</i>	<i>ASFR</i>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98	1.91	5.18	46.17	187.67	114.01	27.19	2.77	0.00
1999	1.95	3.01	38.92	212.26	106.32	26.75	1.53	1.87
2000	2.43	1.87	3.52	42.30	261.71	145.42	31.30	0.00
2001	2.35	2.04	1.90	65.45	224.33	151.57	20.30	6.48
2002	2.10	4.18	39.28	184.39	166.67	25.88	0.00	0.00
2003	2.08	0.00	26.23	210.29	145.74	33.33	1.60	0.00
2004	1.84	0.00	32.37	152.14	145.30	34.25	4.87	0.00
2005	1.67	2.23	21.40	131.12	136.74	41.22	1.62	0.00
2006	2.07	2.23	9.98	171.81	162.13	64.69	5.12	0.00
2007	1.95	0.00	21.60	153.37	155.94	55.64	3.65	0.00
2008	1.97	0.00	40.87	146.80	149.86	44.48	12.77	0.00
2009	1.52	0.00	22.45	81.94	133.01	62.35	4.30	0.00
2010	1.60	0.00	14.52	90.91	142.68	64.89	8.76	0.00
2011	1.60	1.88	6.44	95.74	161.37	48.16	7.37	0.00
2012	1.66	0.00	10.27	88.29	170.85	54.76	8.38	0.00
2013	1.35	2.07	13.54	70.56	138.48	40.40	4.29	1.60
2014	1.57	0.00	9.98	93.69	144.08	53.39	13.30	0.00
2015	1.26	0.00	12.07	66.52	125.59	37.62	10.61	0.00

[그림 3-2] ASFR 추세 : 노동패널



#### 제4절 합계출산율 비교 : 인구동향조사

표본조사가 아닌 모집단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Population Dynamics Survey: PDS)의 출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모수(parameter)에 해당하는 PDS와 KLIPS 합계출산율을 서로 비교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는 모의연령별 출산율과 그에 기초한 합계출산율을 제공하고 있다.<sup>19)</sup> 자료 제공기간은 2000~16년이지만 KLIPS 자료와 매칭하기 위해서 2000~15년을 선택하여 비교한다.

<표 3-5>에서는 인구동향조사(PDS)의 2015년 모의연령 그룹별 출산율과 노동패널(KLIPS)의 연령그룹별 출산율을 비교한다. PDS에 따르면 15~19세 그리고 45~49세 그룹에서도 1,000명당 출생아 수는 1.4명 그리

19) 'http://kosis.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 0.2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KLIPS에서는 해당 연령그룹의 출생아 수는 0명으로 나타난다. 인구동향조사에서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3명이고 노동패널에서는 1.26명으로 거의 유사하게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5년 출생아 수는 20차(2017년) 조사 이후에도 관찰될 수 있다. 따라서 20차 이후 데이터가 이용 가능하다면 2015년 출생아 수는 더 많아지고 따라서 KLIPS 합계출산율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5~29세 그리고 30~34세 연령그룹의 출산율은 두 데이터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림 3-3]에서는 PDS와 KLIPS에서 얻은 합계출산율 추세를 비교한다. <표 3-5>에서 확인하였듯이 2015년은 PDS와 KLIPS 합계출산율이 유사하다. 그러나 이 시점을 제외한 나머지 출생연도에서는 KLIPS 합계출산율이 과다추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구동향조사에서 나타난 합계출산율 추세는 KLIPS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2000년 대비 감소세). 특히 2000~05년 출산율은 두 자료에서 모두 꾸준히 감소한다. 다만, PDS에서는 2005년 이후 출산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KLIPS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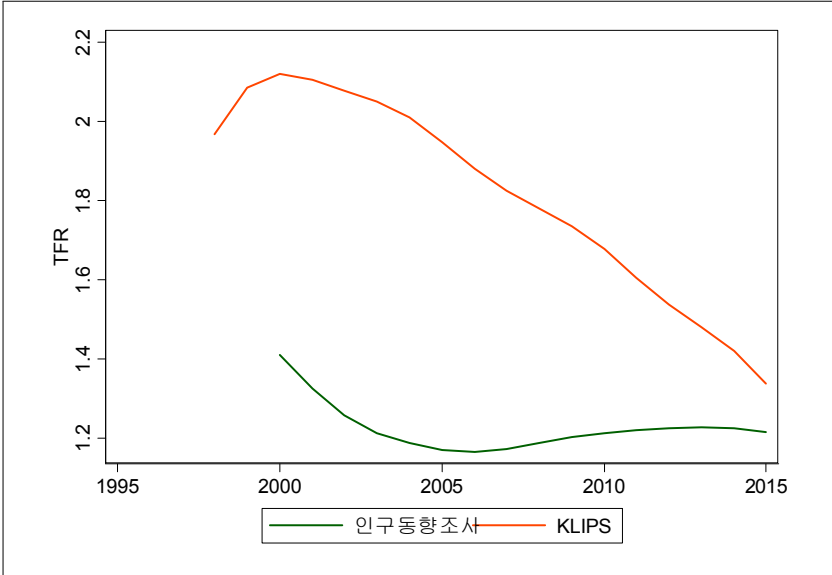
KLIPS에서 합계출산율이 과다추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KLIPS에서는 원가구에서 분가하는 가구를 추적한다. 분가된 가구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인 경우가 많다면 무작위적으로 가구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출산사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표 3-6>에 제시되어 있는, KLIPS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자료에서

<표 3-5> 2015년 연령그룹별 출산율 비교 :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연령그룹	인구동향조사 (PDS)	노동패널조사 (KLIPS)
15~19	1.4	0
20~24	12.5	12.1
25~29	63.1	66.5
30~34	116.7	125.5
35~39	48.3	37.6
40~44	5.6	10.6
45~49	0.2	0



[그림 3-3] 합계출산율 추이 : 인구동향조사와 노동패널



계산한, 2014년 15~49세 여성의 인구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출산확률이 가장 높은 30~39세 여성인구 비율이 KLIPS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출산가능성이 높은 여성이 KLIPS에서 더 많이 조사되고 따라서 출생아 수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표 3-6> 15~49세 여성인구 비율(2014년)

연령그룹	KLIPS	통계청
15~19세	0.11	0.12
20~24세	0.11	0.12
25~29세	0.11	0.11
30~34세	0.16	0.15
35~39세	0.17	0.14
40~44세	0.17	0.17
45~49세	0.14	0.16

## 제5절 합계출산율 비교 : 재정패널

본 절에서는 노동패널과 유사한 가구·가구원 패널조사인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얻은 합계출산율을 KLIPS와 비교한다. 이러한 분석은 미시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출산율 분석을 하는 연구자들에게 노동패널과 재정패널에서 출산사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출생아 수는 모수에 비해 과다(또는 과소) 추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하기 위해 적절한 패널자료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발표하는 재정패널은 1차(2007년)~10차(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노동패널과 유사하게 출산년도와 조사연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생연도는 2007~15년으로 한정하여 KLIPS와 비교한다.

<표 3-1>과 유사하게 재정패널에서도 출생아의 어머니를 정의한다. 노동패널과의 차이점은 재정패널 1차년도인 2007년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표 3-7>은 2007~15년 출생아 수와 출생아 어머니의 평균 나이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출생아 수는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데 2011년과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KLIPS 결과(표 3-2)와 비교해 보면, 재정패널의 출생아 수 자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사대상 가구 수가 더 적기 때문일 수 있다.<sup>20)</sup> 한편,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32.1세(2007년)에서 33.5세(2015년)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KLIPS 결과와 비교할 때 약간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노동패널에서는 32.5세, 재정패널에서는 33.5세로, 재정패널에서 1세 정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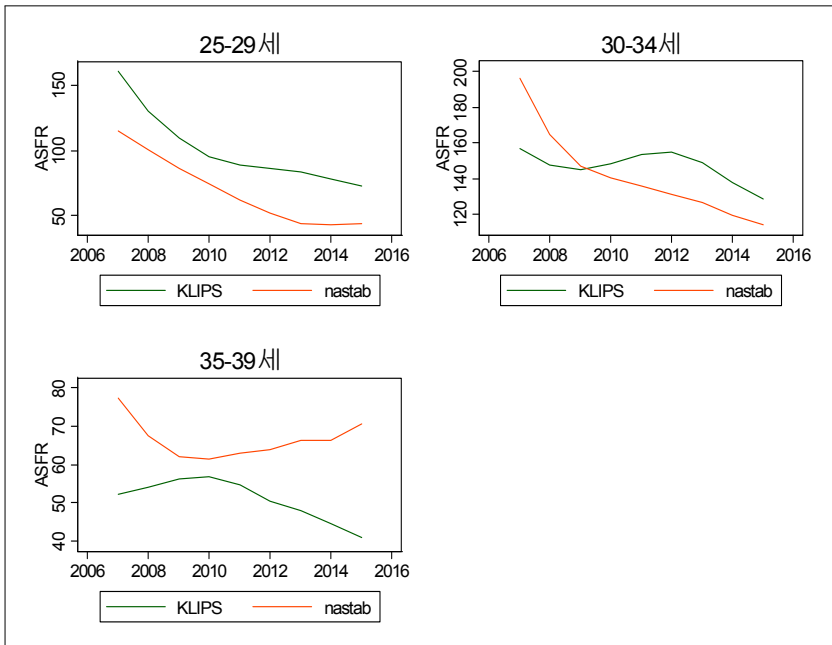
[그림 3-4]에서는 노동패널과 재정패널에서 각각 추계한 25~29세, 30~34세, 35~39세 연령그룹의 *ASFR* 결과를 비교한다. 노동패널과 유사

20) 재정패널의 원 가구는 5,634가구이고, 노동패널의 2009년 통합표본 가구는 6,721가구이다.

〈표 3-7〉 연도별 출생아 수와 어머니 평균 나이 : 재정패널

출생연도	출생아 수	어머니 평균 나이
2007	246	32.1
2008	182	32.4
2009	161	31.8
2010	136	32.4
2011	142	32.6
2012	127	33.2
2013	91	33.6
2014	109	33.8
2015	91	33.5

〈그림 3-4〉 25~39세 ASFR : 재정패널과 노동패널



하계 15~19세 그룹과 45~49세 그룹의 출생아 수는 대부분 0이다. 25~34세 그룹에서는 노동패널 ASFR이 재정패널 ASFR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추계된다. 그러나 35~39세 연령그룹에서는 재정패널에서 더 높

은 ASFR 수치를 보인다. 재정패널에서 고연령층 어머니 출산에 대해 과다표집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35~39세 연령그룹의 경우 KLIPS에서는 ASFR이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지만 재정패널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TFR 모수인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과 표본조사인 재정패널과 노동패널에서 추계된 합계출산율 비교는 <표 3-8>에 나타나 있다. 비교결과를 보면, 재정패널은 특히 2007년 시점에서 합계출산율이 과다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재정패널 합계출산율은 2.12명이지만 모수는 1.25명, 그리고 노동패널은 1.95명이다. 노동패널과 재정패널을 비교하면 2007년과 2009년을 제외한 나머지 출생연도에서는 노동패널에서 TFR이 더 높게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4]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이 높은 25~34세 ASFR이 노동패널에서 더 높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시점에서 출산율 감소추세는 노동패널과 재정패널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다.

재정패널에 비해 노동패널에서 합계출산율이 더 높게 추계된 이유는 여성인구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정패널에서는 고연령층 여성이 과다표집되고 따라서 그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에서는 재정패널과 노동패널의 2014년과 2015년 여성인구 비율을 비교한다.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점은 저연령층 15~24세 그룹과 고연령층 45~49세 그룹에서는 오히려 재정패널에서 여성인

<표 3-8> 인구동향조사, 노동패널, 재정패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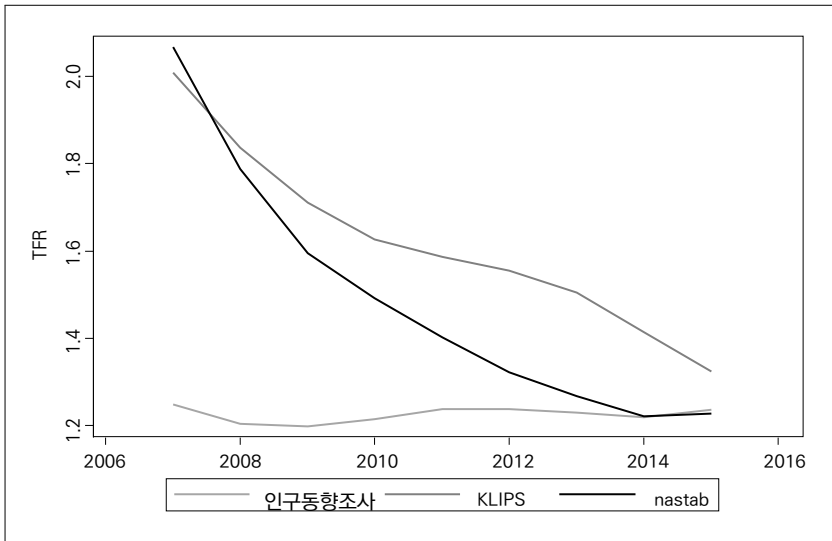
출생연도	TFR : 인구동향조사	TFR : 노동패널	TFR : 재정패널
2007	1.25	1.95	2.12
2008	1.19	1.97	1.61
2009	1.15	1.52	1.61
2010	1.22	1.60	1.38
2011	1.24	1.60	1.49
2012	1.29	1.66	1.35
2013	1.18	1.35	1.08
2014	1.20	1.57	1.32
2015	1.23	1.26	1.18

〈표 3-9〉 연령그룹별 여성인구 비율 : 2014년과 2015년

연령그룹	2014		2015	
	노동패널	재정패널	노동패널	재정패널
15~19세	0.11	0.14	0.11	0.14
20~24세	0.11	0.13	0.11	0.14
25~29세	0.11	0.09	0.11	0.10
30~34세	0.16	0.11	0.15	0.10
35~39세	0.17	0.14	0.19	0.14
40~44세	0.17	0.17	0.17	0.17
45~49세	0.14	0.19	0.15	0.19

구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들 연령그룹에서는 출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여성인구 그룹이 재정패널에서 과다추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출산율이 높은 연령그룹인 25~39세 그룹에서는 노동패널에서 여성 인구비율이 더 높다. 이러한 여성인구 비율의 차이가 노동패널에서 더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5) 노동패널, 재정패널, 인구동향조사 TFR



[그림 3-5]에서는 노동패널, 재정패널, 그리고 인구동향조사의 *TFR* 추세를 비교하고 있다. 노동패널에서 가장 높은 추정 값을 보이지만, 노동패널과 재정패널의 추세는 거의 유사하다. 두 패널 모두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한편, 인구동향조사의 출산율은 2007~15년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추이를 보여준다.

##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정부의 예산투입과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 미시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미시 서베이 데이터가 출산과 기혼여성 삶의 질에 관한 구체적인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패널은 1998~2016년까지 장기간 가구와 가구원을 조사한 패널서베이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출산 관련 연구의 출발점으로 노동패널 자료에서 기혼여성이 각 연도에 출산했는지 여부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노동패널 내에서 15~49세 여성의 출산사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각 연도별 출생아 수를 합하여 합계출산율을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인구동향조사와 재정패널 합계출산율과 비교한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패널 합계출산율은 인구동향조사와 비교하여 과다추정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노동패널 합계출산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지만 인구동향조사에서는 2007~15년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가구를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분가가구를 추적하는 패널서베이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패널서베이가 지속됨에 따라 출산가능성이 높은 연령그룹의 여성들이 더 많이 조사에 남아 있게 된다. 특히 노동패널에서 30~39세 연령에 속하는 여성의 비율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에서 추계한 비율보다

더 높다. 따라서 출산사건이 상대적으로 노동패널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동패널과 유사하게 재정패널에서도 출산사건을 정의하고 함께 출산율을 추정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 가구 수의 차이로 인해 연도별 출생아 수는 노동패널에서 더 많다. 집계출산율 역시 노동패널이 재정패널에 비해 더 높게 추정된다. 재정패널에서는 고연령층(45~49세)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동패널에서는 25~39세 연령층 여성비율이 더 높다. 이러한 연령별 표본구성의 차이가 노동패널에서 더 높은 집계출산율을 보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추세 면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노동패널과 재정패널 모두에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이와 같이 노동패널 자료에서 출산사건을 정의하고 출산과 연관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은 조사연도와 출생연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연도에 실제로 출생한 가구원이 있지만 그 가구원이 조사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해 조사에서 신규 가구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차(time lag)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관련 연구를 위해 노동패널에서도 출산력(birth history) 데이터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여지가 있다. 출산력 데이터에는 각 연도별로 출산한 여성만을 선택하여 그 여성의 출산정보(출생아 성별, 출생월 등)를 포함하고, 이에 더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취업 여부, 임금, 육아휴직 여부 등) 관련 변수를 함께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출산력 데이터는 노동패널 원 자료(raw data)와 병합하여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제 4 장

## 혼인 자료 :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및 복지패널의 비교

### 제1절 서론

제3장의 서론에서 언급한 저출산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는 혼인건수 감소와 만혼이라는 사회적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2014년 혼외출산 비율이 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출산의 98%는 기혼여성에 의한 출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건수 감소와 만혼 현상은 저출산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sup>21)</sup>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혼인통계에 따르면 초혼연령은 남자는 32.8세이고 여자는 30.1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을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2016년 5.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혼인사건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혼인이행이 발생하는지 또는 발생 시점이나 발생 이전 시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상황(임금 및 노동시장 참여 등)이 어떠한지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다(이상림, 2013; 이병재·김태완, 2018; 최필선·민인식, 2015 등). 이러한 동적 분석 또는 시차를 고려한 분석을 위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한 출산자료처럼 패널데이터 구조가 필요하다. 노동패널과 같은 장기패널 구조에서는 미혼인 가구원의 결혼 시점, 그리고 결혼 이후 시점까지 추적조사

2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차별 없는 비혼출산과 양육’의 제도적 보장이 저출산 해법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2018년 7월 6일 보도자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혼인사건 연구에 적절하다. 다만 노동패널자료의 본래 목적이 혼인사건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를 위해서는 혼인사건을 정의하고 혼인발생 여부를 변수로 생성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노동패널에서 혼인사건을 정의하고 혼인 시점을 변수로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표본조사인 노동패널에서 관찰된 혼인건수가 모집단의 혼인건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한다. 노동패널과 유사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urvey : KOWEPS)에서도 혼인사건을 정의하고 혼인건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노동패널과 비교한다. 이를 통해 혼인사건 분석에 노동패널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혼인사건과 혼인 후 발생하는 출산사건, 그리고 혼인 전후 시점에서 관찰되는 남편과 아내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대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설정과 추정에 필요한 분석용 데이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분석대상 선정

본 소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 관찰 가능한 혼인사건을 판별하고 조혼인율 및 연령별 혼인율을 추계하고자 한다. 노동패널(KLIPS) 가구 레벨에서는 가구주의 혼인상태에 대해서만 설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구 내에서 혼인상태가 2건 이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수준에서 혼인여부와 혼인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KLIPS 개인레벨 데이터에는 조사 초기 시점인 1차(1998년)와 2차(1999년)에 개인의 혼인연도에 해당하는 변수가 있다. 그러나 3차(2000년) 이후에는 혼인상태 변화가 있는 가구원에 대해서만 혼인연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가구원 수준에서 혼인사건을 판별하면 아내와 남편을 각자 따로 판단하게 되어 혼인건수가 중복되어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LIPS 조사에서 혼인사건이 발생한 남성(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를 매

칭시켜 혼인건수의 중복계산을 피할 수 있다.<sup>22)</sup>

연도별 혼인사건은 노동패널 조사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1998~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19차(2016년) 시점을 제외한 이유는 출산사건과 유사하게 혼인사건 역시 특정  $t$ 년도에 발생하더라도 노동패널 조사연도인  $t$ 년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 이후 조사연도  $t+s$  시점에서  $t$ 년도 혼인사건을 응답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혼인사건 수는 19차(2016년) 조사 데이터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사건 수가 과소추계될 가능성이 커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1>은 KLIPS에서 혼인사건을 정의하고 혼인연도를 변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3차(2000년) 조사 이후에는 혼인상태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개인 중에서 ‘초혼’에 해당하는 경우만 ‘혼인사건’으로 정의하였다. 혼인사건을 정의함에 있어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KLIPS에서는 혼인상태에 있는 남편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아내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가령 특정 가구 내에서 아내는 그 가구에서 조사되어 있지만 남편은 같은 가구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sup>23)</sup> 남편과 아내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에도 남편 또는 아내만 남겨둔 채로 혼인사건으로 정의한다. 둘째, 남편과 아내가 매칭된 경우, 두 사람의 혼인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더 빠른 연도를 응답한 경우를 그 부부의 혼인연도로 정의한다. 가령 남편의 응답에는 결혼연도가 1998년이고 아내의 응답에는 결혼연도가 1999년인 경우가 부부의 결혼연도는 1998년으로 통일하였다.<sup>24)</sup>

<표 4-1>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연도별 혼인건수( $marr_t$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래 식에서  $match_{it}$ 는  $t$ 년도에 혼인했다고 응답하였고 아내와 남편이 매칭된 혼인사건이다.  $hus_{it}$ 는  $t$ 년도에 혼인했다고 응답하였지만 남편만 있는 혼인사건이다.  $wife_{it}$ 는  $t$ 년도에 혼인했다고 응

22) 가구원과 그 해당 가구원이 가구주와 어떤 관계인지(가구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를 이용하여 남편과 아내를 매칭시킬 수 있다.

23) 예를 들어 남편이 일찍 사망하여 아내만 있는 가구가 있을 수 있다.

24) 아내와 남편의 결혼연도를 통일하지 않는다면 연도별 혼인사건이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표 4-1〉 혼인사건과 혼인연도 정의 : 노동패널

- 
- 조건 1) 1차(1998년)와 2차(1999년) 조사에서는 혼인상태에 있는 개인만 선택한다.  
조건 2) 조건 1을 만족하는 개인의 혼인연도를 변수로 만든다.  
조건 3) 각 개인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남편과 아내를 매칭시킨다.  
조건 4) 매칭된 혼인사건뿐 아니라 남편 또는 아내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에도 혼인 사건으로 남겨둔다.  
조건 5) 남편과 아내의 결혼연도가 다르게 응답된 경우는 둘 중 더 과거시점을 결혼연도로 통일한다.  
조건 6) 3차(2000년) 이후에 발생한 결혼사건은 혼인상태 변화가 ‘초혼’이라고 응답한 개인만을 선택하여 조건 2~조건 5를 반복하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에 포함한다.  
조건 7) 데이터를 완성한 후 남편 또는 아내의 혼인시점 나이가 45세 이상이면 삭제한다. 이런 경우는 초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답하였고 아내만 있는 혼인사건이다.

$$marr_t = \sum_i match_{it} + \sum_i hus_{it} + \sum_i wife_{it} \quad (4-1)$$

〈표 4-2〉에서는 KLIPS에서 추계된 연도별 혼인건수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혼인건수는 2000년에 18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2014년과 2015년은 92건과 80건으로 100건 미만으로 추계된다. 최근 혼인건수 감소 추세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sup>25)</sup> 앞서 설명하였듯이 KLIPS 조사시점(연도)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가구 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남편-아내가 매칭된 혼인사건이 대부분이지만 2015년 경우에는 43%(21건+13건)는 남편 또는 아내에 의해서만 혼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4-3〉은 연도별 혼인사건에서 계산된 남편과 아내의 평균 나이(혼인시점)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1998년 결혼한 남편의 평균 나이는 28.9세이고 아내는 26.1세이다. 그러나 2015년에는 남편은 평균 32.8세, 아내는 30세로 여성의 초혼나이도 30세에 이르렀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2015년 발표에 따르면 남자의 초혼연령은 32.4세이고 여자는 29.8세이다.

---

25) 2014년과 2015년의 혼인건수가 과소추계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2017년 이후 조사되는 KLIPS 데이터에서 2014년과 2015년 혼인사건이 추가될 수 있다.

〈표 4-2〉 연도별 혼인건수 : 노동패널

혼인연도	혼인건수	매칭된 혼인 건수	남편만 있는 혼인건수	아내만 있는 혼인건수
1998	134	112	7	15
1999	166	143	8	15
2000	187	148	20	19
2001	129	105	10	14
2002	149	117	11	21
2003	137	105	12	20
2004	143	105	14	24
2005	123	86	15	22
2006	140	99	22	19
2007	109	69	21	19
2008	115	76	21	18
2009	129	81	22	26
2010	124	68	32	24
2011	133	76	27	30
2012	119	63	29	27
2013	107	46	34	27
2014	92	45	19	28
2015	80	46	21	13

〈표 4-3〉 혼인시점 평균 나이 : 노동패널

혼인연도	남편 평균 나이	아내 평균 나이
1998	28.9	26.1
1999	28.5	25.7
2000	29.0	26.3
2001	29.2	26.6
2002	29.7	27.2
2003	29.4	26.9
2004	30.7	28.3
2005	30.2	28.1
2006	30.3	28.2
2007	30.9	28.2
2008	31.2	28.9
2009	30.3	28.2
2010	31.4	29.5
2011	31.8	29.5
2012	32.1	29.9
2013	32.1	29.3
2014	32.4	29.8
2015	32.8	30.0

[그림 4-1] 분석 데이터 예시

	hhid	pid	mar_year	type	pid_w	mar_age	mar_age_w
1	1	101	2003	남혼합인용	.	35	.
2	8	801	2004	남혼합인용	.	32	.
3	12	1203	2002	배우자인용	1201	32	26
4	22	2202	1998	배우자인용	2201	31	25
5	32	.	2012	*혼합인용	3206	.	40
6	35	3501	2004	배우자인용	3502	28	23
7	42	4205	1998	배우자인용	4202	30	26
8	57	5702	1998	배우자인용	5701	29	29
9	62	6203	1998	배우자인용	6202	31	26

KLIPS 자료에서 나타난 초혼연령과 큰 차이가 없다. KLIPS 조사에서도 초혼 시점 평균 나이가 점차 증가하는 만혼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1]에서는 저자들이 구축한 KLIPS 혼인자료 분석 데이터의 일부분을 보여준다. pid는 남편의 개인 id이고 pid\_w는 아내의 개인 id이다. mar\_year는 결혼연도이며, type은 남편-아내 매칭여부 변수이다. mar\_age와 mar\_age\_w는 각각 결혼시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나이이다. 데이터 구조상 observation의 수는 전체 혼인사건 수와 일치한다.

### 제3절 KLIPS 조혼인율 분석

KLIPS에서 구축한 연도별 혼인건수를 이용하여 연도별 혼인율을 계산할 수 있다.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로 정의한다. KLIPS에서 조혼인율은 식 (4-2)와 같이 정의한다.  $mar_{t, KLIPS}$ 는 <표 4-2>에서 추계된 연도별 KLIPS 혼인사건 수이고,  $POP_{t, KLIPS}$ 는 KLIPS 1차(1998년)~18차(2015년) 가구원 레벨에서 조사된 15세 이상 표본 수이다.<sup>26)</sup>

$$gmar_{t, KLIPS} = \frac{mar_{t, KLIPS}}{POP_{t, KLIPS}/1000} \quad (4-2)$$

26) 노동패널 가구원 조사에서는 15세 이상인 가구원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표 4-4>에는 1998~2015년 KLIPS에서 계산한 혼인건수와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조혼인율 계산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혼인율은 2000년에 16.68건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그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6건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림 4-2]에서는 KLIPS 조혼인율의 추세를 Lowess smoothing 라인 그래프로 보여준다. 2000년에 최대가 되고 그 이후 조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와 <표 4-6>에서는 연령별 조혼인율의 시계열 변화를 정리한 결과를 제시한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시점 연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편 연령그룹별 조혼인율과 아내 연령그룹별 조혼인율을 각각 계산한다.

<표 4-4> KLIPS 조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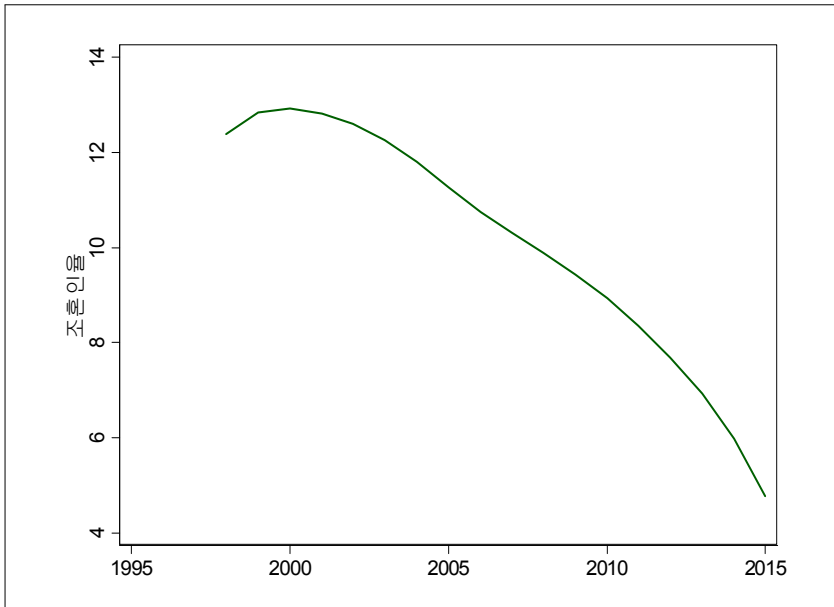
혼인연도	혼인건수	인구 (15세 이상)	조혼인율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998	134	13,321	10.05
1999	166	12,037	13.79
2000	187	11,205	16.68
2001	129	11,051	11.67
2002	149	10,966	13.58
2003	137	11,541	11.87
2004	143	11,660	12.26
2005	123	11,580	10.62
2006	140	11,756	11.90
2007	109	11,855	9.19
2008	115	11,734	9.80
2009	129	14,489	8.90
2010	124	14,117	8.78
2011	133	13,899	9.56
2012	119	13,998	8.50
2013	107	13,887	7.70
2014	92	13,168	6.98
2015	80	14,011	5.70

<표 4-2>에서 설명하였듯이 특정연도에 혼인사건은 발생하였지만 남편-아내가 매칭되지 않는 건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따로 혼인건수로 중복 계산될 여지가 있다. KLIPS의 이러한 특징은 연령별 혼인율을 과다추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남편의 조혼인율은 2008년까지는 25~29세 그룹에서 가장 높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30~34세 그룹에서 가장 높게 추계된다. 아내의 조혼인율은 1998~2015년 기간 내내 25~29세의 조혼인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10대와 20대 여성의 조혼인율은 감소세, 30대 이상의 조혼인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남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4-3]에서는 남편 연령그룹별로 조혼인율에 대한 추세 그래프를 비교한다. 혼인율이 가장 높은 3개 연령그룹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제시한다.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조혼인율 그 자체를 사용하는 대신 Lowess Smoothing 그래프를 보여준다. 2010년을 기점으로 30~34세의 조혼인율이 25~29세 그룹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25~29세 그룹의 조혼인율은 199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4-2] KLIPS 조혼인율 추세



〈표 4-5〉 연령그룹별 조혼인율 : 남편

혼인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1998	0	19.3	91.6	47.2	10.3	1.31
1999	1.5	22.6	142.8	64.3	5.9	3.0
2000	0	28.1	145.2	104.4	9.7	3.3
2001	0	14.9	99.1	75.2	8.8	1.7
2002	0	20.8	99.1	79.8	24.0	0
2003	0	16.9	99.4	61.7	11.9	3.3
2004	0	12.4	73.3	80.3	22.5	5.0
2005	0	6.3	76.2	63.1	17.3	1.7
2006	0	3.2	111.3	64.4	15.1	8.9
2007	0	6.5	62.1	61.2	12.7	9.3
2008	0	7.6	66.2	59.2	31.2	5.4
2009	0	17.1	59.5	73.6	12.2	1.4
2010	0	3.3	66.0	63.2	18.1	10.1
2011	0	6.7	61.1	73.7	22.6	8.5
2012	1.9	9.5	38.9	72.1	26.7	8.0
2013	0	0	59.7	61.3	19.1	8.1
2014	0	4.0	55.2	54.5	16.9	7.0
2015	0	0	0	37.7	6.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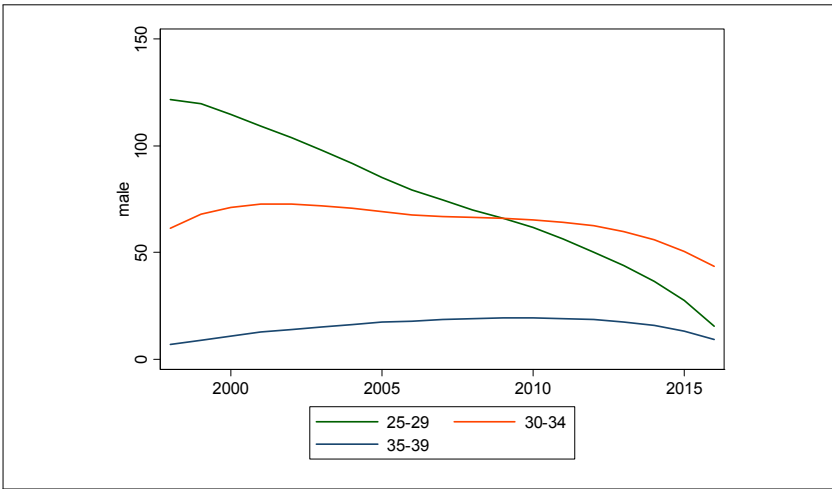
〈표 4-6〉 연령그룹별 조혼인율 : 아내

혼인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1998	5.8	46.3	101.2	9.6	6.2	2.7
1999	6.5	73.7	143.9	12.4	4.5	1.5
2000	1.9	64.9	179.9	31.0	1.5	1.6
2001	0	46.6	120.2	26.6	1.7	3.3
2002	2.3	46.2	151.2	38.6	5.6	0
2003	0	39.5	126.5	30.3	3.5	1.6
2004	0	23.0	124.7	42.9	17.5	1.6
2005	2.4	17.6	103.0	44.6	5.5	1.6
2006	0	22.8	133.5	29.6	10.7	3.4
2007	0	25.3	92.9	30.8	6.5	3.7
2008	4.5	22.0	94.5	42.4	10.2	9.3
2009	1.9	24.4	111.4	38.1	3.9	1.5
2010	0	2.5	108.1	40.6	9.3	3.1
2011	0	19.3	105.5	64.4	4.0	4.6
2012	0	16.0	90.4	54.0	12.7	4.3
2013	4.7	13.2	81.5	43.8	9.7	1.5
2014	0	12.6	102.1	40.4	20.5	0
2015	0	13.5	70.0	34.4	10.8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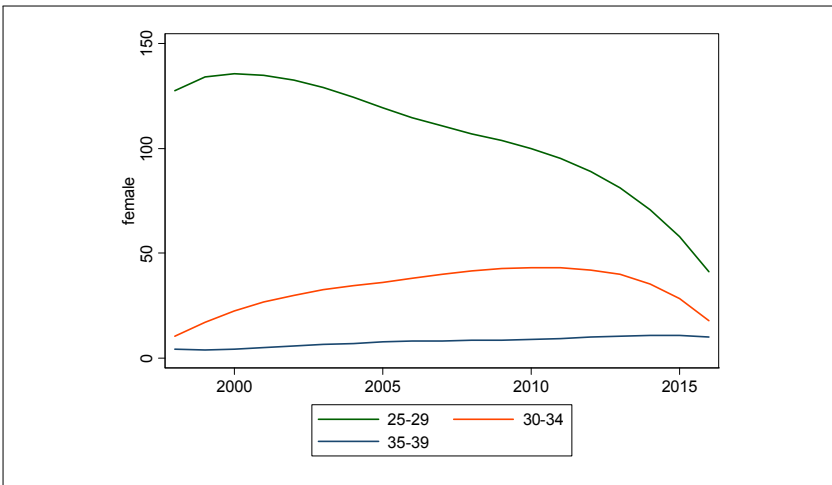


[그림 4-4]는 아내 연령별 조혼인율에 대한 lowess smoothing 라인그래프를 보여준다. 25~29세 그룹의 혼인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30~34세 그룹은 2013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교적 만혼에 해당하는 35~39세 그룹의 조혼인율 역시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그림 4-3] 남편 연령별 조혼인율



[그림 4-4] 아내 연령별 조혼인율



## 제4절 혼인율 비교 :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KOSIS에서 연령별 인구나 연령별 혼인건수 시계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혼인건수는 인구동향조사(Population Dynamics Survey : PDS) 원자료에서 생성된 2차 자료이다. KOSIS에서는 연도별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내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KOSIS에서 제공하는 조혼인율은 전체 인구 대비 혼인건수이다. 본 장의 제2절에서 계산한 KLIPS 조혼인율과 매칭하기 위해서는 인

〈표 4-7〉 조혼인율 비교 :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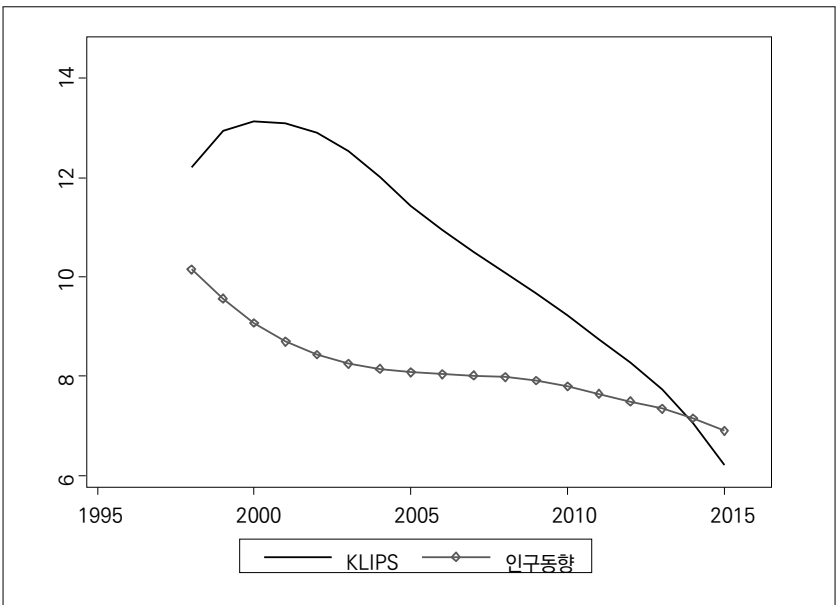
혼인연도	노동패널(KLIPS) 조혼인율	인구동향조사(PDS) 조혼인율
1998	10.05	10.16
1999	13.79	9.69
2000	16.68	8.83
2001	11.67	8.38
2002	13.58	7.96
2003	11.87	7.83
2004	12.26	7.92
2005	10.62	7.99
2006	11.90	8.31
2007	9.19	8.53
2008	9.80	8.03
2009	8.90	7.50
2010	8.78	7.81
2011	9.56	7.79
2012	8.50	7.67
2013	7.70	7.50
2014	6.98	7.03
2015	5.70	6.91

구동향조사(PDS) 조혼인율 역시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로 다시 계산하여 비교해야 한다.

<표 4-7>에서 알 수 있듯이 KLPIS 조혼인율은 인구동향조사 조혼인율에 비해 대부분 큰 값으로 추정된다. 1999~2006년 동안 KLIPS 조혼인율은 대부분 11건을 초과한다. 그러나 동 기간 인구동향조사에서 조혼인율은 7~9건 범위이다. 2009년 이후 KLIPS 조혼인율은 대개 8~9건 사이인 데 비해 인구동향조사에서는 8건 미만이다. 다만 2015년에는 KLIPS에서의 조혼인율(5.7건)이 인구동향조사(6.91건)에 비해 더 낮게 추정된다. 그 이유는 혼인시점과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해 2015년 KLIPS 혼인사건수가 과소추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5]에서는 KLIPS와 인구동향조사 조혼인율을 smoothing line 그래프를 통해 비교한다. 혼인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인구동향조사와 KLIPS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KLIPS에서 조혼인율이 모수에 비해 더 크게 추정된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그러한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조혼인율 비교 :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KLIPS에서 조혼인율이 과다추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노동패널에서는 기존 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인 경우 조사표본에 포함하게 된다. 분가 이유가 ‘혼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혼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혼인가구의 과대표집이 조혼인율 과다추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혼인과 혼인신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인구동향조사에서 결혼건수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된 혼인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그러나 노동패널에서는 행정적으로 신고된 혼인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혼인상태(사실혼 포함)를 묻고 있다. 따라서 노동패널에서 혼인상태를 응답한 비율이 인구동향조사에 비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표 4-8>과 <표 4-9>에서는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의 연령별 조혼인율을 비교한다. 먼저 <표 4-8>에서는 남편 연령별 조혼인율을 비교하고 <표 4-9>에서는 아내 연령별 조혼인율을 비교한다. 15~45세까지 모든 연령그룹을 제시하는 대신 혼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5~39세(남편)와 20~34세(아내) 그룹의 조혼인율만 제시한다. 남편의 경우에는 KLIPS에서 25~29세와 30~34세 조혼인율이 인구동향조사의 같은 연령대 조혼인율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LIPS의 해당 연령대 조혼인율은 모수(인구동향조사)를 과다추정한다. 35~39세 남편 연령의 조혼인율은 많은 경우 두 자료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한편, 아내 연령그룹 중 20~24세 그룹은 KLIPS와 인구동향조사에서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난다. 30~34세 연령그룹에서도 두 자료 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가장 혼인율이 높은 25~29세 그룹에서는 차이가 크다. KLIPS에서는 25~29세 그룹에서 1,000명당 혼인율이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100건을 넘지만 인구동향조사에서는 대부분 80건 미만이다.

조혼인율의 추세변화는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경우 25~29세 그룹은 지속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하고 35~39세 그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다. 아내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20~24세 연령그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30~34세 그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6]에서는 남편의 3개 연령그룹별 조혼인율을 라인그래프로 비

〈표 4-8〉 연령별 조혼인율 비교 : 남편

혼인연도	노동패널			인구동향조사		
	25~29세	30~34세	35~39세	25~29세	30~34세	35~39세
1998	91.6	47.2	10.3	82.5	39.3	11.1
1999	142.8	64.3	5.9	77.3	40.1	11.5
2000	145.2	104.4	9.7	70.6	38.9	11.1
2001	99.1	75.2	8.8	66.3	39.0	11.7
2002	99.1	79.8	24.0	62.7	39.8	11.7
2003	99.4	61.7	11.9	60.2	41.1	12.5
2004	73.3	80.3	22.5	56.8	43.9	13.9
2005	76.2	63.1	17.3	54.5	46.0	15.6
2006	111.3	64.4	15.1	56.6	51.0	17.4
2007	62.1	61.2	12.7	56.8	55.6	19.2
2008	66.2	59.2	31.2	51.8	54.5	19.7
2009	59.5	73.6	12.2	47.9	53.5	19.5
2010	66.0	63.2	18.1	49.6	58.5	21.6
2011	61.1	73.7	22.6	50.5	61.1	22.5
2012	38.9	72.1	26.7	48.1	63.4	23.4
2013	59.7	61.3	19.1	47.0	64.2	23.9
2014	55.2	54.5	16.9	42.7	61.0	24.1
2015	0	37.7	6.9	41.1	62.3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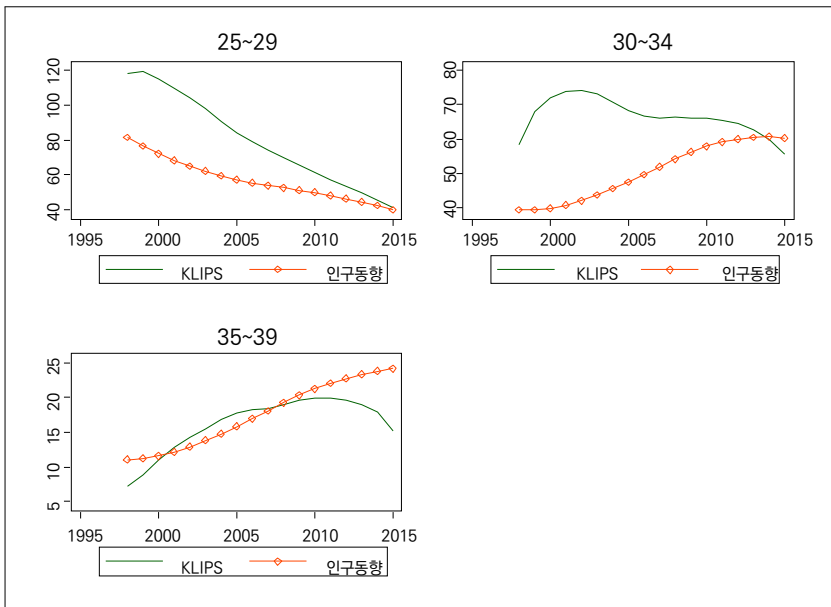
〈표 4-9〉 연령별 조혼인율 비교 : 아내

혼인연도	노동패널			인구동향조사		
	20~24세	25~29세	3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1998	46.3	101.2	9.6	60.2	78.2	15.7
1999	73.7	143.9	12.4	52.5	78.3	16.8
2000	64.9	178.2	31.0	44.7	74.8	17.3
2001	46.6	120.2	26.5	37.9	74.4	18.4
2002	46.2	149.4	38.6	33.0	73.8	19.4
2003	39.5	126.5	30.5	29.5	75.2	21.3
2004	23.0	124.7	42.9	27.5	76.3	23.8
2005	17.6	103.1	44.6	26.1	76.8	26.3
2006	22.8	133.5	29.6	28.0	81.7	29.7
2007	25.3	92.9	30.8	27.1	85.5	33.5
2008	22.0	94.5	40.9	24.1	79.0	35.7
2009	24.4	111.4	38.1	20.3	74.2	36.9
2010	2.6	108.1	40.6	21.4	79.1	42.0
2011	19.3	105.5	64.4	20.3	81.1	45.4
2012	16.0	90.4	54.0	18.5	80.2	49.9
2013	13.2	81.5	43.8	17.5	79.8	51.7
2014	12.6	102.1	40.4	16.0	73.6	50.3
2015	13.5	70.0	34.4	15.4	72.8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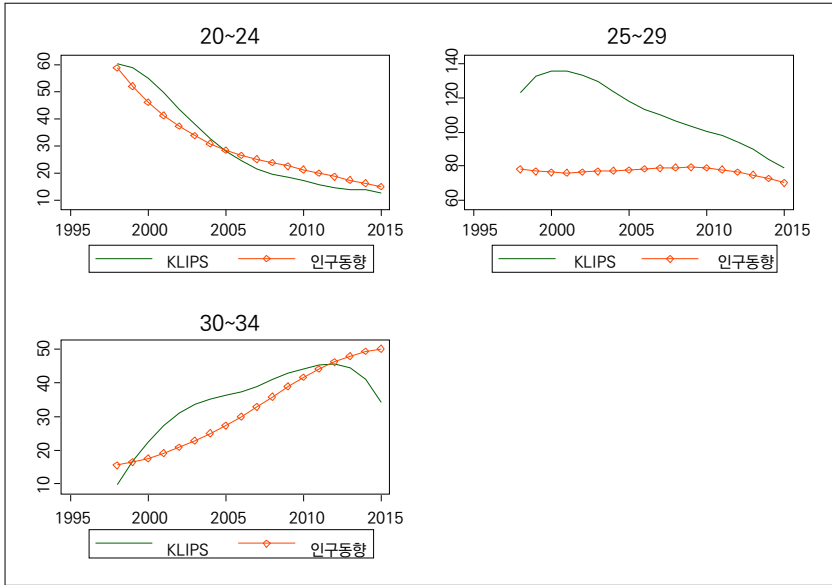
교한다. 25~29세 그룹의 경우 KLIPS와 인구동향조사에서 모두 하락하는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연도에서 KLIPS 조혼인율이 과다추정되고 있다. 30~34세 그룹에서는 두 데이터의 차이가 뚜렷하다. KLIPS에서는 연도별 조혼인율 차이가 크지 않고 다만 최근 시점(2015년)에서 하락하는 추세이나, 인구동향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한편, 35~39세 그룹에서는 두 데이터 모두 조혼인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동 연령그룹에서는 KLIPS 조혼인율 추정치가 모수인 인구동향조사와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림 4-7]은 아내의 3개 연령그룹별 조혼인율을 라인그래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20~24세 그룹의 경우에는 두 데이터에서 모두 지속적인 하락세가 분명하게 관찰되며, KLIPS 조혼인율 추정치는 모수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25~29세 그룹에서는 KLIPS의 조혼인율이 모수에 비해 과다추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0~34세 그룹에서는 KLIPS와 인구동향조사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두 데이터에서 조혼인율은 큰 차이가 없다.

[그림 4-6] 남편 연령별 조혼인율 :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그림 4-7] 아내 연령별 조혼인율 :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



### 제5절 혼인율 비교 : 한국복지패널

본 절에서는 노동패널과 유사한 표본조사인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연도별 혼인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노동패널과 인구동향조사의 조혼인율과 비교·분석한다. 복지패널에서 혼인사건을 정의하는 것은 노동패널과 차이점이 있다. KLIPS에서는 가구원(개인) 레벨 데이터에서 개인의 혼인 상태 및 혼인상태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패널에서는 가구에 속해 있는 가구원 혼인상태만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즉, 복지패널에는 혼인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변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 기간 동안 미혼에서 기혼으로 혼인상태가 바뀌는 케이스를 연구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혼인시점(연도)을 물어보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혼인연도를 확인하는 것은 복지패널에서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본 소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2006년)~12차(2017년)까지 12개년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매년도 혼인사건 수를 계산하고자 한다. <표 4-10>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 상세히 정의한다.

<표 4-10>의 정의에 따라 복지패널에서 연도별 혼인건수를 계산한 결과가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복지패널 조사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06년 혼인건수는 본 연구에서는 정의할 수 없다. 복지패널에서는 혼인연도를 따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조사시점(2006년)에 이미 혼인상태로 시작한 가구의 혼인연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패널과 비교를 위해 2007~15년까지만 혼인건수를 계산한다. 복지패널에서 2007년 혼인사건은 94건을 찾을 수 있었다. 그중 아내와 남편을 매칭할 수 있는 혼인사건은 49건이고 남편만 찾을 수 있는 혼인사건은 19건, 아내만 찾을 수 있는 혼인사건은 26건이다. 2008년과 2009년 혼인사건은 각각 150건과 129건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다시 88건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 <표 4-10> 혼인사건과 혼인연도 정의 : 복지패널

- 
- 조건 1) 1차(2006년) 조사시점에서 혼인상태가 ‘미혼’이라고 응답한 가구를만 선택한다.
- 조건 2) 조건 1을 만족하는 개인 중에서 1차 이후 조사에서 혼인상태가 ‘기혼’으로 바뀐 최초 시점(연도)을 찾는다. 그 시점을 혼인연도로 간주한다.  
따라서 조사기간 내내 ‘미혼’이라고 응답한 개인은 혼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한다.
- 조건 3) 남편과 아내의 혼인사건이 중복되지 않게 1건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은 가구에 속하면 매칭시킨다.
- 조건 4) 매칭된 혼인사건뿐 아니라 남편 또는 아내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에도 혼인사건으로 남겨둔다.
- 조건 5) 매칭된 혼인사건 중에서 남편과 아내의 결혼연도가 서로 다르게 응답한 경우에는 둘 중 더 과거시점을 결혼연도로 간주한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결혼시점 차이가  $\pm 3$ 년을 초과하면 혼인사건에서 제외한다.
- 조건 6) 데이터를 완성한 후 남편 또는 아내의 혼인시점 나이가 45세 이상이면 삭제한다. 이런 경우는 초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표 4-11〉 연도별 혼인건수 : 복지패널

혼인연도	혼인건수	매칭된 혼인 건수	남편만 있는 혼인건수	아내만 있는 혼인건수
2007	94	49	19	26
2008	150	80	33	37
2009	129	64	33	32
2010	90	66	13	11
2011	80	34	23	23
2012	72	21	24	27
2013	64	32	16	16
2014	67	39	18	10
2015	88	57	9	22

복지패널에서 2007~15년 인구 1,000명당 조혼인율을 계산하기 위해, 조사된 15세 이상 가구원 수를 분모로 사용한다. 복지패널에서는 패널이 탈(panel attrition)을 고려하여 7차(2012년) 조사에서 1,200가구를 신규 패널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신규 패널로 들어온 가구/가구원 중 이미 ‘결혼’이라고 응답한 가구원의 혼인연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규 패널에 속한 가구원은 본 연구의 조혼인율 분석에서 제외한다. 2006년 1차 조사부터 포함된 원 가구와 원 가구의 분가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혼인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표 4-12>에서 15세 이상 가구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표 4-12>에 따르면 2007년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혼인사건은 6.36건이다. 2008년에는 10.6건으로 증가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다시 반등하여 2015년에는 7.44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3>에서는 2007~15년 기간 동안 노동패널, 복지패널과 인구동향조사의 조혼인율을 비교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조혼인율은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노동패널 조혼인율이 복지패널 조혼인율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한다. 특히 2010~14년 복지패널 조혼인율은 모수인 인구동향조사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표 4-12〉 복지패널 조혼인율

혼인연도	혼인건수	가구원 수 (15세 이상)	조혼인율
2007	94	14,777	6.36
2008	150	14,141	10.6
2009	129	13,864	9.3
2010	90	13,412	6.71
2011	80	12,693	6.30
2012	72	12,664	5.68
2013	64	12,420	5.15
2014	67	12,014	5.57
2015	88	11,821	7.44

〈표 4-13〉 조혼인율 비교 : 노동패널, 복지패널, 인구동향조사

혼인연도	노동패널	복지패널	인구동향조사
2007	9.44	6.36	8.53
2008	10.22	10.60	8.03
2009	9.24	9.30	7.50
2010	8.92	6.71	7.81
2011	9.64	6.30	7.79
2012	8.71	5.68	7.67
2013	7.70	5.15	7.50
2014	7.44	5.57	7.03
2015	5.92	7.44	6.91

복지패널 조혼인율이 노동패널 조혼인율과 비교하여 과소추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KLIPS에서는 혼인상태 변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 변수를 이용하면 조사기간 동안 혼인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발생했다면 그 혼인연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가령 7차 시점에서 미혼이었던 가구원이 8차에서 패널 탈락했다가 9차에 패널에 다시 복귀했다고 가정하자. KLIPS에서는 가구원이 탈락했던 8차 시점에서 결혼했다라도 9차 조사에서 이 가구원의

혼인연도(8차 조사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패널에서는 혼인연도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패널탈락 후 다시 복귀한 가구원의 혼인연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가구원은 패널탈락 연도에 결혼했다라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복지패널에서는 노동패널에 비해 혼인사건이 과소추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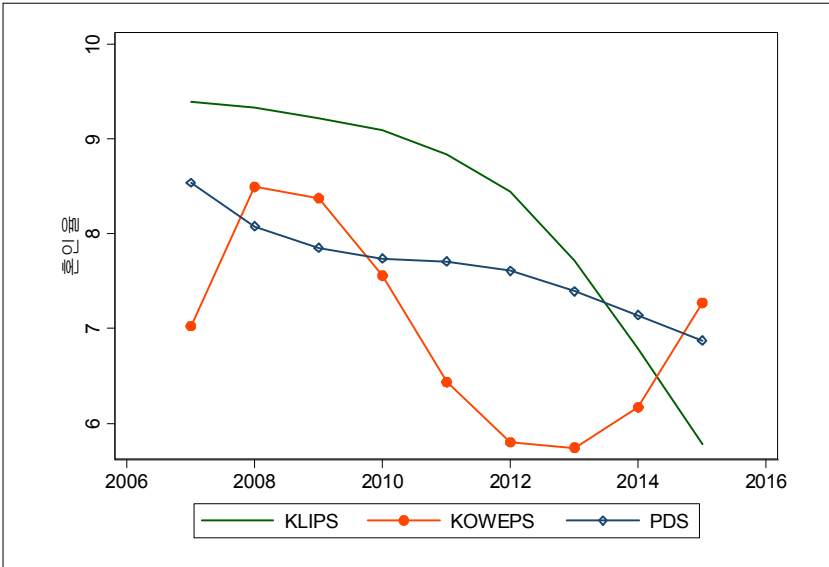
둘째, KLIPS에서는 혼인시점과 조사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앞서 설명하였다. 실제로 조사시점에 발생한 혼인사건이 추후 조사연도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패널에서는 조사시점에서 과거시점과 비교하여 혼인상태가 변화한 경우를 혼인사건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조사시점과 혼인사건 발생시점이 일치한다. 복지패널에서는 실제로 조사연도에 혼인이 발생했지만 조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혼인사건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패널에서 혼인사건이 과소추계될 수 있다.

셋째,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표본구성이 다르다는 점이 조혼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LIPS와 달리 복지패널에서는 저소득층을 과다추출(over-sampling)하여 표본을 구성한다.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구분하여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1차 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혼인사건 발생확률이 서로 다르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혼인사건 발생확률이 낮다면 복지패널에서 조혼인율이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8]에서는 3개 데이터의 조혼인율에 대한 smoothed line 그래프를 보여준다. 노동패널에서 추정된 조혼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복지패널에서 추정된 조혼인율은 모수인 인구동향조사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2010~14년). 모수인 인구동향조사(PDS) 조혼인율과 KLIPS 조혼인율의 추세는 분명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인율이 감소한다. 그러나 복지패널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라고 말할 수 없다. 2014~15년에는 오히려 혼인율이 반등한다. 이러한 추세는 모수인 인구동향조사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분석대상을 선정할 때 혼인사건 발생시점에서 남편과 아내 연령을 변수로 생성하면, 연령그룹별 조혼인율을 복지패널 데이터에서도 계산할

[그림 4-8] 조혼인율 비교 : 노동패널, 복지패널,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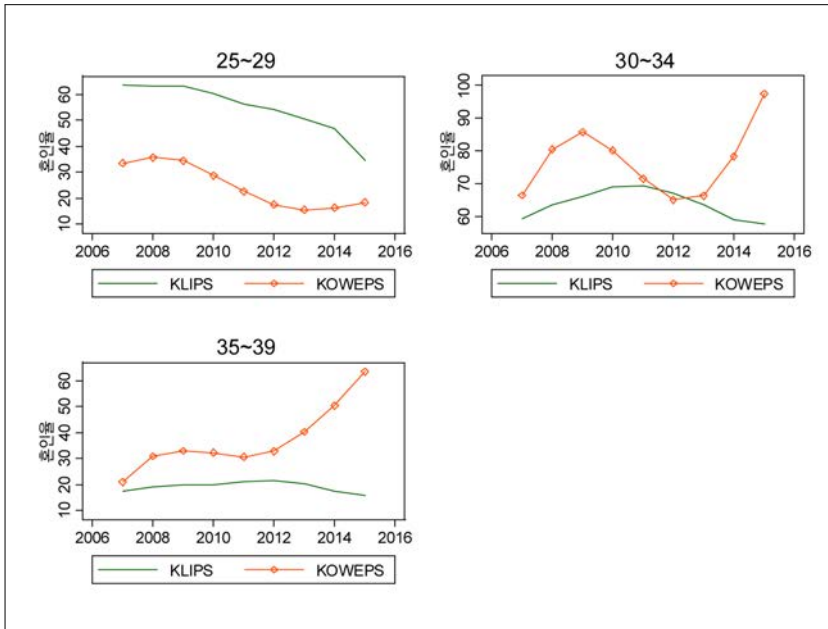
수 있다. 남편의 경우에는 25~29세, 30~34세, 35~39세 그룹의 조혼인율을, 아내의 경우에는 20~24세, 25~29세, 30~34세 그룹의 조혼인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남편의 경우 30~34세 연령그룹에서 조혼인율이 가장 높고, 비교적 만혼에 해당하는 35~39세 연령그룹 혼인율이 상승 경향을 보인다. 아내의 경우에는 20~24세 연령의 혼인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07~11년에는 25~29세 혼인율이 30~34세 혼인율보다 대체로 높지만 2012~15년에는 오히려 30~34세 혼인율이 가장 높은 값으로 추정된다.

[그림 4-9]에서는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연령별 조혼인율을 비교한다. 남편 25~29세 조혼인율은 KLIPS에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고 30~34세와 35~39세 그룹에서는 복지패널에서 조혼인율이 더 높다. 두 패널 모두에서 25~29세 그룹의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30~34세 그룹의 조혼인율은 두 데이터에서 차이가 있다. KLIPS에서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이지만 복지패널에서는 최근 시점(2012년 이후)에서 오히려 반등하는 추세이다. 35~39세 그룹의 KLIPS 조혼인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복지패널에서는 상승하는 추세이다.

〈표 4-14〉 남편과 아내 연령별 조혼인율 : 복지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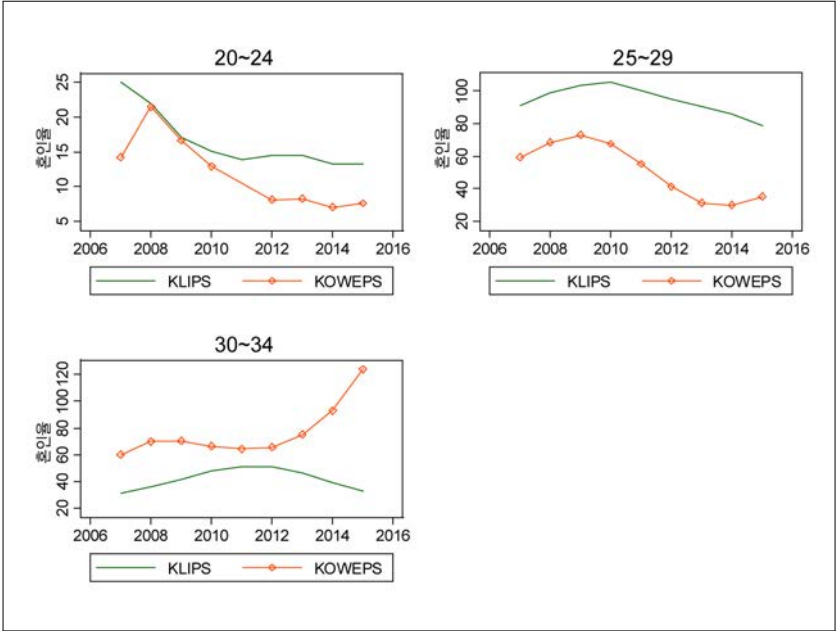
혼인연도	남편			아내		
	25~29세	30~34세	35~3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7	29.5	59.2	19.6	14.2	53.3	52.5
2008	45.7	100.0	36.0	24.3	84.1	90.7
2009	30.3	81.0	42.1	24.4	65.6	66.9
2010	36.4	95.3	27.0	4.91	82.6	67.6
2011	17.4	64.5	26.7	0	61.3	52.9
2012	14.3	53.8	32.3	9.3	29.4	71.2
2013	14.4	65.6	34.3	9.63	22.4	67.8
2014	15.2	66.6	51.9	4.86	29.7	74.2
2015	18.6	101.4	62.6	7.61	35.1	129.6

(그림 4-9) 남편 연령별 조혼인율 비교 :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그림 4-10]에서는 아내 연령별 조혼인율을 비교한다. 20~24세와 25~29세 그룹에서는 KLIPS 조혼인율이 더 높게 추정된다. 그러나 30~34세

[그림 4-10] 아내 연령별 조혼인율 비교 :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그룹에서는 복지패널에서 조혼인율이 더 높게 추정된다. 20대 여성의 조혼인율은 두 데이터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30~34세 여성의 조혼인율은 KLIPS에서는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지만 복지패널에서는 오히려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미시 서베이 데이터에서 혼인사건을 정의하고 혼인시점을 새로운 변수로 생성한 후 혼인율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KLIPS에서는 가구원의 혼인상태뿐 아니라 혼인상태 변화를 따로 질문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히 조사시점에서

혼인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혼인사건은 출산사건과 더불어 저출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분석하거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남녀의 인적자본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선행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KLIPS에서 조혼인율과 남편/아내의 연령그룹별 조혼인율을 추정한 후 인구동향조사의 조혼인율과 비교하였다. 또한 유사한 패널서베이인 재정패널에서 추정한 조혼인율과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혼인율 모수에 해당하는 인구동향조사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KLIPS 조혼인율은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과다추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격차는 2009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최근으로 올수록 두 자료에서 구한 조혼인율은 큰 차이가 없다.

둘째, 남편연령별 조혼인율의 경우, KLIPS와 인구동향조사 추정치에서 그룹별 차이가 발견된다. 25~29세 그룹에서는 두 자료에서 조혼인율이 시간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가 분명하지만, 30~34세 그룹을 비교하면 KLIPS에서는 연도별 변화가 크게 없지만 인구동향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35~39세 그룹에서는 두 자료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조혼인율이 관찰된다.

셋째, 아내연령별 조혼인율의 경우에도, KLIPS와 인구동향조사에서 그룹별 차이가 나타난다. 20~24세 그룹의 경우 두 자료에서 공히 지속적으로 혼인율이 하락하며 두 자료의 혼인율 수치는 거의 차이가 없다. 25~29세 그룹에서는 KLIPS 조혼인율이 인구동향조사에 비해 과다 추정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30~34세 그룹에서는 두 자료에서 모두 조혼인율이 상승하는 추세적 결과를 보여준다. KLIPS에서 추정된 아내의 연령별 조혼인율은 대체로 인구동향조사 추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남편 연령그룹 결과와 차이가 있다.

넷째, 복지패널에서 추정한 조혼인율과 KLIPS 결과를 비교하면, 2010년 이후에는 KLIPS 조혼인율이 복지패널보다 더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0~14년 기간 복지패널 조혼인율은 모수인 인구동향조사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복지패널에서 혼인율을 추정하는 것은 편

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KLIPS에서는 설문항목에서 혼인사건을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 복지패널에서는 혼인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없다. 따라서 혼인사건을 이용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분석에서 KLIPS가 복지패널보다 적절한 마이크로 서베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KLIPS 설문구조상 혼인상태 변화는 각 가구원에게 묻고 있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응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응답하는 경우 혼인사건이 중복되어 계산될 여지가 있다. 특히 패널 탈락과 복귀가 가능한 패널서베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혼인상태 변화는 (가구원 레벨이 아닌) 가구 레벨에서 응답을 얻어야만 일관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중복계산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혼인사건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구 내에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매칭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남편에게 아내가 같은 가구에 속해 있는 경우 아내 개인 id를 변수로 포함하고,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이 있는 경우 남편 개인 id를 변수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가구 내 부부 의사결정(노동공급, 보육 및 임금 등)이 결합적으로(jointly)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서로 매칭할 수 있도록 KLIPS 구조를 개선한다면 관련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강종구(201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Bank of Korea Working Paper 2017-1.
- 고승연(2013),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와 제고 방안』, 서울: 현대경  
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관계기관 합동(2017.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보도자료.
- 김우영·김응규(200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  
석」, 『중소기업연구』 23(3), pp.29~54.
- 김우영·김현정(201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16(1),  
pp.39~78.
- 성현구·박범기(2018),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 『BOK 이슈  
노트』 제2018-2호.
- 송헌재·신우리(2017), 「가계부채와 기혼여성 노동공급의 관계 분석」, 『노  
동경제논집』 40(1), pp.37~68.
- 오유진(2006), 「자영업주의 직업만족과 생활만족」,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유경원·김기호(2016),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 분석: 경기도 지역을 중  
심으로」, BOK 연구자료.
- 유경원·변혜원(2012), 「가계부채의 확대와 대출제약」, 『경제분석』 18(1),  
pp.61~83.
- 이병재·김태완(2018), 「경제사회적 특성이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  
료집』, pp.3~18.
- 이상립(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pp.39  
~7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7. 5),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보도자료.

\_\_\_\_\_(2018. 7. 6), 「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 보도자료.

최필선·민인식(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pp.57~8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Benz, M. and B. Frey(2008), “The Value of Doing What You Like: Evidence from the Self-employed in 23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68(3-4), pp.445~455.

Lange, T.(2012), “Job Satisfaction and Self-employment: Autonomy or Personality?” *Small Business Economics* 38(2), pp.165~177.

Zwan, P., J., Hessels, and C. Rietveld(2015), “The Pleasures and Pains of Self-Employment: A Panel Data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Life, Work, and Leisure,”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15-099/VII.

## [부록] 제1장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 비교 표

〈부표 1-1〉 2005년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전반적 생활 만족도 비교

특성	세부구분	노동패널		복지패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학력	중졸 이하	3.02	3.05	2.88	2.98
	고졸	3.17	3.22	3.23	3.21
	전문대졸	3.37	3.3	3.38	3.26
	대졸 이상	3.54	3.42	3.59	3.64
연령	15~29세	3.29	3.33	3.43	3.45
	30대	3.36	3.29	3.4	3.37
	40대	3.2	3.16	3.14	3.23
	50대	3.2	3.19	3.16	3.2
	60대 이상	3.13	3.21	2.94	3.1
소득분위	100만 원 미만	3.07	3.04	2.99	3.04
	100만~200만 원 미만	3.22	3.1	3.23	3.19
	200만~300만 원 미만	3.49	3.3	3.55	3.33
	300만~400만 원 미만	3.64	3.43	3.64	3.47
	400만~500만 원 미만	3.7	3.46	3.7	3.49
	500만 원 이상	3.8	3.7	3.73	3.62
가구원수	1명	3.16	2.93	3.08	2.91
	2명	3.33	3.2	3.24	3.27
	3명	3.25	3.24	3.24	3.22
	4명	3.29	3.22	3.35	3.3
	5명 이상	3.25	3.27	3.24	3.2
성별	남성	3.29	3.21	3.31	3.27
	여성	3.24	3.21	3.2	3.15
혼인여부	미혼	3.23	3.15	3.34	3.33
	기혼	3.29	3.22	3.24	3.23
직종	고위관리자	3.63	3.52	3.54	3.11
	전문가	3.48	3.39	3.62	3.58
	사무직	3.4	3.35	3.55	3.6
	서비스직	3.12	3.13	3.05	3.14
	판매직	3.25	3.18	3.34	3.18
	기능직	3.14	3.2	3.17	3.24
	기계조립	3.18	3.08	3.23	3.28
	단순노무	2.99	3.05	2.9	3
근속연수	1년 이하	3.12	3.24	3.06	3.2
	1~5년 이하	3.22	3.17	3.26	3.26
	5~10년 이하	3.34	3.22	3.34	3.24
	10~15년 이하	3.44	3.31	3.46	3.29
	15년 초과	3.55	3.34	3.44	3.2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3.25	3.26	3.16	3.19
	40~45시간 이하	3.37	3.39	3.49	3.26
	45~50시간 이하	3.33	3.25	3.39	3.35
	50~55시간 이하	3.22	3.24	3.3	3.39
	55시간 초과	3.19	3.16	3.19	3.22

〈부표 1-2〉 2010년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전반적 생활 만족도 비교

특성	세부구분	노동패널		복지패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학력	중졸 이하	3.22	3.21	3.3	3.46
	고졸	3.33	3.35	3.52	3.56
	전문대졸	3.52	3.5	3.65	3.54
	대졸 이상	3.61	3.58	3.81	3.73
연령	15~29세	3.48	3.7	3.69	3.61
	30대	3.51	3.52	3.68	3.67
	40대	3.38	3.39	3.54	3.57
	50대	3.36	3.29	3.43	3.52
	60대 이상	3.26	3.29	3.41	3.52
소득분위	100만 원 미만	3.23	3.16	3.41	3.47
	100만~200만 원 미만	3.35	3.29	3.48	3.53
	200만~300만 원 미만	3.51	3.39	3.66	3.48
	300만~400만 원 미만	3.67	3.52	3.77	3.63
	400만~500만 원 미만	3.73	3.63	3.85	3.74
	500만 원 이상	3.73	3.64	3.96	3.74
가구원수	1명	3.3	3.13	3.55	3.49
	2명	3.47	3.3	3.52	3.54
	3명	3.42	3.38	3.57	3.54
	4명	3.46	3.44	3.59	3.58
	5명 이상	3.38	3.43	3.59	3.61
성별	남성	3.44	3.38	3.58	3.55
	여성	3.4	3.36	3.56	3.58
혼인여부	미혼	3.39	3.3	3.62	3.58
	기혼	3.43	3.38	3.55	3.56
직종	고위관리자	3.68	3.72	3.71	3.69
	전문가	3.59	3.51	3.8	3.76
	사무직	3.59	3.49	3.78	3.73
	서비스직	3.29	3.26	3.48	3.5
	판매직	3.39	3.4	3.57	3.49
	기능직	3.27	3.34	3.47	3.56
	기계조립	3.39	3.34	3.52	3.52
	단순노무	3.2	3.26	3.35	3.52
근속연수	1년 이하	3.36	3.45	3.47	3.46
	1~5년 이하	3.38	3.36	3.56	3.63
	5~10년 이하	3.45	3.39	3.59	3.56
	10~15년 이하	3.54	3.35	3.66	3.6
	15년 초과	3.56	3.4	3.71	3.5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3.41	3.42	3.57	3.6
	40~45시간 이하	3.54	3.41	3.68	3.55
	45~50시간 이하	3.45	3.42	3.6	3.62
	50~55시간 이하	3.45	3.33	3.53	3.64
	55시간 초과	3.33	3.33	3.46	3.49

〈부표 1-3〉 2016년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전반적 생활 만족도 비교

특성	세부구분	노동패널		복지패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학력	중졸 이하	3.27	3.32	3.49	3.47
	고졸	3.4	3.45	3.62	3.66
	전문대졸	3.53	3.51	3.72	3.59
	대졸 이상	3.66	3.6	3.84	3.77
연령	15~29세	3.46	3.69	3.7	3.83
	30대	3.59	3.55	3.76	3.82
	40대	3.5	3.47	3.72	3.68
	50대	3.42	3.44	3.6	3.53
	60대 이상	3.4	3.43	3.58	3.58
소득분위	100만 원 미만	3.32	3.33	3.54	3.51
	100만~200만 원 미만	3.35	3.34	3.58	3.54
	200만~300만 원 미만	3.5	3.41	3.68	3.59
	300만~400만 원 미만	3.66	3.51	3.77	3.69
	400만~500만 원 미만	3.76	3.61	3.87	3.71
	500만 원 이상	3.84	3.71	3.98	3.79
가구원수	1명	3.31	3.24	3.55	3.42
	2명	3.48	3.45	3.67	3.61
	3명	3.51	3.48	3.67	3.67
	4명	3.54	3.5	3.71	3.64
	5명 이상	3.5	3.55	3.7	3.66
성별	남성	3.51	3.47	3.7	3.63
	여성	3.47	3.45	3.64	3.61
혼인여부	미혼	3.41	3.37	3.62	3.63
	기혼	3.51	3.47	3.69	3.62
직종	고위관리자	3.68	3.78	3.83	3.62
	전문가	3.66	3.6	3.81	3.8
	사무직	3.62	3.72	3.82	3.7
	서비스직	3.36	3.38	3.66	3.51
	판매직	3.41	3.46	3.63	3.58
	기능직	3.4	3.43	3.59	3.72
	기계조립	3.42	3.49	3.66	3.6
	단순노무	3.29	3.1	3.51	3.63
근속연수	1년 이하	3.38	3.36	3.6	3.64
	1~5년 이하	3.43	3.47	3.63	3.62
	5~10년 이하	3.51	3.46	3.67	3.6
	10~15년 이하	3.58	3.45	3.79	3.65
	15년 초과	3.63	3.51	3.86	3.62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3.51	3.51	3.7	3.65
	40~45시간 이하	3.56	3.56	3.71	3.65
	45~50시간 이하	3.48	3.45	3.67	3.66
	50~55시간 이하	3.48	3.58	3.62	3.68
	55시간 초과	3.36	3.41	3.52	3.54



◆ 執筆陣

- 이경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문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호(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민인식(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동패널자료 연구(Ⅳ) :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         |  |
|---------|--|
| ▪ 발행연월일 | 2018년 12월 24일 인쇄<br>2018년 12월 28일 발행   |
| ▪ 발행인   | 배규식  |
| ▪ 발행처   | <b>한국노동연구원</b><br>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br>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br>☎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록번호  | 제13-155호   |

ISBN 979-11-260-0237-5

정가 6,000원